2020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CONTENTS

Ⅰ 제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 1 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9

제 2 절 북한체제의 특징 12

1.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 14
2.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 16
3.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 19

제 3 절 북한체제의 현황 21

Ⅱ 제2장 북한 정치

제 1 절 정치체제 25

제 2 절 통치이념 31

1. 주체사상 32
2. 선군사상 37
3. '김일성-김정일주의' 40

제 3 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43

1. 권력구조 43
2. 노동당 46
3. 중앙 국가기관 61

제 4 절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70

1. 김정은 체제의 형성 70
2.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72

Ⅲ 제3장 북한 외교

제 1 절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77

1. 북한 외교이념과 정책 77
2. 북한 외교정책 결정구조 79

제 2 절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81

1. 김일성 시기 북한 대외전략 81
2. 김정일 시기 북한 대외전략 86

제 3 절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외관계 90

1.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91
2. 북한의 대외관계 93

Ⅳ 제4장 북한 군사

제 1 절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117

제 2 절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120

1. 김일성 시기 120
2. 김정일 시기 122
3. 김정은 시기 124

제 3 절 지휘체계와 군사력의 구성 및 특징 128

1. 지휘체계 128
2. 군사력 구성 132
3. 복무 및 계급구조 139
4. 북한 군사력의 특징 144

V 제5장 북한 경제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정책 기조**	**154**
	1. 경제체제의 특징	154
	2. 경제정책의 기조	157
제2절	**거시 및 부문별 현황**	**161**
	1. 거시적 현황	161
	2. 부문별 현황	168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182**
	1. 시장에 대한 정책	182
	2.대외 개방정책	191

VI 제6장 북한 사회

제 1 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199**
	1. 북한 사회의 특징	200
	2. 북한 사회의 변화	203
제 2 절	**주민생활**	**209**
	1. 조직생활	210
	2. 의식주	212
	3. 여가와 명절	217
	4. 보건·복지	221
제 3 절	**인권**	**225**

VII 제7장 북한 교육·문화

제 1 절	**교육정책과 제도**	**229**
	1. 교육정책의 목표	229
	2. 교육행정 체계	232
	3. 학제	234
제 2 절	**교육과정과 내용**	**242**
	1. 교육과정	242
	2. 교육내용	252
제 3 절	**문화예술정책과 실제**	**260**
	1. 문학예술정책	260
	2. 문화예술의 실제	264
제 4 절	**언론출판의 실제**	**296**
	1. 신문·잡지	297
	2. 방송	304

그림

[그림 2-1] 노동당기구 57
[그림 2-2] 정권기관 69
[그림 4-1]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129
[그림 4-2]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138
[그림 4-3] 북한군 계급장(견장) 143
[그림 4-4]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149
[그림 5-1]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183
[그림 5-2]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193
[그림 5-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196
[그림 7-1]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 232
[그림 7-2] 북한의 학제 236

표

[표 2-1] 주체사상체계의 형성 과정 36
[표 2-2] 노동당의 형성 과정 47
[표 2-3] 당대회 개최 현황 50
[표 2-4] 당대표자회 개최 현황 52
[표 3-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97
[표 3-2] 남북 수교 현황(2019년 9월 기준) 114
[표 4-1] 북한의 4대 군사노선 121
[표 4-2] 남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 장비 현황 133
[표 4-3] 남북한 군사력 비교(2018년 12월 기준) 134
[표 4-4] 남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 현황 136
[표 4-5] 남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136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139
[표 4-7] 북한 핵실험 현황 146
[표 4-8]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147
[표 5-1] 북한 국민총소득 추이 162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63
[표 5-3] 북한의 주요 산업성장률 추이 165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수력발전 미포함) 169
[표 5-5]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174
[표 5-6] 연도별 북한의 대중·전체 수출입 및 무역수지 178
[표 5-7]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의 비중 180
[표 6-1] 북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205
[표 6-2] 북한 주민의 의류 구입경로 213
[표 6-3] 북한 주민의 살림집 장만 경로 215
[표 6-4] 북한의 살림집 형태와 세대 식구 수(2008) 216
[표 6-5] 북한의 공휴일 220
[표 6-6] 북한 사회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 224
[표 7-1]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변화 234
[표 7-2] 북한의 특수교육 기관 240
[표 7-3]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243
[표 7-4]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245
[표 7-5]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247
[표 7-6]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률 292
[표 7-7] 문화유산 관련 북한 등재 유산 292

I

제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제2절 **북한체제의 특징**

제3절 북한체제의 현황

제1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남북한은 같은 역사와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하며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같은 민족이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 이후 남북한은 다른 정치적 실체로서, 체제 경쟁과 대립 속에 이질성과 적대감을 키워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해 왔다. 이런 상황은 민족적 시각에서는 동포이면서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남북한의 상호존재와 인식에 따른 민족분단이 야기한 모순이다.

특히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보다 다른 정치체제로서의 이질성이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장애가 되고 있는 분단의 탈피와

통일은 민족의 주요한 과제로서 남북한은 화해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남북한은 대립 속에서도 동포애에 기초한 통일을 민족사적 과제로 삼아 왔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경쟁과 적대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공존공영의 협력을 모색해 왔다.

북한은 민족의 관점에서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보의 관점에서는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인식은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만약 북한을 안보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적 측면의 북한 실체를 무시해도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한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북한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단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북한을 공존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모순적인 북한의 실체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공존공영의 상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와 이를 넘어 공존공영의 상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로서 상호 간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북한의 실상에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공식세계의 북한과 실제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있다.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보여 주는 북한의 모습 이외에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북한체제를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 평화,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2절

북한체제의 특징

북한의 정권과 체제 수립은 해방 이후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의 지도와 후원 아래 이루어졌다.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런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진전 과정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면서 소련의 사회주의와 다른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이 지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방식, 당 우위체제 등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수령중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등 북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어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의 틀에 견주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만의 고유한 것으로서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논쟁이 되어 왔다.[1]

북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당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당·국가체제[2]인 동시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절대권력 체제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런 북한체제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과 개혁 이전의 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만이 지닌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1. 대부분의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수령 일인의 절대 권력향유와 세습권력이 지속되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국가 성격을 신정체제. 유일지배체제, 유격대국가체제, 수령체제, 조합주의적 사회주의체제, 극장국가 등의 개념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신정체제:** 북한지도자의 절대 권력은 초인적인 것으로서, 북한은 전체주의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김일성 교'라는 특이한 유일신을 가진 종교국가로 규정
* **유일지배체제:** 북한은 권력이 최고지도자인 수령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하나의 틀로 편제되어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정치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
*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고 그들의 가족과 조선노동당. 빨치산파, 관료, 지식인·전문인, 사무원, 프롤레타리아트, 농민이 하향식으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유교적 조합주의의 성격이 강한 사회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
* **유격대국가 체제:** 지도자 김일성은 유일한 최고사령관이고 북한인민 전체가 유격대원이 되는 북한은 공산당, 국가, 사회단체가 일체화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
* **수령제:** 북한은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소련형의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은 수령제로 규정
* **극장국가:** 북한의 정치권력은 대중적 사회동원과 정치교양이라는 이름 아래 노래, 연극, 영화, 군중집회와 대규모 행사 등 다양한 선전양식의 보급을 통해 유지되는 일종의 극장국가로 규정

2. 당·국가체제는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권력을 장악한 1당이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여타의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으며 모든 정책도 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1.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지배체제이다. 당초 북한의 통치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그러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였고, 이러한 통치이념은 북한식 수령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이다.

수령 중심의 체제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고 있다.[3]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당의 '최고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의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한정된 칭호이다. 2016년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2019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이 1986년 제시한 것으로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논리이다.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371-373.

2.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

북한의 경제체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로 개념화하고 있다.[4]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에 해당된다. 개인 소유물은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되고 있다.[5]

북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이다. 즉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 경제지표(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들 지표 등) 이외 해당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6]

이와 같이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은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장·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방식을 도입하였고 주민들은 장마당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고, 2002년 7월 1일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도록 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7]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2004년에는 사실상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전담당제圃田擔當制'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

4. 「백과전서」(제3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530.
5. 북한의 개인 소유의 범위는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부분적으로 확대되어 개인 밭(소토지) 경작물, 장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재산수입 등을 개인 소유의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6.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방침이며, 북한은 1964년에 계획의 일원화를, 1965년에 계획의 세부화를 도입하였다.「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42.
7. '평균주의 타파'와 '번 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 하에서 시행된 조치로서,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격을 인상하여 농민시장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으며 이를 위해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으며 그 중에서 군인과 중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셋째,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넷째, 경제계획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일정 부분 이관하였다.

시한 후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8]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專賣制: 배급제 재도입) 도입 이후 개인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도 시장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이 조치들이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켜 그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면서, 북한은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활동 허용과 외환사용 묵인 등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합법적인 공식 경제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북한은 확대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인정하고 시장을 국가 관리하에 두기 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조치(2013)를 단행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2014)를,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2014) 등을 통해 경제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조치였다. 최근 북한은 2019년 개정 헌법에서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9]를 삭제하는 대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10]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북한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8.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3~4명으로 축소하여 포전(일정 규모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분배방식에 있어서도 '14년 5.30담화 이후 4:6제가 시행되어 농민들이 국가보다 많은 60%를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여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9.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 즉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려는 공업관리형태이다.

3.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

북한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구축된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로 특징지어진다.[11] 이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면으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임무와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이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구성원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혈육들

10.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2014년 5월 30일 당·국가·군대기관 책임일군(간부)들과 진행한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5.30담화) 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여 계획과 경영 권한을 기관과 공장, 협동 단체에 대폭 이관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되었다.(2장 제 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11.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390.

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과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구성원인 북한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 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정치학습과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각인시키고 있으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활동 등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기존의 출신 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느슨해지고 있다.

제3절

북한체제의 현황

수령체제와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북한체제의 특성은 북한을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와 시장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대외적 고립과 경제난 등 북한체제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전환과 중국, 베트남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이라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기 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노선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추구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2013)을 제시한 이후 핵 무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체제 공고화를 시도해왔으며 2017년 11월 29일 정부성명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신노선'의 완료와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북한은 2019년 4월 11~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지속을 선언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공식적 도입과 '실리보장' 등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공식화하고,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등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적 노선의 변화는 경제회생과 체제유지를 위해 대외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과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19년 현재 북한당국은 '자립경제발전의 기본 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장 아래 과학과 교육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지식경제 강국건설이라는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략은 지금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발전전략의 추진 의지와 성과 여부는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과 정도를 가늠할 것이다.

II

제2장
북한 정치

제1절 **정치체제**

제2절 **통치이념**

제3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제4절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제1절
정치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 항복 이후 북한체제가 38도선 이북 지역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소련군의 점령이 크게 작용했다.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의'를 거쳐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창설하였다.

1946년 2월 공산주의자들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47년 2월에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립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하였다. 이후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9월 2~10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최종 채택(9.8.)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9.9.)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전후 복구와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1]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쇼프(옛 표기는 흐루시쵸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 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 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이 되었다.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

1. '8월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주도자들이 도피하거나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공고히 하였다.

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화 또는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 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군중 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2], '대안의 사업체계'[3] 등이 있다.

1960년대 김일성은 1967년 5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북한에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를 구축하였고, 같은 해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대되었다. 이후 북한은 절대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유일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 중심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 유일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2.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은 1950년대 후반에 제시된 북한의 경제 분야의 기본적 지도방법이다. 상하급 기관과 위아래 사람이 서로 도와 당 노선을 관철하고, 현지 실정에 기초해 해결 방도를 세우고, 정치사업과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3.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경제관리 운영에 당적지도를 도입한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을 말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를 뜻한다.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유일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령제를 확립하였다.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후계 구도 속에서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부부장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선출하였다.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물론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된 것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로서 후계체제 공고화 및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위기관리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 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체제였다. 군사중심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2009년 헌법 개정 시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하였다.

한편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 등장하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 통제, 일심단결 및 결속유도 등의 권력 강화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권력 공고화에 주력하였다. 예컨대,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2011.12.29.)에서 김정은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12.30.)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를 선언하고 제4차 당 당대표자회(2012.4.11.)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렇게 성립된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조선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현재 제도화된 직위인 국무위원장이나 노동당 위원장을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에서는 당이 수령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20세기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전제했던 당의 지도적 역할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나고 있다.[4]

4.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수령의 무오류성에 대한 입장과는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제2절
통치이념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은,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과의 갈등 및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제시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및 1인 절대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종식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주체사상을 체제 생존을 위한 방어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

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기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기의 통치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주체사상

1) 성립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고,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 1967년경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계 확립 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 논리로서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소련에서 흐루쇼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노동당 내 1인 지배체제 비판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이념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적 대응이 주체사상으로 표출되었다.

2) 내용적 변화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체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영도

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을 통한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되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 들어서 김정일의 해석권 독점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는 등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중심적 이론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논리를 기본 원리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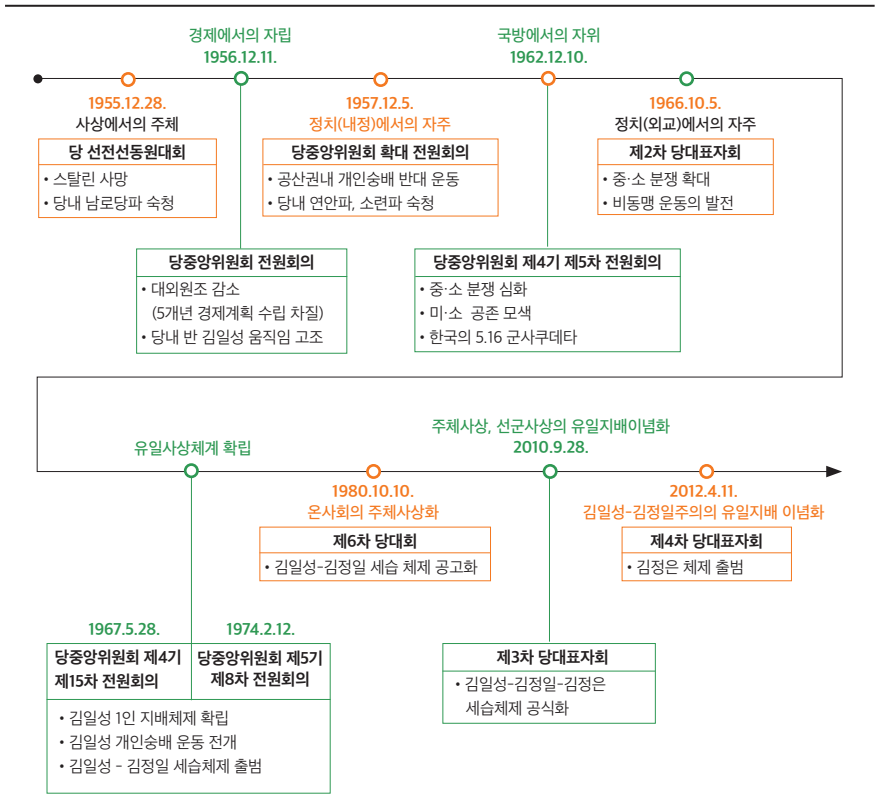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1994년의 김일성 사망과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체제 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의 이러한 위기는 그동안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워 왔던 자주·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수립과는 정반대되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은 주체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군을 전면에 내세운 위기관리체제를 뒷받침하는 선군정치가 통치논리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전면에 등장한 이후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과 2016년 5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19년에 들어와 신년사에서부터 주체사상의 기초위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5]를 지속적으로 제창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담론으로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5. 2019년 신년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핵심"으로 하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로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 부흥시대"에 걸맞는 "천하제일 강국"을 만들겠다는 담론이다. 「노동신문」, 2019.1.8.



[표 2-1] 주체사상체계의 형성 과정

3) 한계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념적 구호에 치중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시기 이후 실제로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도 낮아졌다.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위기로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 주체사상은 지도사상으로 위치를 갖고 있기는 했으나, 이후 북한은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의 구호들을 내세워 체제 안정화 및 생존 논리로 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 표방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가 수립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운 구호들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위기 극복 및 체제 생존을 위한 논리로 여러 가지 통치이념을 내세웠으나, 결국 이것들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준 이념적 기반으로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 하에서 인민대중은 진정한 주체가 되기보다는 수령의 지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2. 선군사상

북한은 2010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을 전면에 내세워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

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 초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북한의 핵심적 통치체제로 확립되었다. 체제 위기 극복 및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 기구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선군정치 실시 배경은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하된 당의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은 1990년대 중반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위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개인 숭배의 정치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일은 그 체제 수호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 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체제에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김정일 정권은 체제 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 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대외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된 북한의

불안이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 속에서 북한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 논리를 강화하는 내적 요인이었다. 남북한 체제 대결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북한이 군사 부문을 내세워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배경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김일성 시대의 통치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김일성의 빈자리를 채우고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대안적 논리가 필요했다. 이에 김정일은 체제 고수와 함께 주체사상의 수령유일체제 정당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을 제시했다.

선군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이었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또한 선군사

상은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방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체계를 심화시킨 규범적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선군사상이 대두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는 폐지되고, 전시기구였던 국방위원회가 행정기관화되어 국방위원회는 행정 분야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나라의 전반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의 위상과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 등을 고려하여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시 '공산주의'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반면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문화하고, 동시에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 삭제와 '주체사상-선군사상'의 유일지배 이념화는 결국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지배를 위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김일성-김정일주의'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라고 헌법 서문

에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4월과 2016년 5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에 앞서 발표한 '4.6 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라는 「노동신문」 보도(2014.4.24.)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도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북한 정권으로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상적·혁명적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북한은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치논리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담화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

자.'(2012.7.26.)를 통해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의 당 규약 개정과 함께 체제 결속과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0월 2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2015년 신년사에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5대 교양'[6]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6년 3월에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조국번영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7]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8],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당대회의 기본정신"이며 "영원한 지도사상"이라고 표현하였다.[9] 2017년에도 북한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최고 정화"[10]로 표현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 애국주의'를 체제 구현의 이념으로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6. '5대 교양'은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김일성 가계의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일컫는다.
7. 「노동신문」 2016.3.10.
8. 「노동신문」 2016.5.17.
9. 「노동신문」 2016.5.13.
10. 「노동신문」 2017.10.1.

제3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1. 권력구조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인 당-국가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첫째,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하나의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둘째, 국가와 사회에서 오직 하나의 이데올로기만을 인정한다. 셋째, 모든 정치과정과 언론매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장악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하부체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를 조직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11]은 공산당의 정책결정 과정 및 조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1980년 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처럼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시킴으로써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에서 김정은 중심의 국가체제와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및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2016년 들어 김정은 체제는 권력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꾀하였다. 헌법 개정(2016.6.29.)을 통해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였다. 2019년 8월 29일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당 규약 개정에 의해 기존의 노동당 제1비서에서 당의 최고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체제는 노동당과 군대라는 두 기둥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등 3개의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을 지탱해 온 핵심 권력구조는 역시 '당'이다. 이것은 노동당 규약에 북한의 원천적 기반인 북한군의 성격을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 북한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활동원칙 또는 그런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제도', '위로부터의 통일적인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창발성을 결합시키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1980)과 「사회주의헌법」(1998)에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2. 노동당

1) 위상과 성격

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혁명의 전위조직"이며,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수령의 당黨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당 규약 전문 개정 시에는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 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1945.9.11.	• 박헌영, 조선공산당 결성 발표
1945.10.13.	• 소련 군정,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창설
1945.12.17.~18.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
1945.12.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명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변경
1946.8.28.~30.	• 북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 합당으로 북조선노동당 출범
1946.11.	• 소련군정과 김일성·박헌영의 합의하 남조선노동당 창당
1949.6.24.	• 북조선노동당·남조선노동당 합당으로 노동당 창당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박헌영과 허가이 선출)

[표 2-2] 노동당의 형성 과정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한 당 규약은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움으로써[12] 정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도 지침으로 명기하고 있다. 더불어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

12.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당의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은 수령의 1인 지배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2) 조직과 기능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정무국(前 비서국) 산하의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고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한다.

당 규약에서의 유일지배 이념 강조, 당 위원장(前 총비서 및 제1비서)의 우월한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당대회와 당대표자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이다.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을 개정하며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총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35년간 당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 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

제1차	1945.10.10.[13]	• 당 창건 선포 • 당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채택
제2차	1948.3.27.~30.	•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 당 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3차	1956.4.23.~29.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 • 당 규약 개정(맑스 레닌주의를 당활동 최고 지침으로 제시)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4차	1961.9.11.~18.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 • 당 규약 개정(당 지도이념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추가)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5차	1970.11.2.~13.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 당 규약 개정(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6차	1980.10.10.~14.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 당 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제7차	2016.5.6.~9.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당 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 •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중앙검사위 위원 선거

[표 2-3] 당대회 개최 현황

록 했다.

제7차 당대회(2016.5.6.~9.)에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최고수위의 명칭을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편했으며, 당 규약에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명시

13. 2016년까지 북한은 1946년 8월에 열린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를 제1차 당대회로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1차 당대회 개최 연도를 1945년으로 수정하였다.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결성한 회의를 첫 당대회로 수정한 것이다.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2016.5.6.~9.)

하고 당원·당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 신설 및 김정은 부위원장 임명,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당대표자회 개최 결과로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비서국·당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2016년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당 총비서 대신에 노동당 위원장의 지위를 명기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1958.3.3.~6.	•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 •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 당 조직 문제
제2차	1966.10.5.~12.	•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 월남문제에 관한 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 당 조직 문제(당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 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2010.9.28.	•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 당 규약을 개정(당대표자회에도 당 규약 개정권한을 부여) • 당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2012.4.11.	•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 제1비서직을 신설. 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표 2-4] 당대표자회 개최 현황

당중앙위원회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및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공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을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現 정무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 3월 31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제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 부위원장 선거 및 정무국 조직,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7일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극복이 강조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인사가 시행되었다. 2018년 4월 20일에는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놓았는데, 기존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2019년 4월 10일에 개최된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2020년 '5개년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총동원을 지시하고 '당-국가 일체화' 방향에

서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제4차 전원회의를 가진 지 8개월 만인 12월 28~31일 북한은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북 제재 국면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자주권과 생존권 보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한 당 조직 인사, 내각을 포함한 국가기관 인사 등 총 77명의 인사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거의 운용되지 않았다. 정치국의 위상 변화는 후계구도와 맞물려 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또한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5명으로 새롭게 조직된 바 있다. 2018년 4월 9일 조선노동당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으며 북·미 대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예·결산 토의 승인, 4.10 당중앙위 제7기 전원회의 소집 결정 등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현재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과거 당내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권력기구는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 체제로 전락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당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 비서국은 수령제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 및 제4기 제1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0.12.)에서 신설되었으며,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비서국은 정무국으로 개편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 내부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이다. 정무국은 2019년 현재 김정은 당 위원장 외에 여러 명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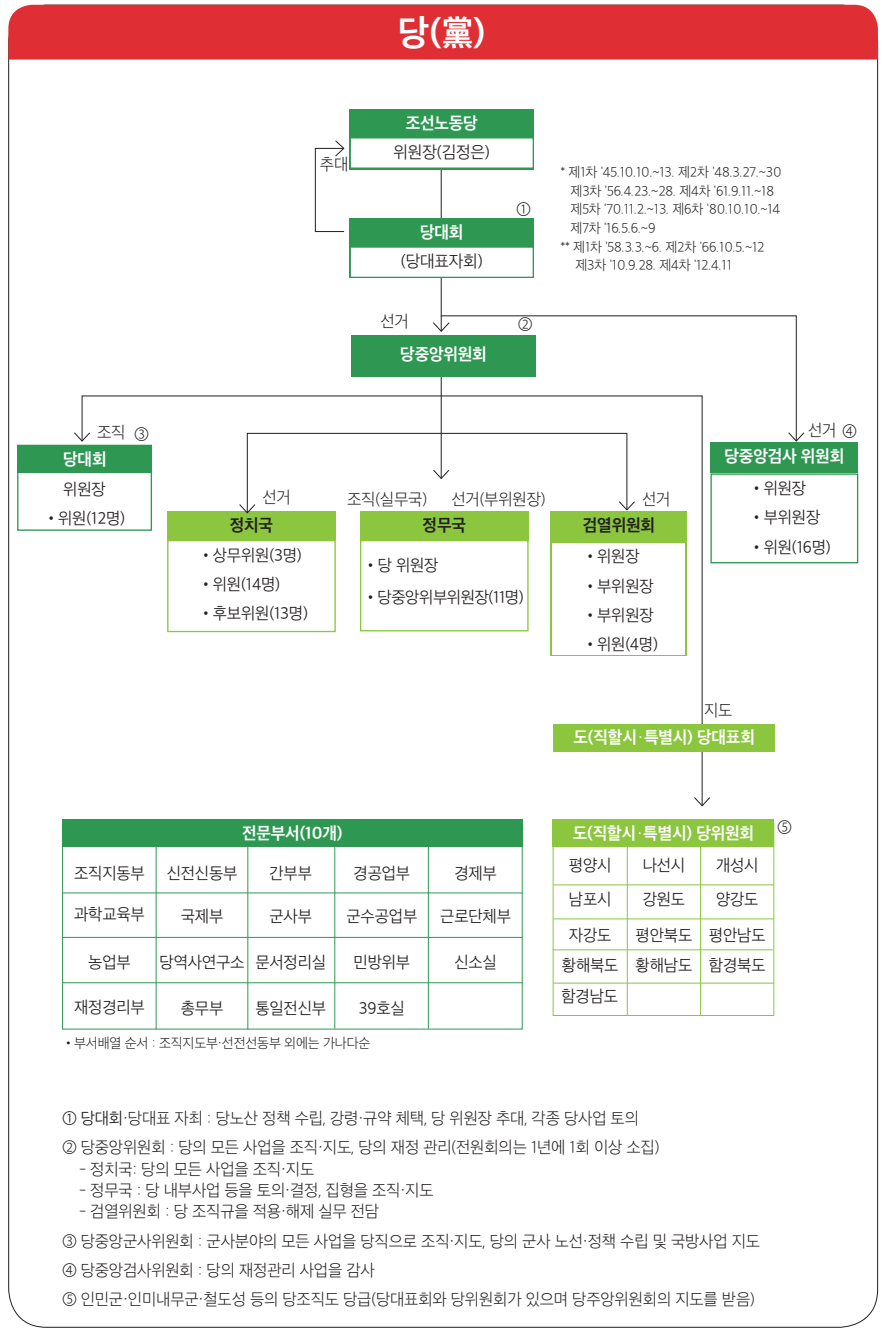
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 하는 '4대 군사노선' 수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적으로 도, 시, 군 단위에 각급 군사위원회를 두었다.[14]

2010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함께 군대의 지휘 및 군사정책과 관련된 단독 지시, 명령, 결정 등을 행사해 왔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부터는 상설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2010년 당규약 개정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는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8.20., 8.28.)에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북한 정치의

14.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196.

※「북한 권력기구도」, 통일부 2019. 12.



[그림 2-1] 노동당 기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5월 1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으며, 여기서는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략노선' 관철에 군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였다.

당 지방조직

노동당의 지방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위원회는 상하의 당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당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 당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 당위원회, 그리고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최하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위원회는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 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정, 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

당-정 관계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의 당내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이 국가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당-군 관계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을 통제하는 지위를 가진다. 2010년 9월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군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을 파견한다.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 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이 점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은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는 일반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총정치국 지도과, 행정과, 간부과를 통해 북한군을 지도·통제한다. 즉,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총정치국 지도과는 총정치국 조직부를 통해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의 당 생

활을 지도·통제한다. 그리고 군정을 담당하는 인민무력성과 군령을 담당하는 총참모부 관련 업무는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에서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당-군 관계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변화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1998년과 2009년의 개정 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민무력부(現 인민무력성)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면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북한군 총정치국의 조직이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에서 중대까지 군 지휘체계의 구조와 1:1로 대응하도록 전 군대에 조직되어 북한군 전체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에 의한 군 통제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외교·통일·경제 분야까지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군 중심의 과도기적 국가체제에서 '당-국가체제'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였다.

당-여타단체 관계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들도 지도하고 통제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조선천도교청우당도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前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즉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대남 관련 단체들도 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또한 외형상 국가기구지만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하에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앙 국가기관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의 중앙기관으로는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입법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1) 국무위원회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 지도기관으로, 국방 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고,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며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또한 중요 간부의 임명·해임, 외국과의 중요 조약 비준과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하며,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2019년 8월 개정된 헌법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는 선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표”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내용으로 그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해임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최고 수위(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로 추대하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 서문에 명시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부문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였다.


만수대의사당

2013년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3.31.)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헌법 개정, 법령 신설, 인사 개편 등 총 8개 의안을 토의·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제정 및 국가 우주개발국 신설, 박봉주 내각 총리 재기용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이행력을 제고시켰다. '금수산태양궁전법'도 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2014.4.9.) 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이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구조 안정화에 역점을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는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약 55%인 376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수위(국무위원장) 추대 등의 의제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최고재판소·검찰소를 중앙재판소·검찰소로 개칭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2017년 4월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989년에 신설하여 1998년에 폐지했던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켰다. 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하여 이전과 동일한 687명의 대의원을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약 50%인 340명 내외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9년 4월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기존의 헌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1개 조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71개조로 개정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분야 호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14기 제2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를 공고화 하기 위한 사회주의헌법 개정문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교체 등 조직문제를 결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비준·폐기,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

행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3) 내각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9년 기준 8위원회, 33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4) 사법기관

검찰기관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 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

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법 집행 기능과 더불어 체제 수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검찰은 중앙검찰소 산하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북한 검찰은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중앙검찰소가 담당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재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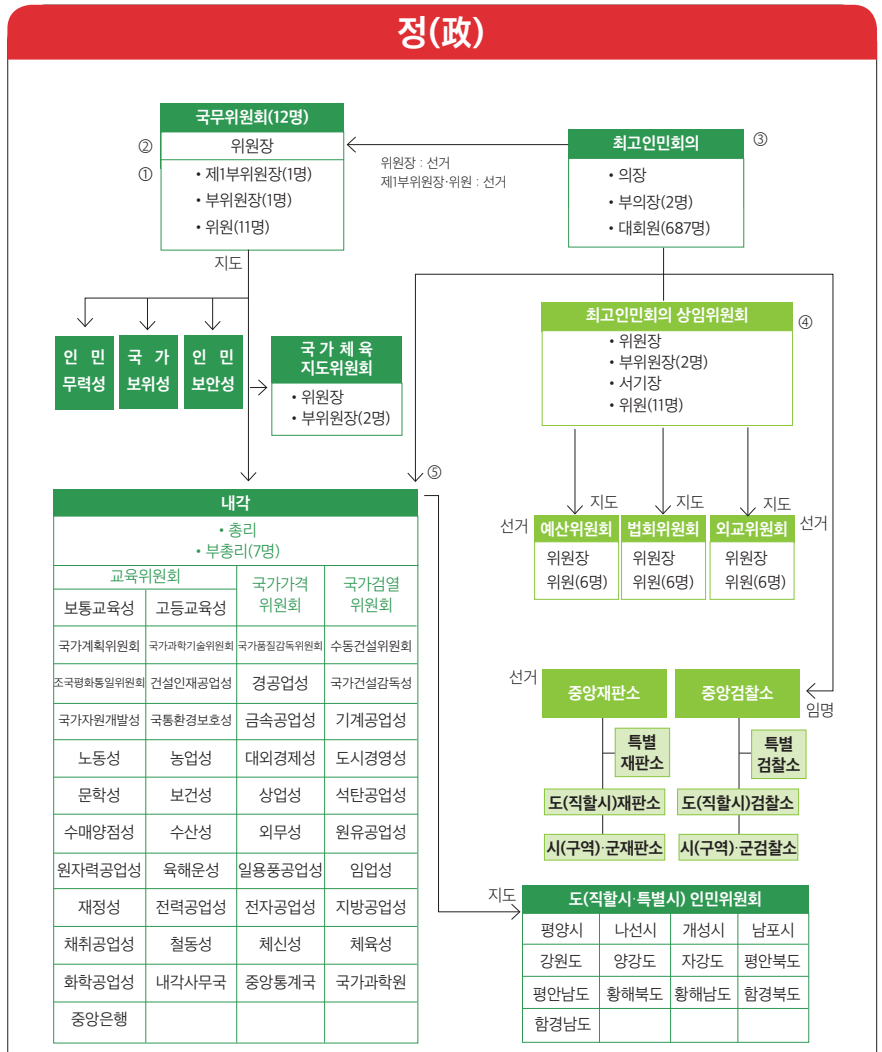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중앙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

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군·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이 판결된 후 및 즉시 집행된 바 있다.

※「북한 권력기구도」 통일부 2019. 12.



① 국무위원장 : 국가전반사업자료, 국가의 주요간부 일정, 외국 주제 외교대표의 일정 소환, 비상·전시 등 전쟁 선포, 전시에 국가위원회 조직지도

② 국무위원회 : 국방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 토의 결정

③ 최고인민회의 : 헌법 및 각종 법률을 저장·수정·보충, 국가의 대내외 정보의 기본원칙 수립

④ 최고인민회의 상업위원회 : 부분별 법인을 수정·보충, 각 기관들의 법 준수 어부에 대해 감독 (최고인민회의가 최종일때는 상임위가 내각을 조직하거나 감독)

⑤ 내각 : 국가정책 시행, 예산산성 등 수출업 법무 수행

[그림 2-2] 정권기관

제4절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1. 김정은 체제의 형성

김정은 체제는 후계과정을 거치면서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 독점, 군부 장악 등을 통해 공고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구축은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 '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체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2010.10.10.)

김정일 사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통제, 내부결속 유도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했다.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권력 세습을 완료하였다. 이후 김정은이 '공화국 원수'에 추대(2012.7.17.)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2.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권력구조는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동 당대표자회 및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하고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제도적, 이념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 기구(중앙위원회, 정치국, 정무국 및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엘리트들을 세대별로 구분해 본다면 항일 빨치산 세대(혁명 1세대), 천리마 세대(1950~60년대 천리마운동 세대), 3대혁명 세대(1970년대 중반 3대혁명 소조운동 주도), 고난의 행군 세대(1990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령인 혁명 1세대뿐 아니라 천리마 세대들까지 점차 권력의 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며, 김정은 체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50~60대의 3대혁명 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김정일 정권 말기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당 조직지도부 출신 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도와줄 50~60대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당·정·군 내 40~50대 간부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3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통한 군권 강화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구축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중 '김일성민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매체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이라는 표현도 명기하였으며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지도사상'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실질적으로 우선 작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모대회(2013.12.17.)를 통해 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한 최룡해의 연설이 주목할 만하다. 북한 지도부

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경쟁을 통한 1인 지배 체제 구축과 체제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5월 9일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6월 29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에 올랐다. 2017년에 김정은은 10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 들어와 당 회의 기구들을 통해 주요한 의사 결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당-국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9일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였고,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하였다. 5월 17일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전략 노선에 대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당-국가에 기반한 정책 실행을 강조하였다.

2018년 김정은은 당을 중심으로 정, 군 모든 부문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조를 안착화시켰다. 당 조직지도부 등에 대한 인사 배치를 새로이 단행하여 노동당 전체 조직을 통제하고 국가기관의 전 행정과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등 당 권력구조를 안정화시켰다.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등 군의 핵심 직위를 4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경제 분야 경력을 가진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9년 4월에는 당과 국가기구의 주요 인사교체를 단행하여 세대교체를 진행하였고 국무위원회의 제1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8월에는 해당 직제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국무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1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당의 영도력 강화를 강조하고 당과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재차 단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김정은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뿐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의 실행 차원에서도 한층 공고화된 것으로 보인다.

III

제3장
북한 외교

제1절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제2절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제3절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외관계**

제1절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1. 북한 외교이념과 정책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평화·친선이다.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당 규약,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대외정책에서 특히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도 제17조에 당 규약의 세 가지 가치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과 "내정 간섭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규정하였다.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은 김정은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및 중국의 개혁·개방 등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98년 조선노동당 대외정책 추진원칙을 수정하였다. 수정 핵심 내용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의 내용을 첨가하였다. 1998년에 수정한 이 대외정책 기본이념은 김정은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다.[1]

북한 외교정책의 실천방향은 기본 이념과 달리 실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최대경제지원국이었던 소련의 해체와 경제교류 파트너였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북한 경제는 위기에 처하였다. 체제경쟁을 벌였던 남한은 1990년대 초 냉전 시기 북한의 가장 강력한 지원국이었던 두 사회주의 강대국인 소련·중국과 외교정상화에 성공하였다. 탈냉전 초기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의 외교정책은 체제 안정과 경제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였다.

1. 2019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자주, 평화, 친선’ 이념에 따라 대외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9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북한 실리외교의 핵심은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 및 외교 다변화이다. 특히 북한에게 당면과제였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장 중요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시도해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및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실익 확보를 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2]

2. 북한 외교정책 결정구조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에게 ‘특사 파견권’과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부여하였다. 이어

2.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2006.10., 2009.5., 2013.2., 2016.1., 2016.9., 2017.9.)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으로부터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2019년 4월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위상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나아가 8월 또 한 차례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 주재 외국대표 임명 또는 소환권'을 종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장에게로 이관하였다. 이에 현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활동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부가 정당 간 외교를 담당하고, 의회 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가 책임을 맡고 있다. 북한은 1998년 헌법에서 삭제한 외교위원회를 2017년 제13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복원하였으며, 2019년 4월 헌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하였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북한의 사회주의 정당 간 외교관계는 줄어들고, 국가 간 외교방식을 지향하는 외교관계가 늘어났다. 그로 인해 정부 간 외교를 관장하는 외무성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외무성은 지역국·기능국 등을 포함한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하고,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을 맡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제2절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과정

1. 김일성 시기 북한 대외전략

북한은 냉전 시대 소련 및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전략은 다음과 같은 시기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사회주의 진영외교: 1948~1950년대 초

북한은 1950년대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진영외교의 기틀을 마련한다. 1948년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북한은 소련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북·중 관계

는 혈맹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북한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과 그 영향 하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12개국과 수교를 맺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 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대외경제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무상 원조를 얻는 데 주력하였다.

2) 비동맹국 외교노선: 1950년대 중반~1960년대

1950년대 초 중·소 사회주의 외교노선의 갈등은 비동맹국 외교를 촉발시켰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흐루쇼프 정권은 서방과의 평화공존정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사회주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3] 중국이 주도한 비동맹국 외교는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채택된 '반둥 10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4] 북한도 소련의 서방과의 평화공존정책에 반대하며, 중국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노선에 참여하였다.

3. 1956년 2월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쇼프는 스탈린을 비판하고 서방 진영과의 평화공존정책을 발표한다.
4. 「세계평화와 협력의 촉진에 대한 공동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반둥 10원칙의 핵심은 세계평화, 반식민주의,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 강화이다. 1950년대 말 독립한 신생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반둥 10원칙을 외교기조로 삼았고, 비동맹주의 지도원리가 되었다. 그 내용은 (1)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2) 주권과 영토 보전의 존중 (3) 인종 및 대소 국가의 평등 (4) 내정 불간섭 (5) 국제연합헌장에 입각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6) 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방위결정(집단적 군사동맹)에의 불참가 (7) 상호불침략 (8)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 (9) 상호협력의 촉진 (10)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등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 체제는 노동당 대회에서 비동맹 외교노선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외교 다변화 방침을 밝히고,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투쟁, 신생 독립 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비동맹국 외교노선의 채택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남북 간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히 1960년 제15차 유엔 총회에 남북한 동시 초청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비동맹 국가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해야 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소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비동맹국 외교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중·소 양국과 자동군사개입이 포함된 상호우호조약을 체결하고, 두 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다. 특히 북한은 19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했고, 이로 인해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를 대부분을 유상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하였다.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 불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비동맹국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5]

5.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 8. 12.

3) 자주외교: 1970년대

북한은 1970년대 자주노선 강화와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교 목표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1971년 9월 유엔에 가입하고, 1972년 일본과 수교를 맺고, 1979년엔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미·중 데탕트로 인한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도 외교노선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대남 도발과 외채 상환 문제, 위폐 및 외교관 밀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이 추진했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에도 비동맹국 외교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당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비동맹국 외교노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진영외교 의존도를 낮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비동맹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는 북한이 향후 제3세계 국가들과 독자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6]

6. 북한은 1975년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 외상회의(8.25.~30.)에서 '비동맹회의' 정식 회원에 가입하였다. 1975년 개최된 제30차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서방 측과 공산 측의 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등 북한의 영향력이 유엔 외교까지 미치게 되었다.

4) 대서방 실리외교: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체제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스스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동유럽은 급진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졌고, 중국과 베트남은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하였다.[7] 북한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친선외교를 전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 진영외교와 비동맹국 외교노선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과 1987년 'KAL기 납치사건'으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되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었다. 결국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과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대서방 실리외교는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7. 10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된 중국은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의 도입과 대외개방을 시작했다. 베트남도 1986년부터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였다.

2. 김정일 시기 북한 대외전략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전환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외부의 경제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4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자연재해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대량 아사를 겪는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는 미·일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1) 북미·북일 외교 정상화 추진: 1990년대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화·협상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0~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대화를 추진하였다. 여러 차례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1994년에는 「제네바 합의」[8]가 도출되기도 하였고, 1999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0년부터 미군 유해 발굴 및 인도 사업을 실시하고, 1998년까지 200여 구의 미군 유해를 인도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 개선도 시작하였다. 1991~1992년 일본과 8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1995년 3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연립 여당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고, 1995~1996년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북·일 간 두 차례의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북(1998.3.) 등 북·일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북·일 관계는 1990년대 갈등과 대화를 반복하였다. 1998년 8월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일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다. 그리고 북한이 1999년 8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더욱 냉각되었다. 이후 1999년 9월 북·미 간 「베를린 합의」를 계기로 북·일 관계도 유화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9]

2) 전방위 외교: 2000년대

김정일 체제는 2000년대에 들어 전방위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

8. 「제네바 합의」는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21일 맺은 북핵문제에 관한 외교적 합의이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동결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이다.
9. 1999년 12월 일본의 정당 대표단이 방북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북·일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재북 일본인 여성 고향 방문 재개 등 4개 조항이 채택되었다.

하였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가 절실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전방위 외교전략과 함께 '핵 카드'를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벼랑끝 전술'을 펼쳤다. 클린턴 정부 시기(1993~2000)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듯하였다. 2000년 10월 북한은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조·미 공동 코뮤니케」와 「반테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2001년 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제2차 북핵 위기 대두 등으로 북·미 관계는 다시금 악화되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 간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고, 북·미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김정일 체제는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양국의 지도부들은 수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진행하였다.[10] 러시아도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였다.[11]

김정일 체제는 2000년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10년까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제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수립(2000.1.)을 시작으로 영국(2000.12.), 독일(2001.3.)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은 2002년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로화 사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핵실험, 인권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도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에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였다. 지도자들의 북한 방문을 유도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12]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식량 차관 등의 문제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성과는 미미하였다.

10. 김정일은 집권 시절 8차례 중국을 방문하였다(2000.5., 2001.1., 2004.4., 2006.1., 2010.5., 2010.8., 2011.5.,2011.8.). 장쩌민(2001.9.)과 후진타오(2005.10.) 주석도 북한을 1회씩 방문하였고, 시진핑도 2008년 부주석시절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11. 푸틴 대통령의 방북(2000.7.), 김정일 방러(2001.7., 2002.8., 2011.8.)
12. 2001년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방문한 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순방하였다. 또한 2002년에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천득렁 베트남 주석 및 분양 라오스 총리를 북한에 초청하였다.

제3절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외관계

김정은 시기 북한의 외교정책은 2013년 3월 채택된 '핵무력 건설과 국가경제발전'의 병진노선에 따라 추진되었다. 북한은 2017년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선언하였고, 김정은 체제는 2018년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비핵화'조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13]

김정은 시기 북한은 체제안정과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14] 북한은 2018년 유화적인 협상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는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자주·평화·친선' 대외원칙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언급하고, 중국, 쿠바, 베트남 등과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통적 친선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1.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북한은 2013년부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병진노선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의 동시발전을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김정은 체제는 2017년까지 병진노선을 유지하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며 강경한 외교전략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2017년까지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제6차 핵실험 직후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75호가 통과되고, 미국은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

13.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되었던 것은 1995년(미국의 기본합의문 성실 이행이 조선반도 지대의 비핵화 실현으로 연결), 2009~2011년(조선반도 비핵화 입장·의지 불변)이후 8년 만이다.

14. 정상외교란 "전문외교관이 아닌 국가원수, 수상 또는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 등이 직접 외교교섭에 나섬으로써 국가 간 현안을 최고위급 수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외교"를 의미한다. 박병광, 「중국의 정상외교와 강대국관계조정」,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2003), p. 336. 화이트(2001)에 의하면, 정상외교는 핵외교, 위기외교와 함께 냉전외교의 주요형태로 꼽힌다.

해 독자적인 대북경제제재를 강화하였다. 이 결의에는 최초로 대북 석유 수출량 감축과 섬유 수입의 전면 중단이 포함되었으며, 중국도 동의하였다. 일본, 러시아, 유럽, 아세안 국가들도 유엔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시행하였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기점으로 유화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특사단을 보내 북·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대화를 시작하였다. 4월에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국가전략노선을 제시하고, 비핵화·체제 안정 협상외교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고,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였다.[15]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2018년 6월, 2019년 2월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및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진핑 주석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2013년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회복하였다.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고위급 교류 및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한편, 체제 안전보장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다. 일본 아베 총리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유보적 반응을 보이며,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과거사 청산 문제를 촉구하였다.

15.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었다."며 병진노선의 '결속'을 선언한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한다.

2. 북한의 대외관계

1) 미국과의 관계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과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 북한은 1962년에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16] 1974년부터는 미국과의 단독 협상 의제로 전환하였다.[17]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대미외교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관

16. 북한은 19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의 시정 연설을 통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17.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대미 서한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가침 서약 및 직접적 무력 충돌의 모든 위험성 제거 (2) 무력 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 (3) 조선 경외로부터의 일체의 무기, 작전 장비, 군수물자의 반입 중단 (4) 유엔군 해체 (5) 외국기지화 반대

계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18] 북한의 핵문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미 등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기대감을 표명하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핵확산 의혹 해소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19],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20] 실시에 이어 2009년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하고,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초 북한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지원 재개에 동의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합의는 파기되었다.

김정은 시기

김정은 시기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미국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하였다.[21] 이후 북한과 미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북·미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북한의 제4·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2270·2321호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 북한의 개인과 정부 기구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채택을 주도하였다. 같은 해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대북 원유공급을 제한하고, 북한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시키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채택하였다.[22] 하지만 북한은 2017년 11월 다시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미국은 대북 유류공

18.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 1996년 4자회담, 1999년 '베를린회담'(미사일 문제)
19. 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맞대응하였다.
20.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는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였다. 이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25.)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2009년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서는 화물·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1.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2.12.)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의 제재 조치를 강화·확대해 2013년 3월 7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는 의무 조항 5개를 포함하여 수출 통제, 항공·선박 규제, 금융 압박, 북한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됐다. 제2094호는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억제 및 완전 포기를 위해 기존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한 강력한 결의로 평가된다.
22.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대북 석유 수출량을 제한하고, 북한의 주요 재원인 섬유 수출 금지와 북한의 신규 인력의 해외 파견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안보리 결의 제2397호가 채택되도록 주도했다. 악화된 북·미 관계는 강경한 외교적 수사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완전한 파괴totally destroy"[23]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북한 김정은 또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장 성명' 발표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2018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협상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북·미 양국이 '평화와 번영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계 설립',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등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시험장을 폭파하고, 7월 27일 1차로 미군 유해 상자 55개를 송환하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

2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18일 유엔 연설에서 "동맹국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구분	원인	주요내용
제825호 (1993.5.11.)	북한의 NPT 탈퇴 (1993.3.12.)	• 북한에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
제1695호 (2006.7.15.)	북한 미사일 발사 (2006.7.5.)	•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을 금지
제1718호 (2006.10.13.)	북한 제1차 핵실험 (2006.10.9.)	• 물적 규제(재래식 무기, WMD 관련 물자, 사치품 등), 금융 규제, 출입국 규제, 화물 검색 등 대북제재 조치
제1874호 (2009.6.12.)	북한 제2차 핵실험 (2009.5.25.)	• 기존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 포함
제2087호 (2013.1.22.)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12.12.)	• 기존 안보리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에 제재 대상의 확대, 금융기관 활동 감시 강화,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등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
제2094호 (2013.3.7.)	북한 제3차 핵실험 (2013.2.12.)	•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 확대, 금융제재, 화물 검색, 항공기 차단, 금수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에서 제재 조치의 실질적 강화
제2270호 (2016.3.3.)	북한 제4차 핵실험 (2016.1.6.)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6.2.7.)	• 북한의 수출입 화물 전수 검색 및 운송봉쇄, 선박입항 및 항공기 영공통과 금지, 금융제재, 무역제재(민생 제외), 핵·미사일 관련 전용 가능한 무기 금수 및 모든 물품 금수
제2321호 (2016.11.30.)	북한 제5차 핵실험 (2016.9.9.)	•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공급 판매 이용 금지,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 활동 금지, 회원국내 북한 공관규모 축소, 북한에 대한 항공기 및 선박대여, 승무원 제공 금지(민생 목적 예외 조항 삭제),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 추가,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제2356호 (2017.6.2.)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2017.5.14.)	• 핵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 대상 추가(개인 14명 및 단체 4개)
제2371호 (2017.8.5.)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4형' 발사 (2017.7.4.~7.28.)	•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해산물 및 납, 납광석 수출 금지(원산지 무관), WMD 재래식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 해외 노동자 수를 결의 채택 시점으로 동결(제재위가 인도적 사유 결정 시 예외), WMD 개발 기여 가능한 대북 금융거래 금지 의무가 회원국을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에도 적용
제2375호 (2017.9.11.)	북한 제6차 핵실험 (2017.9.3.)	• 대북 원유 공급 제한(원유 공급량 현 수준 동결, 정제유 공급량 감축, 콘덴세이트(condensate)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금지), 북한의 섬유 수출금지(원산지 무관, 유예기간 90일),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금지(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금지), 신규 기존 북한과의 합작 합영사업 금지(120일 내 폐쇄), WMD 및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선박 검색 강화, 제재 대상 추가: 개인 1명(박영식), 단체 3개(당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 시 사안별로 예외 조치 가능
제2397호 (2017.12.22.)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4형' 발사 (2017.11.29.)	• 유료 공급 제한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2년) 이내 송환 조치,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 개인(16명) 및 단체(인민무력성)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지정

[표 3-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제2차 정상회담의 개최 희망 의사를 밝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2019.2.27.~28.)

하지만 북·미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범위 등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를 표시하며, 2019년 연말까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하였다. 이후 북·미 간에는 일정기간 소강·교착 국면이 지속되다가, 2019년 6월 한국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에서 비핵화협상 교착을 타개하고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2) 중국과의 관계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 정권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脣齒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혈맹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중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외교 기조 또한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중국은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진영 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 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북·중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북한에게 단순히 전통적 우호관계의 복원만이 아니라,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북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24]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1년까지 8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이전 중국 국가주석들도 북한을 2001년 9월과 2005년 10월에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2011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당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 김정일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다.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틀 후인

24.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중 관계 강화를 위해 김정일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2010.5., 2010.8., 2011.5.)을 개최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가·인민 간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정은 시기

김정은 체제의 대중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다. 2012년 11월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북한과 혈맹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3년 5월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북·중 관계는 급랭하였다. 2015년 9월 최룡해 당시 노동당 비서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10월 중국공산당 류윈산 상무위원의 북한 노동당 70돌 경축행사 참석을 계기로 다소 개선되었다.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2016년 이후 북한의 제4~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25]

특히 중국은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채택을 지지하였다. 이 결의는 최초로 북한 경제의 핵심 수출 자원인 석탄과 섬유를 포함하는 대북 수입 품목 및 수량 제한과 기존 석유 수출량의 30% 감축, 북한 노동자 신규 노동비자 발급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강조하였다.[26]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5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북·중 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북·미 대화 전후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북·중 관계는 "동지, 식구,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하였다.[27]

또한, 북·중 양국은 문화 및 인적교류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한 예술단이 2018년 4월 북한을, 북한의 리수용 당 국제부장이 인솔한 친선예술대표단이 2019년 1월 중국을 각각 방문하여 친선공연을 선보였다. 그 외에도 북한은 조선노동당 친

25. 2016년 4월 5일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2016년 4월 28일 '제5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CICA) 외교장관 회의' 기조 강연에서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6년 6월 14일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은 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여준다.
26. 북한은 대북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2017년 2월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 중국을 '줏대 없는 대국, 너절한 처사'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27. 제1차 회담: "새로운 높이로 강화·발전", 제2차 회담: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 제3차 회담: "한 집안 식구, 한 참모부",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특별한 관계"

선참관단(2018.5.), 대외경제상(2019.4, 2019.8.) 등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분야별 인적교류를 확대하였다.


북·중 정상회담(2019.6.20.)

특히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고, 양국 수교 70주년(10.6.) 기념방안과 양국 간 경제·민생 및 교육·위생·체육·언론·청년·지방 등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후 각 분야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북한 정권수립일(9.9.), 중국 건국일(10.1.), 북·중 수교 70주년(10.6.) 등 계기시에 정상간 축전 교환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다져나갔다.[28]

3) 일본과의 관계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1970년대 동서 간 화해무드와 미·중 우호협력관계 발전, 남북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개선이 다소 활발하게 추진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부터 북·일 간에는 수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29]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30] 2004년 5월 22일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치문제 등으로 북·일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31]

김정은 시기

김정은 체제의 대일본 외교는 경제적 실리 확보와 중국 의존 일변도 정책의 탈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32] 북한의 입장에서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하는 과제가 있었다. 북한은 일본의 독자적인

28. 후춘화 중국 부총리가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58주년 기념행사(7.11.)에 참가하고, 7월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북한 중앙재판소장이 만나 양국 사법 당국 간 우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8월에는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먀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하여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였다.

29. 1991년 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북한은 일본과 수교회담을 11차례 개최하였다.

30. 「북·일 평양선언」으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국교 정상화 후 대북 무상자금 및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31.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북·일 간 전세기 일본 착륙 금지, 북한 당국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모든 북한 상품 수입 금지가 포함된다. 또한,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2009.6.12.)에 동참하면서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였다.

32. 상세 내용은 윤대규 외,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북·일 관계 개선 실태 전망", 「동북아의 변화 동향 평가 및 전망」, pp.140~166. 참고

대북제재를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된 외교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 또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도 자국 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독자제재를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북한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다.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지마 내각 관방 참여(자문역)가 방북하고, 2014년 북·일 간 국장급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다(2014.3., 2014.5., 2014.7.). 특히 5월 26~28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일 국장급회담(「스톡홀름 합의」)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재북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33]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독자제재를 추진하였다. 2016년 8월 북한의 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고, 2017년 8월·9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이 연이어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 이에 일본의 아베 정부는 강력한 대북 규탄 성명과 함께 한반도 인근 미·일 합동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 제2397호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2018년 북·미, 북·중 관계의 급진전에도 북·일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일본에게 납치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일본이 배제될 것이라 경고하였다.[34] 아베 수상은 3선에 성공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지도 표명하였다.[35] 2019년 9월에는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고를 단장으로 하는 북·일 우호 야마나시 대표단이 북한에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하기도 하였다.

4) 러시아와의 관계

김일성·김정일 시기

탈냉전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냉전 시기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36]

33. 일본 측은 재조사 개시 시점에 민간인 왕래 규제, 송금·휴대금액 제재, 인도주의 목적 아래에서의 북한 국적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7월 4일에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일본도 같은 날 합의한 세 가지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34. 특히 6월 19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왜 일본만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과 먼 나라로 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6월 22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서려면 과거 죄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35. 아베 총리는 2019년 5월 27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36.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북·러 정상회담(2019.4.25.)

199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체결에 이어,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국은 2008년에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을 진행하고, 2012년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협정을 체결하였다.

김정은 시기

김정은 시기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러시아가 찬성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듯 보였다. 하지만 2014~201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측 고위 인사들이 매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친선 관계는 지속되었다.[37]

양국은 2015년 3월 북·러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2016년 2월 「비법 입국 및 비법 체류자들의 인도와 접수에 관한 협정·의정서」를 조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대북 식량 지원 등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교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러시아는 2016년 7월에

37. 2015년 5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전승기념일(5.9.) 7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기도 하였다.

북·중·러를 연결하는 육로와 해상 국제 관광노선 개통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나진-하산 간 도로를 개통하고, 2016년부터 나진-블라디보스토크 간 항로 개설 및 정기 노선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8년부터 러시아와 고위급 협력 및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있다. 2018년 5월 31일 러시아 외교장관 라브로프 Sergey Lavrov가 방북하여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양국 간 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38] 또한 동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39]

38. 2019년 4월 25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이 회담에서 양국이 "최고위급 상봉·접촉 포함 고위급 왕래 강화",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사업 활성화 및 호혜적 경제무역관계 강화", "중대한 고비에 직면한 조선반도 정세 추이 분석 평가,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 강화 토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39. 푸틴 대통령은 2019년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 축소를 의미하는 것", "북한에는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고,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같은 해 9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가운데 외교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서방의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을 진행하고, 같은 해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0]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 주도로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

40.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 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 작성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으로 인해 북한과 유럽연합 간 직접 대화가 단절되기도 했다.[41]

김정은 시기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을 방문한 것에 이어, 2014년 9월 북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 및 유럽 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13년까지 프랑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북한과 유럽연합(EU)은 제14차 국장급 평양 정치대화에서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42]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로 인해 양측 관계는 악화되었다. 유럽연합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유럽연합은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제재의 이행과 함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된 독자제재안을 채택하였다.[43] 제4차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는 개인(16명)과 단체(12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7년 10월 16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서 개인 대북 송금액 축소, 대북 투자와 대북 원유 수출의 전면 금지, 역내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갱신 불허를 포함하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채택했다.[44] 2018년에 들어와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제재안이 4차례 추가로 채택되었으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총 단체 85개, 개인 158명(유엔 제재 결의 포함)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6)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추진하여 왔다. 1980년대 초 '자주·친선·평화'의 외교정책 기본원칙 제시를 계기로 북한은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해체와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체제 생존이 급선무였던 북한에 비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는 더욱 중요해졌다. 유

41. 북한의 인권 문제는 200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 대화를 통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제14차 북한과 유럽연합 간 국장급 정치대화(2015.6., 평양)에서 논의되었으나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42. 이후 2016년 3월 유럽 여러 정당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43. 유럽연합은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시작하였다. 북한의 제2·3차 핵실험 이후에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하였다.
44. 개인당 송금 한도를 기존 액수(1만 5,000유로)에서 3분의 1(5,000유로)로 축소하고, 북한의 개인 3명과 인민무력부 등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방북 및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2018.11.4.~6.)

엔에서의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후원 국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동맹국 외교를 강화한 것이다.

북한이 비동맹 외교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반제·반미 공동전선' 형성과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유엔에서의 비동맹 그룹 국가가 많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핵보유가 자위적 방어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6년 미사일 발사, 제1차 핵실험으로 한동안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의 비동맹 국가와의 대외관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김정은 시기

김정은 체제는 대북제재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비동맹 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나,[45]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2017년 8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가역적인 핵폐기를 촉구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46] 하지만 미국 대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47] 북한에게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는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2018년 이후에도 북한은 비동맹 국가 및 전통적 친북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외 여건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동유럽·아프리카·아세안 국가 등 우호국가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재가동하였다.[48]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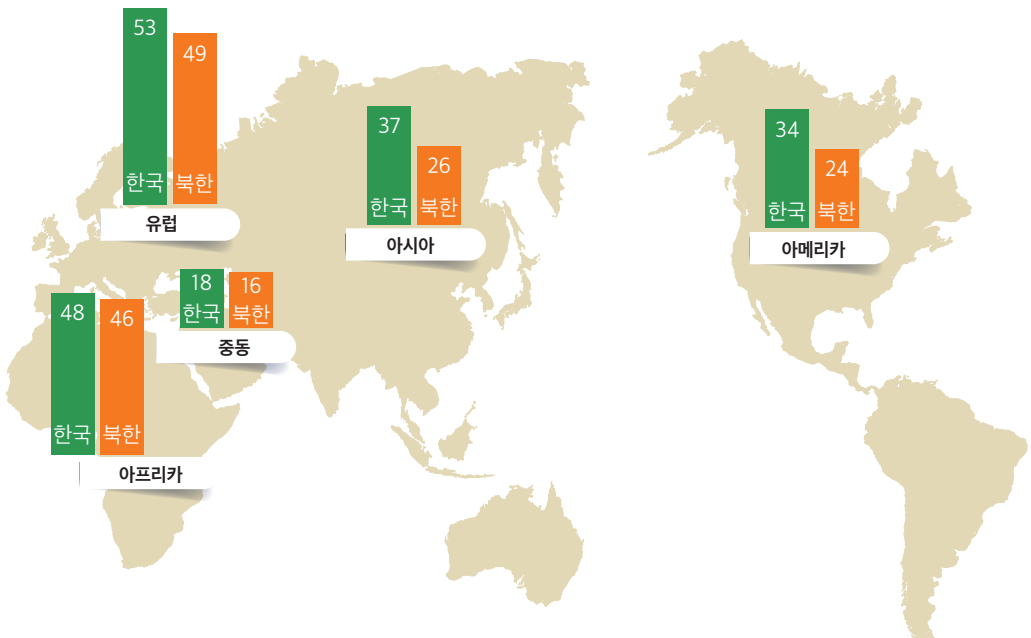
45.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6월 북한 김격식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하였고, 박의춘 외무상은 제2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여 비동맹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2013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3월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고, 2014년 10월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였다. 뒤이어 201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둥회의 60주년)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으며, 2016년 9월에 개최된 비동맹국 회의에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는 2015년 6월 쿠바를 방문하였고, 쿠바 대표단은 2015년 9월과 2016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46. 필리핀은 북한의 5위 대외무역 국가이다. 2016년 필리핀의 대북 수출액은 2,88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1,610만 달러다. 아세안의 대북제재 참여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47.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의 회원자격 정지에 관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세안 장관들은 "북한이 참가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속적인 평화와 안정, 우의, 번영을 유지한다는 아세안지역안보포(ARF) 비전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48. 2018년 4월 리용호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에 참석하였고, 송세일 외무성 국장은 같은 달 케냐, 남아공, 민주콩고, 콩고, 짐바브웨, 토고, 말리 등 7개국을 순방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최희철 외무성 부상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을 순방하고,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방북하기도 하였다.

※ 자료: 외교부



지역	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 수교국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아시아	37	26	26	11	0
아메리카	34	24	23	11	1(쿠바)
유럽	54	49	49	5	0
중동	18	16	14	4	2(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48	46	46	2	0
계	**191**	**161**	**158**	**33**	**3**

[표 3-2] 남북 수교 현황(2019년 9월 기준)

수용 당 부위원장은 2018년 7월에 쿠바를 방문하여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였다. 그리고 11월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9년에도 제3국 비동맹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49]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8월 평양에 개관된데 이어, 디오스다도 까벨료 제헌의회 의장이 9월에 방북하여 북한과 기술·산업·군사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49. 2019년 4월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시리아·이란·아제르바이잔·몽골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였고, 5월에는 20일부터 28일까지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쿠바를 방문하여 국가이사회 부위원장 및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6월에는 리룡남 내각부총리가 나이제리아를 방문하는 한편, 리용호 외무상이 방북한 시리아 외무상 및 이주민상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젠에서 개최된 제18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Ⅳ

제4장
북한 군사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제2절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제3절 **지휘체계와 군사력의 구성 및 특징**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북한의 군은 북한 정권 수립 약 7개월 전인 1948년 2월 8일 창건되었다.[1] 군이 먼저 창건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북한의 군은 해방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가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군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구이다.

북한에서 군은 「조선노동당 규약」 등을 통해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령인 최고지도자가 당을 통해 국정 전반을

1. 북한은 1978년에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1948년 2월 8일에서 1932년 4월 25일로 변경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1948년 2월 8일로 변경해 재지정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온 1932년 4월 25일은 반일인민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지정하였다.

운영하는 북한의 존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수령의 안위와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는 수령의 군대이자 당의 군대, 혁명 무력으로 규정된다.

북한의 군은 북한 정권 수립 약 7개월 전인 1948년 2월 8일 창건되었다. 군이 먼저 창건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북한의 군은 해방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가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군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구이다.

북한에서 군은 「조선노동당 규약」 등을 통해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가 당을 통해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수령의 안위와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는 수령의 군대이자 당의 군대, 혁명 무력으로 규정된다.

군의 정치 참여 및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정치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북한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군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북한의 영토를 보존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 수호의 역할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 최고지도자인 수령을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 수뇌'를 보위하는 것은 군의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다음으로 군의 정치적 역할이다. 6.25전쟁은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자 1998년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선군정치',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의 정치적 역할이 다시 부각되었다. 최근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군의 경제 및 사회적 역할이다.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에 군이 전면 투입되었으며, 대규모 토목사업 및 국가 재건사업의 중심에는 동원된 군 조직이 있었다. 특히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 군을 동원하여 각종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2] 김정은 시기에도 군은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원산갈마 해양 관광지구 건설, 단천 발전소 건설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처럼 북한에서 군은 가장 전문화된 집단으로서 본받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선전되어 왔다. 북한 사회의 주류 계층인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는 필수적인 경력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북한에서 군이 갖는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크다.

2. 김정일 시기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면서 군인 건설자들이 경제건설 전면에 나서 안변청년발전소와 원산-금강산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김정일은 체육, 과학, 문예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동원을 시도하였다.
3.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건군절 71돌인 2019년 2월 8일 인민무력성을 방문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민군대에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계속 추켜"들었다(「노동신문」 2019년 2월 9일 1면).

제2절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1. 김일성 시기

김일성 시기의 군사정책은 6.25전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3년간의 6.25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군의 규모와 역량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 발발 직전 약 20만 명 정도였던 북한군의 총 병력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약 30만 명 정도로 증가되었으며, 이후 1955년에는 4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주둔하던 중국 인민지원군이 철군하면서 물자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장비의 증강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일성 시기 북한의 군사정책은 소위 '4대 군사노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등장한 4대 군사노선은 중·소 분쟁 시기 안보 우려로 인해 인민경제에 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제한된 자원을 중공업 중심 국방 분야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인민의 참여와 희생을 강조하는 일종의 국가전략 차원의 군사력 강화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대 군사노선은 1962년 12월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제시된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 현대화'가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다. 4대 군사노선은 1970년 제5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제시됐으며, 1992년 개정 헌법에서 명문화되었다. 김일성은 이처럼 4대 군사노선을 내세우며 병력 증강 뿐 아니라 주요 장비의 독자 개발을 추진했다.

노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로 무장,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전민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표 4-1] 북한의 4대 군사노선

김일성 시기 북한은 주요 물자 및 장비의 독자 생산을 위해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1967년을 전후해 내각에 '제2기계

공업성'이라는 군수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1972년 무렵에는 제2기계공업성을 내각에서 분리한 뒤 '제2경제위원회'로 확대·재편하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각종 무기 및 물자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舊 제2자연과학원)과 8개의 총국, 수백 개의 군수공장을 산하에 두면서 일반경제에 우선하는 군수경제를 독자적으로 관할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주요 지상무기 체계와 잠수정,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건조하는 등 독자적인 군수산업 능력을 성장시켜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던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 김정일 시기

김정일 정권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난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1994년과 2012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총참모부가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는 기계화군단이 4개에서 2개로 각각 감소하는 대신 기갑사단 1개, 기계화 보병사단 4개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김정일 시기 18년 동안 북한에서 전차는 400여대, 각종 포는 2,600여문이 각각 증가했으며, 170mm 자주포가 새롭게 생산·배치되고, 구소련의 T-72형 전차를 모방한 천마호의 개량형을 생산·배치하는 등 장비 현대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북한 해군은 1994년 16개 전대에서 2012년 13개 전대로 부대 수가 감소했지만 26척에 불과했던 잠수함정이 70여 척으로, 상륙함정이 공기부양정 120여 척에서 공기부양정 및 고속상륙정 등 총 260여 척으로 증가했다. 북한 공군의 경우에는 1994년 3개 항공전단사령부였던 것이 2012년에는 4개 비행사단과 2개 전술수용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증가했지만,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군 전력을 독자적으로 확충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비 증가는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변화는 경제난으로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제한적이었으나,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토대로 군사력 증강을 위해 노력했다.

재래식 군사력 증강 노력과 함께 김정일 시기에는 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시대 미사일 개발에서 거둔 성과, 즉 스커드[SCUD]-B(사거리: 300km), 스커드-C(사거리: 500km), 노동(사거리: 1,000~1,300km) 미사일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1998년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우며 중·장거리 미사일로 평가되는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6년에는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대포동-2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으며, 2009년에는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은 스커드 미사일 기술에 기반한 액체 연료 미사일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고체 연료 미사일(KN-02) 개발을 시작하기도 했다.

미사일 개발과 함께 김정일 정권은 핵개발도 진척시켜 나갔다. 김정일 정권은 2002년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자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6자회담이 사실상 중단되자,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핵과학자를 북한으로 불러들여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일 정권은 제1차 핵실험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2~3개월 전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했다. 핵·미사일 개발 진전에 맞춰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미사일사령부를 확대·개편해 핵·미사일 전력을 전담 운용하는 전략로켓군사령부를 창설하기도 했다.

3. 김정은 시기

김정은은 4대 군사노선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4대 전략적 노선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의미한다. 이중 전법 강군화 및 다병종 강군화는 김정은 체제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군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선군호 전차(2013.7.27.)

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제2경제'인 군수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방 분야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가장 두드러지는 군사정책은 핵·미사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 두 차례에 불과했던 핵실험을 김정은 시기 들어 네 차례나 추가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 직후 영변 핵시설의 전면 재가동을 선언했는데, 여기에는 5MWe 흑연감속로(플루토늄 생산)와 우라늄 농축 시설(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016년 4월과 2017년 3월 새로운 대형 엔진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 이를 이용해 북한은 2016~2017년 화성-10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또한 2015년부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북극성을 지대

지 탄도 미사일용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하였다.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방사포 등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오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은 신규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였고, 10월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한편 김정은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재래식 전력 증강도 선별적으로 추진했다. 김정은은 북한의 지상군 주력 부대를 사단에서 여단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는 인원과 비용을 확대하지 않고 부대 규모를 줄이면서도 화력과 유연성, 기동성을 높임으로써 전투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형 T-54/55 전차를 선군호와 준마호 등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공군이 담당하는 방공체계와 해군에도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4대 전략적 노선을 추진하며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군사정책은 세 번의 변화 시점을 맞게 되는데, 첫 번째 시점은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을 통해 한편으로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동시에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시기이다. 두 번째 시점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 등 군사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점은 2018년 4월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면서, 병진노선의 승리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신전략노선을 발표했다.

제3절

지휘체계와 군사력의 구성 및 특징

1. 지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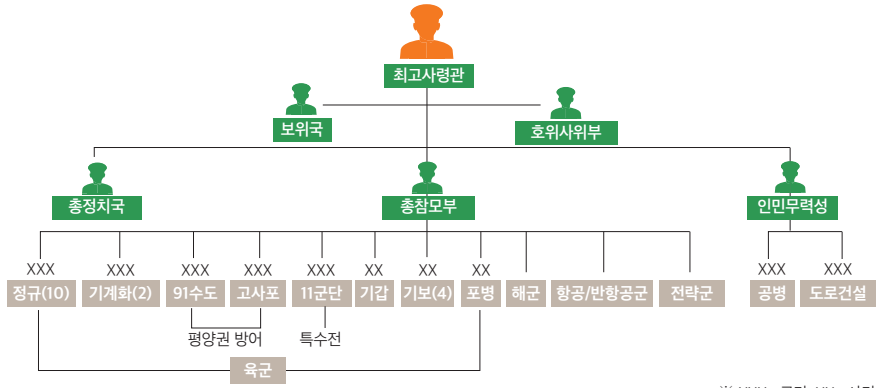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와 군 총정치국, 군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등이 있다. 각 기구별 주요 조직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군사 기구이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29조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서 개편된 기관으로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이다. 개정 헌법 제106조는 국무위원회를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2조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 군사지휘체계 내부 기구의 조직과 역할을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출처: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 22.



[그림 4-1]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그림 4-1]에서 보듯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군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당의 집행기구인 총정치국,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총참모부, 그리고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사령관은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북한 군 최고의 직책이다. 최고사령관은 6.25전쟁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단일지도 형식의 비상기구로 신설되었다. 최고사령관은 전시 또는 평시 모두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며, 전시 및 동원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사시에는 권한이 확대되어 전당·전군·전민을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군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총정치국은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군도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군을 통제하기 위해 당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4]를 두고 있으며, 군에는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이다. 총정치국은 군당조직 집행기관으로 당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 군사부 및 당 조직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적 영역을 통솔한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참모부 산하에는 [그림 4-1]과 같이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 1개의 기갑 사단, 4개의 기보 사단, 포병 사단, 해군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전략군[5] 등이 있다.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와 훈련소, 각 군 사령부의 전·평시 작전 및 훈련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매년 발령되는 최고사령관 명령 작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하 부대들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軍政] 기능을 수행한다.[6] 인민무력성은 현재 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사지휘기구도 상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수평관계에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된 군정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 총정치국이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업 관장, 군 인사권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군정권을 행사한다면, 인민무력성은 군인들의 식품, 의류, 유

4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직무상 군사 부문의 최고 결정·심의기관으로 당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1년에 한두번 소집되는 비상설기구이며, 그 구성원 역시 다른 군사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군사관련 세부 정책이나 계획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구가 아니라 필요시 특별한 안건이나 결정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5. 전략군은 2014년 기존의 전략로케트사령부에서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6. 인민무력성은 1948년 민족보위성으로 출범, 1972년 인민무력부로 개칭된 이후 수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2016년 이후 인민무력성으로 불리고 있다.

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지도자를 보호하는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데타 진압, 최고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숙소경계와 관리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최고지도자의 안위를 위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위국은 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등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와 보위국에도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현재 김정은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위원장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정·군의 최고 직책을 담당하면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2. 군사력 구성

북한군의 전력을 요약하면 2018년 12월 기준 상비군으로서 육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으로 총 128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규군 128만여 명 이외에도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 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보위국, 인민보안성,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등 가능한 동원 병력이 762만여 명에 이른다.

1) 지상군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 전후방 군단, 2개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舊 평양방어사령부), 고사포군단, 11군단, 1개 기갑사단,

*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244.

남한	장비	북한
2,300여 대 (해병대 포함)	전차	4,300여 대
2,800여 대 (해병대 포함)	장갑차	2,500여 대
5,800여 문 (해병대 포함)	야포	8,600여 문
200여 문	다연장·방사포	5,500여 문
발사대 60여 기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 기 (전략군)

[표 4-2] 남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 장비 현황

남한	구분	북한
	병력(평시)	
59.9만여 명	계	128만여 명
46.4만여 명	육군	110만여 명
7만여 명 (해병대 2.9만여명 포함)	해군	6만여 명
6.5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	전략군	1만여 명
	주요전력	
	육군	
	부대	
13개(해병대 포함)	군단(급)	17개
40개(해병대 포함)	사단	81개
31개(해병대포함)	여단(독립여단)	131개
	장비	
2,300여 대(해병대 포함)	전차	4,300여 대
2,800여 대(해병대 포함)	장갑차	2,500여 대
5,800여 문(해병대 포함)	야포	8,600여 문
200여 문	다연장·방사포	5,500여 문
발사대 60여 기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해군	
	수상함정	
100여 척	전투함정	430여 척
1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10여 척	기뢰전 함정(소해정)	2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1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수상함정	
410여 대	전투임무기	810여 대
70여 대(해군 항공기포함)	정찰·감시통제기	30여 대
50여 대	공중기동기	340여 대
18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680여 대	헬기(육·해·공군)	290여 대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 소집, 전환/ 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예비전력(병력)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244.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 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를 제외하고 산출

[표 4-3] 남북한 군사력 비교(2018년 12월 기준)

4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육군의 약 70%에 달하는 전력이 평양에서 원산 이남의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남한의 수도인 서울과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지상군은 기계화되어 전차 및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은 기계화 및 전차사단이 한반도 지형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년에 걸쳐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여 전차, 기계화, 미사일부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하였다.

2) 해·공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에서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원해遠海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규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244.

남한	장비	북한
100여 척	 전투함정	430여 척
1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10여 척	 기뢰전 함정(소해정)	2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1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표 4-4] 남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 현황

남한	장비	북한
410여 대	 전투임무기	810여 대
70여 대 (해군 항공기포함)	 감시통제기	30여 대
5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18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680여 대	 헬기(육·해·공군)	290여 대

[표 4-5] 남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예하 5개의 비행사단, 1개의 전술수송여단, 2개의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공군력은 전투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40여 대, 헬기 290여 대, 훈련기 17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4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대 중 약 40%를 평양 이남에 전진 배치해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또한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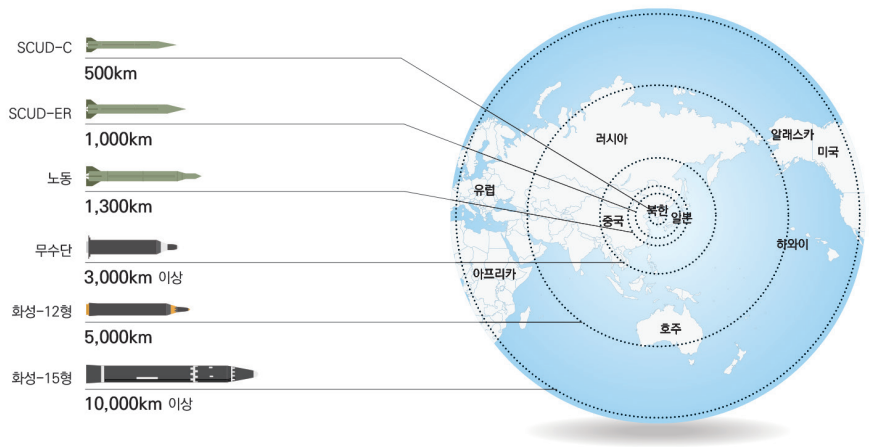
3) 전략군

북한은 2014년 기존의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개편하여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 9개의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하게 미사일 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조직이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5MWe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확보해왔고,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총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성능 고도화 및 소형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현재 단·중·장거리 등 다양한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스커드-B/C 미사일과 신형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남한

*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26.



[그림 4-2]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을 타격하기에 충분하며, 스커드-ER 및 노동 계열 미사일은 일본, 화성-10(무수단)형 및 화성-12형 미사일은 괌을 비롯한 태평양 북서부 지역, 화성-14형 및 화성-15형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4) 예비전력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을 교도대, 노농적위군(직장 및 지역 단위 조직), 붉은청년근위대(고급중학교 군사조직), 준군사부대 등에 동원시키며 예비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 여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

*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26.

구분	규모	비고
교도대	60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 17~50세 남성, 17~30세 미혼 여성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 17~60대 남성,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성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 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등
계	**762만여 명**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현황

약 등을 비축하고 있다.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전시 군수공장은 300개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군수공장에서는 전투임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와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으로 평가된다.

3. 복무 및 계급구조

1) 복무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

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단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력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는 정책상의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한은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군 복무 연한을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0년 복무 연한제'를 시행하였으며, 2003년 3월 제10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전민 군사복무제'를 시행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을 남성 10년, 여성 7년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생활에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7]이 있다. 복무 중 규율을 어길 경우 군관이나 하전사를 불문하고 군기 사고자는 제대 후 직장 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 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 간의 특별 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는 부모 사망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 정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군 복무 기간에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는 약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여군 포병의 훈련 장면

북한군 병사는 주요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평균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건설, 영농 등 비군사 노동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병사에 대한 급식 상황은 2000년대 초 외부지원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은 보급되고 있지만 부식은 직접 구매하거나 부대가 소재한 지역의 특징에 따라 영농, 어로, 채취 등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많은 부대가 염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콩 작물을 경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① 군사 규정 철저 준수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 ④ 당 및 정치 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 기밀, 군사 기밀, 당 조직 비밀 엄격 유지 ⑥ 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 준수 ⑦ 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 재산의 침해 금지 ⑨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등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수입이 많은 국가보위성 예하 국경 경비대 배치를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軍民관계를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의 민간에 대한 부담과 각종 폐해 일소를 위해 군민관계 훼손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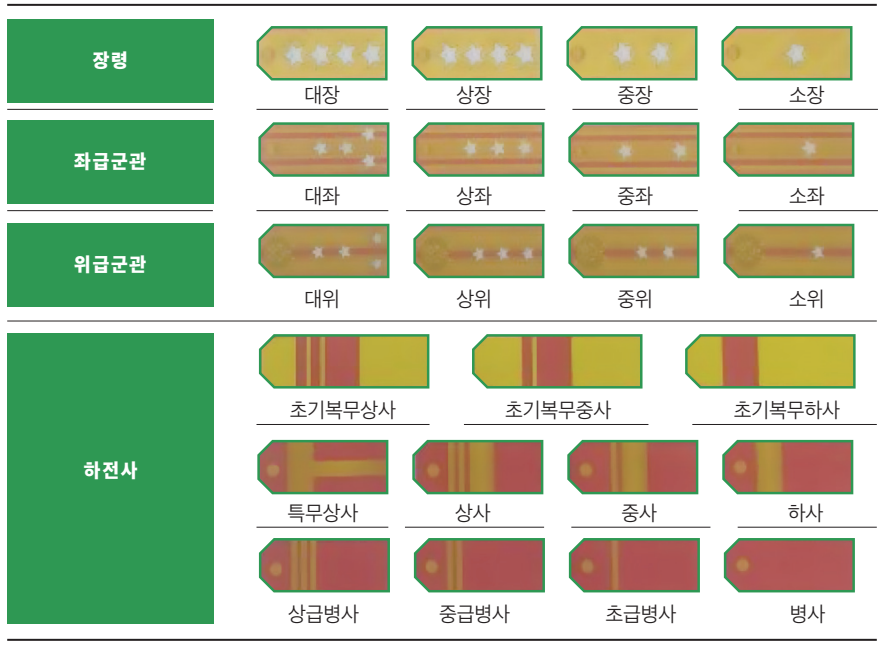
2) 계급구조

북한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리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8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 장령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 하급 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는 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군사칭호'로서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전사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군 원수 및 장성급 계급 서열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순으로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면서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김정일도 사망(2011.12.17.) 후 2012년 2월 14일 대원수로 추대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17일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8]



[그림 4-3] 북한군 계급장(견장)

8.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은이 '차수' 계급을 건너뛰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승진했다. 김일성과 김정은 모두 '공화국 원수'를 거쳐 '대원수' 호칭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준다는 결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나왔다.

4. 북한 군사력의 특징

1)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도 수차례 발사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 비핵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어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다.

핵무기

북한은 1956년 「조·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안북도 영변 지역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구비, 핵 전문 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5MWe 흑연감속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제조공장 등이 차례로 건설되었다.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991년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사찰을 받았으며, 사찰 결과와 북한의 신고 내역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제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로 일단락되었으며, 북한의 핵활동은 2002년까지 한동안 동결되었다.

2002년 10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소위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요 지원과 경수로 건설 중단 등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 사용 후 핵연료봉 재처리 등으로 대응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2003년 8월 시작돼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2008년 12월 열린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후 2017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능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4월부터 추진하였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선언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에만 3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공약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폭파하였다.

*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228.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 10:36	2009.5.25. 09:54	2013.2.12. 11:57	2016.1.6. 10:30	2016.9.9. 09:30	2017.9.3. 12:29
지진규모 (mb)	3.9	4.5	4.9	4.8	5.0	5.7
추정 위력 (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표 4-7] 북한 핵실험 현황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2018.5.25.)

1985.12.12.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1.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3.3.12.	NPT 탈퇴 선언
1994.10.21.	북·미 「제네바 합의」 체결
1994.11.1.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2002.10.3.	켈리 미 국무부차관보 방북
2002.12.12.	핵 동결 해제 발표
2003.8.27.	제1차 6자회담 개최
2005.2.10.	핵무기보유 선언
2005.5.11.	영변 5MW(e)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2005.9.19.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9.19공동성명' 채택
2006.10.9.	제1차 핵실험 실시
2007.2.13.	6자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폐쇄 및 불능화 합의 「2.13 합의」
2007.7.15.	영변 원자로 폐쇄
2007.10.3.	6자회담에서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10.3 합의」.
2008.6.27.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9.24.	영변 원자로 봉인 해제
2009.5.25.	제2차 핵실험 실시
2009.11.3.	사용 후 폐연료봉 8천 개 재처리 완료 선언
2013.2.12.	제3차 핵실험 실시
2013.4.2.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2016.1.6.	제4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첫 수소탄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6.9.9.	제5차 핵실험 실시제
2017.9.3.	제6차 핵실험 실시, 조선중앙TV '수소탄두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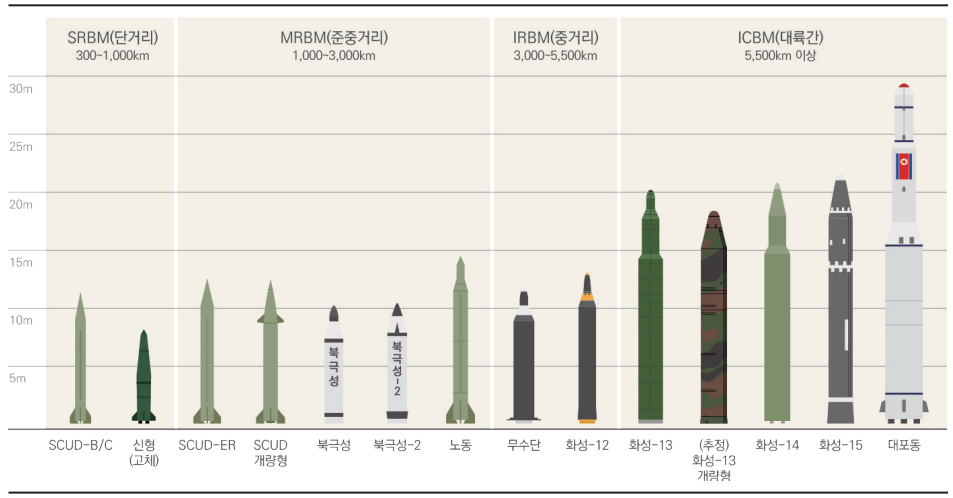
[표 4-8]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미사일

북한은 장거리 타격 및 핵무기 등의 투발능력 확보를 위하여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사거리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 그 후에는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형)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각종 기념일 열병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여 온 북한은 2012년부터 인공위성 발사 등을 내세우며 장거리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평가되는 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등을 시험발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들어 북한은 보도매체를 통해 신규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고,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신형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하며 군사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2018 국방백서」, 국방부, p.228.



[그림 4-4]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화학무기

지금까지 북한의 화생방무기는 핵문제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 요인이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군수산업의 과잉화

북한은 기존의 전군 간부화, 전민 무장화, 국토 요새화에 1966년 10월 전군 현대화를 추가해 4대 군사노선을 완성한 뒤 내각에 군수

산업을 담당하는 제2기계공업성을 신설했고, 1972년 무렵에는 제2기계공업성을 내각에서 분리한 뒤 군사산업 관련 조직을 통합한 제2경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한다. 현재 제2경제위원회는 국가최고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내각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계획, 생산, 분배,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군수산업에 필요한 재원과 물자를 일반경제보다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제2경제위원회가 산하 외화벌이 기관과 무역회사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군수산업은 크게 각종 무기체계 및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군수부문과 군용 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반군수부문으로 나뉘며, 민수공장에 설치된 '군수직장' 역시 군수산업에 포함된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군수 공장 및 기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러한 공장·기업소를 통해 항공기 개발·생산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한 일부 무기체계를 제외하고는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장비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한다. 구체적으로 제2경제위원회 산하 총국은 군수산업의 전반적 개혁, 제1국은 소형 무기 및 탄약, 제2국은 전차 및 장갑차, 제3국은 방사포(다련장 로켓), 제4국은 미사일, 제5국은 핵 및 생화학무기, 제6국은 함정 및 잠수정, 제7국은 항공기를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960년대 추진한 중공업 우선 정책은 독자적 군수산업의 토대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중시한 양적 동원에 의한 생산 확대는 결국 북한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북한은 일반 경제 및 민수산업에 우선해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고, 일반 경제 및 민수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군수산업만 과대 팽창되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북한의 전체 경제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 총참모장의 직접적인 지상군 부대 지휘·통제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그림 4-1])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에는 해군사령관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은 있지만, 우리의 육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지상군사령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합참의장과 동격인 총참모부 총참모장이 북한군에 대한 전반적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지상군 정규군단과 지상군에 해당하는 기계화 군단 및 기갑·기보·포병 사단을 직접 지휘·통제하고 있다.

즉, 북한군 지휘체계 내에서는 지상군 정규군단과 기계화 군단 및 기갑·기보·포병 사단이 군종사령부에 해당하는 해군 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와 동일한 위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는 총참모장이 지상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등 군종사령부에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종사령관이 예하 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일반적인 군사지휘체계와는 다른 형태로, 북한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군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군단 및 사단급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북한군이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지상군이 밀집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 전체 병력에서 지상군 비중이 86%에 육박할 정도로 북한군은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와 8.6%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은 전방 지역에 4개의 지상군 정규군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배치 상황을 감안해 북한군의 실질적 운용 체계는 작전지역에 따라 지상군 정규군단을 일종의 전구戰區 사령부로 하고, 전구 사령관이 자신의 전력뿐 아니라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여타 전력을 모두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군은 해군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와 같은 군종사령부 위상의 지상군사령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상군 정규군단을 군령권자인 총참모장이 직접 지휘·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북한군과 유사하게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방 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지상군 전력을 밀집시키고 있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우리 군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V

제5장
북한 경제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정책 기조**

제2절 **거시 및 부문별 현황**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정책 기조

1.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는 협동농장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제21조)고 하면서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지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 현상은 장사 및 각종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국의 묵인 하에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관할기관에 뇌물을 주고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입사증) 명의를 변경

하는 방식으로 주택 이용권을 사고팔고 함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은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과거의 엄격한 중앙집중적·계획적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인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경제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고, 계획지표도 물량지표에서 금액(액상)지표로 변화시켜 운용해 왔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4년 이른바 '5.30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기업소법」도 2014·2015년 두 차례로 개정해 사실상 시장을 활용해 이루어졌던 계획지표 달성 활동을 제도적으로 부분 공식화하고 있다. 즉 지배인의 자율적 경영지표를 확대해주고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도 부분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시장화 현상 확산 이후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계획을 수행한다는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 시장경제활동을 행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금액지표를

납부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정책의 기조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경제·국방 병진노선' 등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워 북한만의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 건설 노선"[1]이다. 이는 국가 경제의 거시 재생산체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

1.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08.

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한다."[2]라고 주장해 왔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이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조성하고 북한 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군 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정책 기조들을 부분 수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현 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병진노선은 사실상 국방부문에 대한 과잉 예산배분으로 산업부문의 불균형과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켰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초래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

2.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15-716.
3. "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 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관련 포스터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관련 포스터

원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공표하였다.

북한이 2018년 4월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한 '경제건설집중' 노선은 첫째,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할 것과 둘째, 당과 모든 국가기관들이 새로운 전략노선의 내용을 철저히 관철할 것, 셋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새로운 전략노선 관철을 위한 제반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 하에 당면 목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기간 중에(2016~2020) 공장기업소의 생산정상화를 실현할 것과, 장기목표로는 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 개

최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전략이다. 2016~2020년까지 첫째, 전력문제의 해결, 둘째, 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 셋째, 기계·화학·건설·건재공업부분의 발전, 넷째, 농업·수산업·경공업부문의 발전, 다섯째, 대외무역·합영합작·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 여섯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2020년은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완성해야 하는 해이다. 북한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부강', '자립경제', '정면돌파'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제2절

거시 및 부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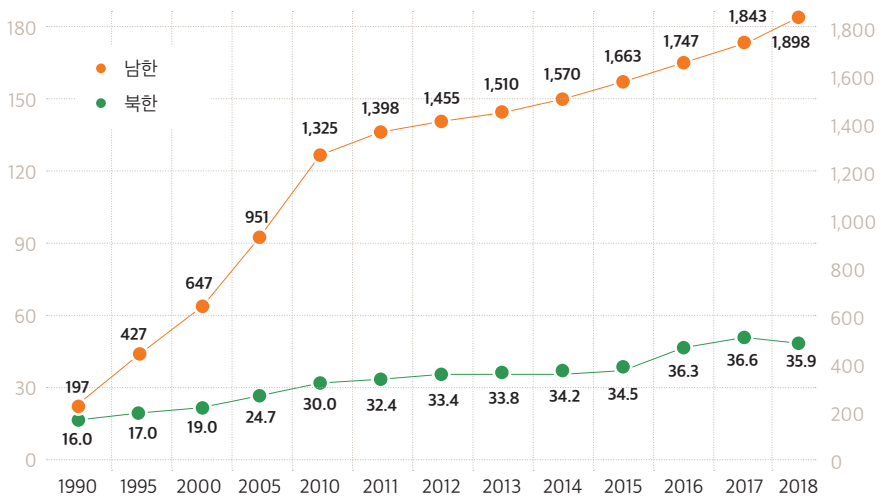
1. 거시적 현황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산업연관표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해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등의 주요 경제통계들을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북한경제 통계는 실제와 다소 격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 국민총소득과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추계한 2018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 Gross 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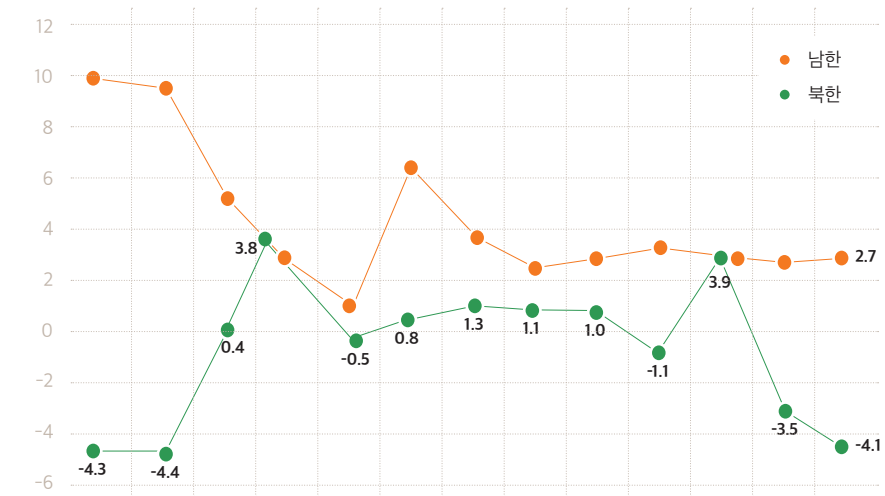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단위: 조 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NI	24.7	24.4	24.8	27.3	28.6	30	32.4	33.4	33.8	34.2	34.5	36.3	36.6	35.9

[표 5-1] 북한 국민총소득 추이

*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전년대비 증감률,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장률 (%)	-4.3	-4.4	0.4	3.8	-0.5	0.8	1.3	1.1	1.0	-1.1	3.9	-3.5	4.1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Income 규모는 35조 9,000억 원,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은 142.8만 원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추이는 위의 [표 5-1]과 같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미미하며, 2018년 기준 남한의 GNI(1,898조 5,000억 원)와 비교할 때 52.9배의 격차를,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3,679만 원)과 25.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5-2]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1990~1998년 9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총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명명한 이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붕괴되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구소련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교역이 위축·중단됨으로써 더욱 가중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선순환적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즉 1999~2005년간 연평균 약 2.2%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0년간 연평균 -0.1%, 2011~2015년간 연평균 0.6%로 침체를 유지하다가,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의 성

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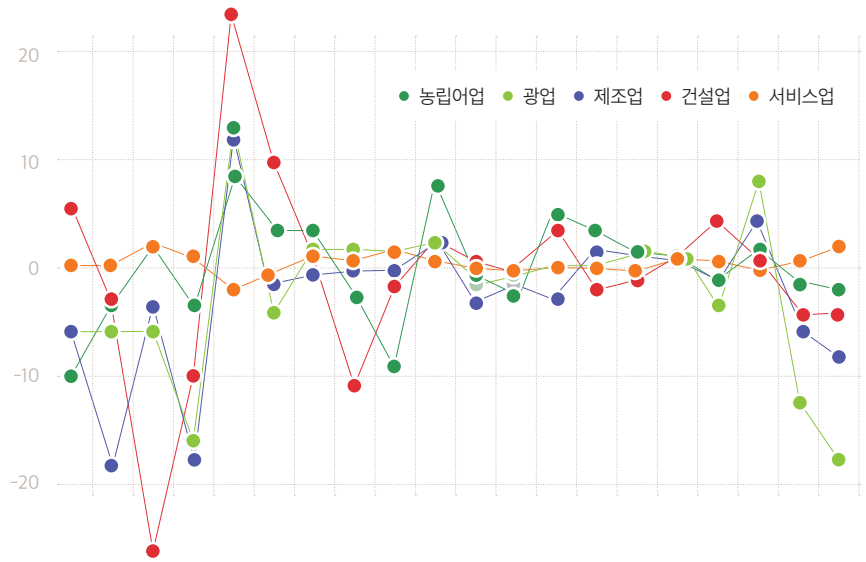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2015년, 2017년, 201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집권 초기에는 김정은 정권의 시장 활용 정책과 대외무역 및 경제개선조치의 추진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현재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부분 활성화 현상은, 주로 서비스 및 유통 경제, 건설 부문 그리고 비공식 경제 부문에 집중된 현상으로서 제조업·광업 등 실물 산업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는 크게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경제 및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산업별 성장률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대체 투자의 부족, 기술 낙후 등으로 효율성·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어도 대부분의 산업 연관관계가 유지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원유 도입량이 1980년대 말 대비 약 1/5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유 도입량의 감소가 전력난·원자재난 등을 야기해 중간재 생산의 공급 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재 제품의 공급 축소로 연결되어 산업

*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각 연도 (전년대비 증감률, %)



구분	'90	'92	'94	'97	'99	'02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농림어업	-10.5	-3.3	2.8	-2.7	9.2	4.2	4.1	-2.6	-9.1	8	-1	-2.1	5.3	3.9	1.9	1.2	-0.8	2.5	-1.3	-1.8
광업	-5.6	-5.7	-5.2	-15.8	14.2	-3.8	2.5	1.9	1.5	2.4	-0.9	-0.2	0.9	0.8	2.1	1.6	-2.6	8.4	-11.0	-17.8
제조업	-3.2	-18.3	-3.9	-18.3	7.9	-1.5	0.3	0.4	0.7	2.6	-3	-0.3	-3	1.6	1.1	0.8	-3.4	4.8	-6.9	-9.1
(경공업)	0.9	-7.6	0.1	-14.2	2.9	2.7	-0.2	-0.6	-2.2	1.3	-2.1	-1.4	-0.1	4.7	1.4	1.5	-0.8	1.1	0.1	-2.6
(중공업)	-4.1	21.3	-5.5	-20.3	10.4	-3.9	0.6	0	2.2	3.2	-3.5	0.1	-4.2	0.2	1	0.5	-4.6	6.7	-10.4	-12.4
건설업	5.9	-2.4	-26.9	-10.0	24.4	10.5	0.4	-11.5	-1.5	1.1	0.8	0.3	3.9	-1.6	-1	1.4	4.8	1.2	-4.4	-4.4
서비스업	0.7	0.8	2.3	1.1	-1.7	-0.2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0.8	0.6	0.5	0.9

[표 5-3] 북한의 주요 산업성장률 추이

연관관계의 전반적 단절 현상을 초래하였다.

[표 5-3]을 보면 199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97년도로서 광업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8%, 제조업의 성장률은 -18.8%에 이를 정도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 당시 북한

제조업의 가동률은 평균 20%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당시 김정일 정권은 출범 이후 산업 연관관계를 복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른바 '기술개건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설비들을 폐기 혹은 폐쇄하였으며,[4] 그 외의 공장·기업소들은 기술개건 대상, 신설 대상 등으로 분류해 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으로 기초 에너지 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의 대체 투자 및 신규 투자가 곤란한 상황에서 '기술개건 정책'은, '4대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라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이었다. '4대 선행 산업 부문'이란 전력, 석탄, 철도·운송, 금속·기계 산업 부문을 의미한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군수 공업과 연관된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에만 제한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1990년대의 극심한 산업 생산력 붕괴 상황에서 일단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산업성장률은 2003년까지 여전히 마이너스 추세였다가, 2004년 이후 연평균 1%대와 마이너스 2%대를 3~4년 주기로 반복하였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광업·제조업 부문 성장률은 2015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 각기 8.4% 및

4. 대안유리공장 폐쇄(2000), 남포제련소 인비료 직장 폐쇄(2000), 사리원 카리 비료공장 철거(2005)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4.8%라는 다소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17년 들어 다시 하락세에 들어갔고 2018년에는 더욱 감소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의 부분적인 진전은, 과거보다 실용적인 산업정책을 취한 결과로 평가된다. 즉 기계류 및 설비 자재의 수입 증가에 의한 일부 공장기업소의 생산 기반 확충,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결합된 국산화정책, 그리고 돈주의 역할에 기초한 시장활용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빠르게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설 사업들(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여명거리 등 평양 아파트 건설, 문수 물놀이장·마식령 스키장·해당화관 등 다수 위락시설 등)을 추진하며 화장품, 문구류, 신발·의류, 일용 식품류 등 일부 경공업 공장의 기술개건을 시행했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하며 기간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성취의 우선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기초 에너지·소재 분야의 정상화를 산업경제 활성화의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북한의 의미 있는 산업경제의 발전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 '내부 예비 동원' 등을 내세우며 산업경제의 위기를 자체적으로 돌파하려 하지만, 자본 및 투입 요소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부문별 현황

1)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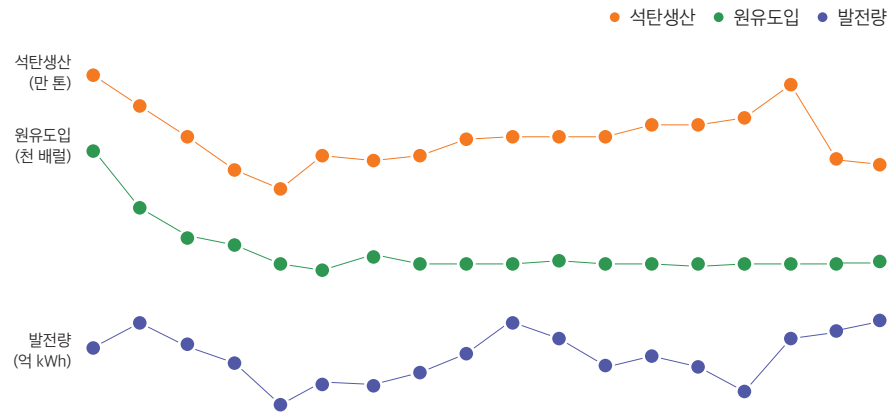
1990년대 북한 산업생산력의 붕괴는 주탄종유主炭從油[5] 체계에 기초한 화력발전 에너지 공급 체계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파괴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산업 연관관계 복구와 함께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정상화를 매년 신년사설, 최고인민회의 발표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발표 시에 우선순위로 두어 왔지만, 아직 에너지 산업의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표 5-4]의 통계청 통계를 보면, 북한 석탄·원유의 도입·발전량이 1998년도에 1990년 대비 각기 56%, 19.9%, 74.8% 수준으로까지 추락했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점진적으로 '고난의 행군'

5. 북한의 에너지정책은 수주화종水主火從이며, 화력발전 에너지는 석탄이 주도하고 석유가 보조하는 체계이다.

*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각 연도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석탄생산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00	2,580	2,660	2,709	2,749	3,106	2,166	1,808
원유도입	18,472	11,142	6,670	6,861	3,694	2,851	4,376	3,900	3,841	3,878	3,870	3,834	4,237	3,885	3,851	3,901	3,850	3,850
발전량	227	247	231	213	170	194	190	206	225	225	237	215	221	216	190	239	235	235

* 주: 중국은 2014년까지만 대북 원유공급량을 발표, 따라서 2015년 이후 북한의 원유 도입량 통계는 기존 관행 공급량에 의거해 추산한 통계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수력발전 미포함)

을 벗어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 에너지 분야 연관 산업의 지속 곤란, 외화 확보 위주의 석탄 생산 등으로 인해 에너지경제 부문의 개선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다. 2016년 기준 원유 도입량이 1990년 대비 21.1%, 전력 생산량은 86.2%, 석탄 생산량은 93.6% 수준으로 석탄 생산량만 1990년도 수준에 접근해 가고 있을 뿐이다.

전력 생산

화력보다 수력 위주인 북한의 발전소들은 1970년대 이후 발전소

현대화와 설비 대체 투자가 사실상 거의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동평양, 평양, 북창, 청진 등 주요 화력 발전소의 경우 석탄 위주 화력 발전소들로서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발전소 가동률이 타격을 받아왔다. 석탄 채굴 증가로 칼로리 함량이 낮은 저칼로리 석탄 사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화력 발전소 가동에 착화를 위한 중유 사용도 필수였다. 북한의 전력생산 부문은 여타 산업 부문에 비해 이미 1980년대부터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이 50% 수준 이하였다. 이후 1990년대 전반에는 80년대 말 대비 원유 도입량이 1/5 수준으로 추락했고, 석탄 생산량은 50% 이하로 감소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6,800여 개의 중소형 수력 발전소(평균 11kwh의 발전량)와 약 20여개 이상의 중·대형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했지만, 후진적 설비와 낙후된 기술, 일정치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수력·화력 발전소의 설비 개보수 및 터빈 교체 작업을 추진하며, 원산군민발전소, 희천발전소 3~12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예성강청년5호발전소 등 많은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2018년 12월에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를 증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속도전식 건설과 낮은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전량이 설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준공 및 개보수 이후에도 빈번하게 가동이 중단되어, 많은 노력을 동원하여 건설한 수력 발전소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2005~2010년까지 약 5% 늘어났던 전력 생산량은, 2011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6년도에 2010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전력 문제 해결을 2016년 5월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전력산업 복구가 난항을 거듭하자, 북한에서는 민간 에너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개별 가정, 소규모 서비스 기관·공장 기업소들이 중국으로부터 11W, 50W, 100W 등 소형 태양광 집열판과 축전지·변압기 등을 수입해 일상생활 및 기관 운영, 소규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태양광 집열판 수요가 늘어나자 2~3년 전부터 북한은 소형 태양광 집열판들을 일부 생산·공급하고 있다.

석탄 생산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외화난으로 원유 도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의 정상화는 곧 석탄 생산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대규모 탄광들은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 수해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붕괴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신규 탄광 개발보다는 소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소형 탄광 개발에 주력해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해 왔다. 그리고 대규모 홍수

피해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해 탄광들이 부분 복구되고, 중국 자본에 의한 설비 투자가 일부 탄광에 유입되면서 석탄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폐갱된 소규모 탄광에 대한 '돈주'의 투자도 나타나 석탄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까지 석탄은 대중 수출 상품 제1위의 품목이 될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났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규모 또한 2010년 464만 톤(3.9억 달러)에서 2016년 2,244만 톤(11.7억 달러)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석탄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석탄생산량은 2017년 2,166만 톤, 2018년 1,808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석탄산업 부문은 주력 수출 부문으로서 당·군 등 특권기관이 주로 장악하였고, 이 기관들은 외화벌이에 주력할 뿐 석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투자를 해오지 않았다. 북한의 석탄산업은 북한 석탄 수출을 전면 규제하도록 한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71호(2017.8.5.)의 영향을 받아 향후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도입

냉전 시대에 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한 구상무역 방식으로 공급해 주었는데, 1980년대 말경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약 250만 톤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체제 전환으로 북한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원유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평균 공식적으로 50여 만 톤을 공급해 왔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식 공급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 왔는데, 중국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공급량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평안북도에 소재한 봉화 화학 공장이 기존처럼 가동되고 있고, 장마당 유통 석유 가격이 2017년 말까지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볼 때, 중국의 통계 미발표 이후에도 중국이 대북 원유 및 석유 관련 제품을 공식 수출을 통한 경로 외에 무상 원조, 장기 차관, 밀무역 등 다양한 비공식 방식으로도 공급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도 블라디보스토크-선봉 간 해운항로 및 북·러 간 철로를 통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정제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2016년 말까지 외부로부터 상당한 양의 원유를 도입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7년 9월 이후 북한의 원유·석유 관련 제품 도입량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2017.9.11.), 제2397호(2017.12.22.)가 채택된 이후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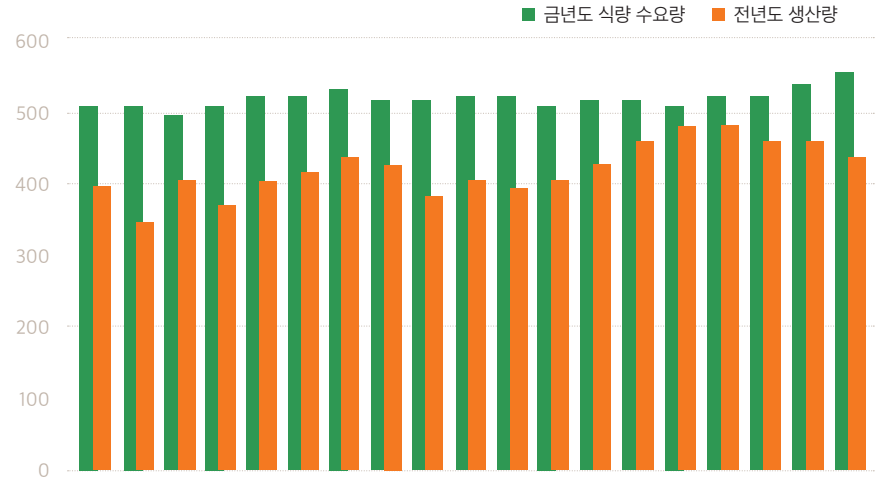
2) 식량

북한의 식량 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 집단 영농 생산방식으로 인한 농

업생산력 침체 등으로 인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이미 정량 배급 기준에 평균 200여 만 톤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7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한 546g로 줄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등으로 기근 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 자료: 농촌진흥청(1995~2010, 1~12월 기준), WFP/FAO(2011~2018, 11월~10월 기준), 통계청 (단위: 만 톤)



구분	1995	1997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년도식량 수요량	534	530	536	548	545	560	543	540	548	546	534	540	543	537	549	550	561	552	575
전년도 생산량	413	369	395	425	431	454	448	401	431	411	425	466	492	503	508	480	515	472	417
금년도 부족량	121	161	141	123	114	106	95	139	117	135	109	74	51	34	41	70	46	80	136

*주: ① 1995~2010년간 식량수요량은 농촌진흥청이 추계한 것으로, 감량배급(성인 1일 546g)기준으로 계산.
② 2011년 이후로는 WFP/FAO가 추계한 것으로, 1일 최소 칼로리 기준량(1인당 458g)기준으로 계산.
③ WFP/FAO는 부족량을 수요량-(생산량+도입량)으로 계산하여 발표.

[표 5-5]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및 우호무역이 중단되고,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 원자재 생산 급감,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급감하면서 북한은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5-5]에서 보듯이,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995~1997년 3년간 식량 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함으로써, 감량배급(1인당 546g/일) 기준 식량 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북한은 양호한 기상 조건,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지원, 국제사회의 농업 협력, 자체 농업 기반 복구·조성 노력(자연흐름식 물길 공사, 토지 정리 사업) 등에 힘입어 4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480만 톤 수준의 곡물 생산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식량 부족량은 연평균 43만 톤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 북한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상업적 식량 수입량과 주민들의 소燒토지 경작물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 규모는 보다 낮아지지만, 식량 공급 부문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농업 부문이 여전히 열악한 농업 인프라 기반 위에 대규모 인력 투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상 조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서 식량 문제의 완전 해결을 농업 분야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5-5]의 북한 식량 수요량 추계는 최소 칼로리 기준으로서, 정상 칼로리 대비 추계해 보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보다 확대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식



식량증산 독려 선전화


북한의 소(燒) 토지(화전)

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 국가에 20여 년 넘게 포함시키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생산량이 연평균 48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에서 실용정책을 일부 추진했기 때문이며, 시장 활성화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과거보다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 자재의 대중국 수입과 시장을 통한 조달이 늘어나고, 이른바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라는 새로운 농업관리 제도가 시행착오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이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대외무역

냉전 시기 북한의 자력갱생 발전노선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의 하나로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다.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며, 본격 경제난 도래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0년의 42억 달러가 최대였다. 구소련과의 사회주의 우호무역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원유 등 전략 물자들을 공급해 주었으므로, 구소련은 북한의 대외무역국 중 약 80%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도에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된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조응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과 새로운 대외경제관계를 모색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지체로 구 사회주의 경제권에만 집중된 대외무역 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외화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율 추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00년 19.7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외무역이, 2005년 30억 달러, 2010년 41.7억 달러, 2014년 76.1억 달러로 크게 성장해 나갔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도 2016년에는 6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 55억 5,000만 달러(남북교역 제외)였으며, 2018년에는 28.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48.8% 감소하였다.

종합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연평균 무역 규모는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2011~2016년간 68.1억 달러로서 김정일 정권 후반기(2006~2010)의 연평균 34.6억 달러에 비해 2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연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과 노동력 수출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획득된 외화가 수입 능력 확대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이 내수시장 및 소비시장의 확장을 초래해 무역 수요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증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무역 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외화 획득 경로도 다양화시키는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2011~2016년까지 보여준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은 북한 경제의 실물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대중국	전체	대중국	전체	대중국	전체
2000	37	556	451	1,413	- 414	- 857
2002	271	735	467	1,525	- 196	- 790
2004	582	1,020	795	1,837	- 213	- 817
2006	468	947	1,232	2,049	- 764	- 1,102
2008	754	1,130	2,033	2,686	- 1,279	- 1,556
2010	1,188	1,513	2,278	2,660	- 1,090	- 1,147
2012	2,485	2,880	3,528	3,931	- 1,043	- 1,051
2014	2,841	3,164	4,023	4,446	- 1,182	- 1,282
2015	2,484	2,696	3,226	3,555	- 742	- 859
2016	2,634	2,820	3,422	3,710	- 788	- 890
2017	1,650	1,772	3,608	3,778	-1,958	-2,006
2018	194	240	2,528	2,600	-2,334	-2,360

[표 5-6] 연도별 북한의 대중 · 전체 수출입 및 무역수지



훈춘 권하 세관 앞 중국 화물차들



단동-신의주간 압록강 철교 위 무역물자 차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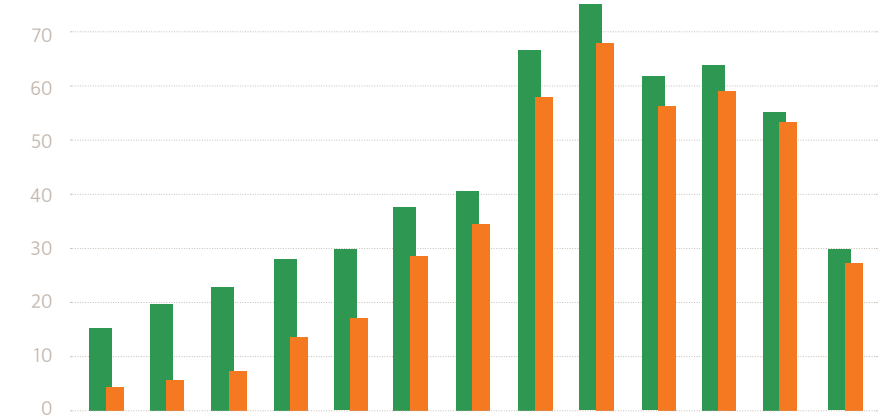
수지 적자는 1990년대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년대 이후 매년 8~1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한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준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년 누적되는 무역수지 적자를 무역 외 수지(노동력 수출, 관광 수입, 비공식 무역 등)로 대체해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북한 무역 규모의 성장이 광물자원 및 위탁가공 제품의 수출과 온갖 종류의 공산품·완제품, 식량·원유 등 전략 물자의 수입이라는 후진국형 무역구조의 고착 속에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출 구조에서 무연탄·철광석·아연 등 광물자원 수출은 매년 55~65% 비중을 차지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의류 위탁가공 제품이 제2위, 수산물이 제3위의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광물자원(50.3%), 위탁가공 제품(25.8%), 수산물(6.9%) 등 3대 수출 상품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 중 83%로서 편중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전자 및 IT기기 제품, 차량, 각

종 생활용 공산품, 공장 및 건축용 설비 자재, 위탁가공용 섬유류, 식량·원유 등 다양한 제품들을 어느 한 제품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입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 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중국에 편중되어 가는 구조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0년 24.4%에서 2016년 92.7%, 2017년 94.75%, 2018년 95.8%로 증가해([표 5-7]) 사실상 대외무역 자체가 대중국 교역으로 고착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강화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단위: 억 달러)



구분	1999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교역 규모	14.8	19.7	22.6	28.6	30.0	38.2	41.7	68.1	76.1	62.5	65.5	55.5	28.4
북·중 교역 규모	3.7	4.8	7.3	13.7	16.7	27.8	34.6	59.3	68.6	57.1	60.5	52.6	27.2
비중(%)	25.0	24.4	32.3	47.9	55.7	72.8	83.0	87.0	90.1	91.3	92.4	94.8	95.8

*주: 2015년 이후 북·중 교역액에 원유 수입 추정치(2015년 2.8억 달러, 2016년 2.3억 달러, 2017년 2.8억 달러, 2018년 3.1억 달러)를 포함시켰음.

[표 5-7]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의 비중

북·일 교역·남북경협이 중단된 풍선효과, 중국 동북3성 지역 경제와 북한 경제의 상호 수요 접근, 중국의 대북 전략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은 제6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75호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제2375호 제재로 북한은 무연탄을 비롯한 광물자원, 섬유 위탁가공 제품, 수산물 등 수출 금지, 신규 노동력 수출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97호는 산업용 기계, 철강 등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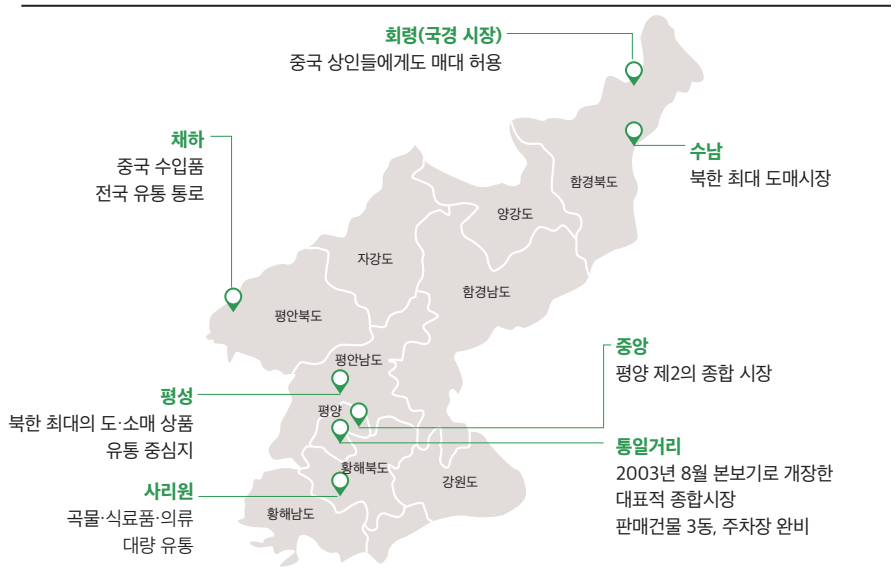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1. 시장에 대한 정책

1) 시장화 현상의 대두

북한 경제에서 시장화 현상은 1980년대 중후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자재 공급과 배급 제도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자, 2003년 북한 당국은 10일장 형태의 농민시장을 상설시장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농민시장은 계획경제 하에 운영되던 공식시장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암시장 형태인 '야시장', '장마당' 등으로 발전하여 당시 불법 거래 상품이었던 쌀·옥수수 등 식량과 공산품 등을 매매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림 5-1]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지방의 장마당

북한 주민들은 처음 배급제가 중단되었을 당시 생존을 위한 식량 획득 목적으로 '단순 거래자'로서 농민시장에 등장했지만, 여러 차례의 교환활동을 통해 부의 축적을 경험하며 화폐 자본을 축적해 나갔고, 일부는 상업자본을 축적하여 '돈주'로도 성장해 나갔다. 장마당

에는 공장·기업소 자산의 전유, 약탈·탈취 등을 통해 유입된 재화, 텃밭·소토지 등에서 경작된 농축산물, 개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품,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 북·중 간 공식·변경 무역 및 밀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입된 재화들이 공급되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무렵 심각한 식량난과 계획 시스템의 붕괴에 직면하게 되자 북·중 간 접경지대의 통상구를 개방하고, 국가지정 무역기관 외에 정부 부처인 성省, 기관, 군부대, 지방의 도 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들도 대외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경에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진전되었다. 주요 시·도에 대규모 도매시장과 함께 특화된 시장들이 발달되어 나갔다([그림5-1]). 주민들의 장사 형태도 '등짐 장사'로 출발해 점차 지역 간에 부족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장사인 '되거리 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판 장사' 등에서 상설시장에서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분화·발전되어 나갔다.

한편, 1990년대 말경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당·군 등 주요 특권기관들이 특권을 활용해 외화벌이 및 시장 활동을 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자재 공급 체계가 전반적으로 마비되자 각 경제 단위들에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여하고 독립채산제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특권기관들에는 주요 외화벌이 원천들을 장악해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들이 본래 생산·경영 활동과 상관없는 무역활동 및 상업활동 등을 통해 금액지표 납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권기관들은 대규모 무역기관으로서 북한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 나갔다.

현재 북한의 계획경제 하에 운영되는 시장은 생산물시장뿐이다. 생산요소시장(자본·노동·토지시장)은 공식적 운영을 허용하지 않아 부를 축적한 개인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운영 확산되고 있다.

생산물시장으로서 북한 전역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과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2018년 기준 46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일 개장하여 통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산품 및 식량 등의 다양한 상품이 거래된다. 시장 운영을 통해 북한 당국은 장세(매대세)를 징수하고 있다. 시장에서 매대를 빌려 공식적으로 장사하려면 장세를 지불해야 하며 상인 1인이 납부하는 장세는 품목별, 지역별로 다르다.[6]

시장의 과잉확산을 막기 위해 김정일 시기 2005~2009년까지 시장억제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북한의 시장은 여전히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을 김정은 정권은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6. 장세는 매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에 따라 다른데, 채소류, 생선류, 의류, 공산품 등의 순에 따라 최소 5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시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장세가 다른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높다. 홍민· 차문석, 「북한 전국 시장 정보」(서울: 통일연구원, 2016) 및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자료.

2) 김정일 시기의 시장화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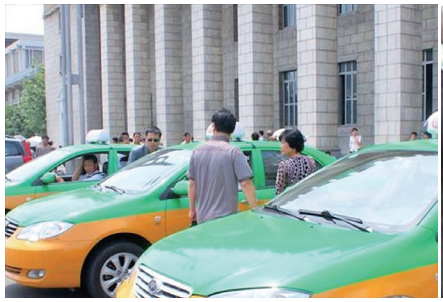
1990년대 시장화 현상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으로서 북한 경제의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라는 큰 모순을 야기했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을 국가 관리 내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2002년 시장 기능을 부분 인정하는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이후 7.1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에 분권적 경영 권한을 일부 부여하고, 기존에 비합법적 영역이었던 소비재 시장을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제도화하며, 기업 간 원자재·생산재 교류가 가능한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의 개설을 허용한 조치였다.

그러나 시장 기능을 부분 제도화한 7.1 조치 이후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종합시장 바깥의 장사활동(메뚜기 장사, 주택가·골목장사, 방문 판매) 및 개인 경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업종(노래방·PC방, 숙박업, 운송, 목욕탕, 식당, 개인 수리업, 자전거·오토바이 배달 등) 및 자영업이 발전되어 나갔다. 공장·기업소들은 기존 업종과 생산활동을 아예 변경해 국가기업이익금을 납부하거나, '돈주'의 투자를 유도해 '돈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 몫을 받아 국가기업이익금을 내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7.1 조치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상호 공생하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시켰다.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북한 당국은 2005년 하반기 7.1 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통제해 나갔다. 김정일이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언급한 이후, 결국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종합시장조차 철폐하려 했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재정 수입 증대와 함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의도했던 화폐개혁은 2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가계 경제가 시장활동을 통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계획경제 공간도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수입조차 시장의 토대 위에서 상당 부분 달성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은, 합법적 비공식경제에서 비합법적 비공식경제 공간으로 양적으로 확산되고, 결국 합법적 공식경제 영역에까지 침투해 계획경제와 시장이 상호 활용하는 구조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김정은 시기의 시장화와 대응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경제가 이제는 결코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할 수 없고, 시장이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돈주'들과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활용해 김정은 정권의 단기 업적을 가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평양역 앞의 대동강택시


벌이버스(시외버스, 2013 해주)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이 오늘날처럼 양적·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돈주'가 중심 역할을 하는 사금융 시장의 발달도 한몫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시장화 확장기에는 주로 환전과 고리대금업 등을 행했지만, 점차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는 '북한판' 화폐 자본가로 변모해 갔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출, 국영기업의 계획 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들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돈주'들은 사금융 분야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 분야에서의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화폐 자산을 축적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시외버스·택시·물류 등 지방운수업, 도소매업, 국영상점 등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 공식경제 부문에까지 투자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돈주들은 공식 국영기업소, 기관·공장 등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임노동도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한 다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러한 돈주들의 역할 확대와 함께 북한 당국도 시장을 묵인·활용하면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첫째, 국영기업소와 국영상점과 같은 공식경제 부문들이 돈주의 투자를 받아 직접 시장지향적 경영활동을 행하고, 국가기업이익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때때로 돈주들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지만, 공식경제 부문의 경제활동이 돈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일부 시장을 공식제도 내로 편입(2003.3. 종합시장 공식허용)시킨 이후, 국가기관들이 직접 다양한 형태로 시장활동에 개입하는 등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의류, 신발, 식품 공장 등을 방문하여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상품의 생산 판매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상점을 건립하는 등 주민들의 소비를 국영부문으로 흡수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도입해 이것이 국영기업소, 국가기관들의 시장과 연계된 활동을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란 조선신

보(2013.5.10.)에 의하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 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 조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이 2014년 경제일꾼과 담화한 이른바 ‘5.30 담화’ 그리고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화하라는 언급을 통해 확인되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농업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상업 분야에서는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최종 노동 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 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다. 또한,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 시 현금 사용을 허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 바 있다.

김정은 시기 시장화 정책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포전담당책임제’ 등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대외 개방정책

1) 모기장식 개방과 4대 특구 개설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 간 연결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으로 제공받아왔던 원유, 코크스, 기초 원자재 등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 개방론’을 내세우고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법 등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처음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계무역, 수출 가공, 관광 및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총 투자 건수 119개에 47억여 달러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2000년 12월 말까지 약 1억 2,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그쳤다.[7] 그나마도 대부분 호텔, 식당, 카지노, 운수업, 상업 등 서비스 분야에 편

7. “2002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KOTRA, www.kotra.or.kr/main/info/nk.

중되었다. 투자자도 화교 자본이 약 70%, 조총련 자본이 약 20%를 차지하여 서방 자본의 투자는 미미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자력으로는 1990년대 붕괴된 산업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변방의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갔다.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신의주·개성·금강산까지 합해 4대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신의주는 특수 행정 단위로 중앙의 관할 아래에 두지만 자율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정치제도 면에서는 홍콩식을, 경제특구제도 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심천 특구를 선별 혼합한 방식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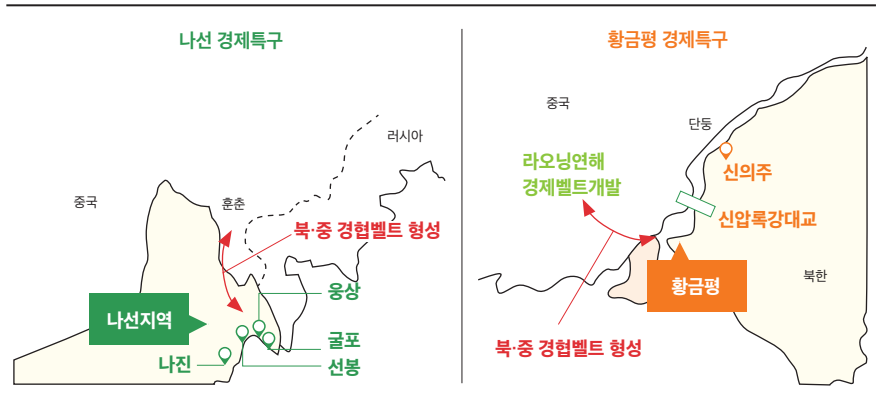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획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산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자본이 단독 투자·개발하는 형태의 특구로 개설되어 가동되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때문에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이래 중단되었으며, 금강산관광지구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2008년 8월 이래 중단되었다.

2) 대중국 개방 확대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한의 5.24 조치에 의해 남

북경협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변화시켰다.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시키고,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나선·황금평·위화도를 중국과 함께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 북한 장성택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동 착공식을 개최하고 '조·중 라선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이후 요강)이라는 공동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었다. 또한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 간 교량,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결 및 증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과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양 지역 경제특구 공동개발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경우 형식상 관리위원회 건물만 건축된 후 사실상 수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림 5-2]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신압록강대교('15.2월 촬영)



집안-만포간 철로('17.7월 촬영)

나선 경제특구의 경우 북·중 간 합의된 소규모의 몇 개 프로젝트만 추진되었다. 즉 중국이 사용하는 나진항 1호 부두 개보수 및 창고 건설, 북한 원정리 세관과 나진항 간 도로 확장(2차선→4차선 확장), 길림성-나선시 간 고효율 농업 시범구 협력사업 일부 등만 전개되었을 뿐이다. 중국의 나선 경제특구 내 자본 투자는 주로 식당·가라오케·숙박업·물류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이고,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 투자는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나선 경제특구의 개발보다는 나진항을 이용해 자국 남방 지역으로의 물류 이동에 필요한 원정리-나진 간 도로 확장·개선과 제2두만강대교 건설에 주력해왔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2013년 5월까지 나선 경제특구의 외자 유치는 약 4.1억 유로(약 4.8억 달러)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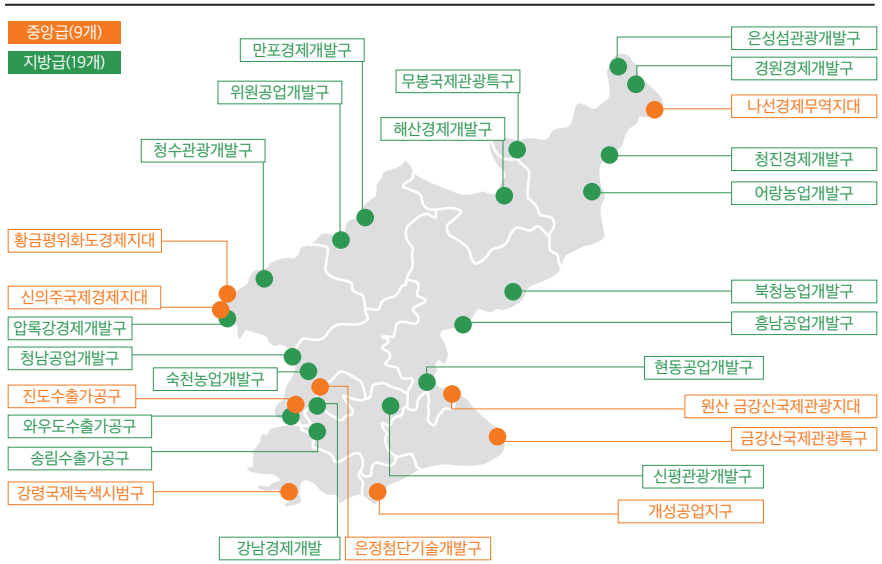
중국은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2011년 북·중 간 합의되었던 통상구 연결 다리와 도로의 개보수 및 신설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압록강대교를 완공(2014, 현재 미개통)하고 신두만강대교를 개통(2016)하는 한편, 중국 집안-북한 만포 간 다리를 신축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도문-북한 남양 간 다리를 새로이 건설 중이다. 대북제재의 강화에 상관없이, 중국의 필요에 의한 소규모 접경지대 연결 인프라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2~3년 사이 통상구 다리를 이용한 중국인의 대북 자가용 관광, 1일 혹은 반나절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도문, 집안, 훈춘 등 중국 접경도시에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북·중 변경 경제합작구도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3) 경제개발구 신설

김정은 정권은 나선,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4대 중앙 특구 외에 지방에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현재 경제개발구는 중앙급 9개와 지방급 19개 등 총 28개[8]이다. 이중 공업개발구 15개, 농업개발구는 3개, 관광개발구는 6개, 수출가공구는 3개, 첨단기술개발구는 1개 등이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추진은 기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보다

8. 북한의 경제개발구 중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하나로 보아 27개로 보는 관점도 있다. 또한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2018년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총 27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상태로, 개성공업지구는 2018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북한의 경제개발구 중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하나로 보아 27개로 보는 관점도 있다. 또한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2018년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총 27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상태로, 개성공업지구는 2018년 자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5-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확대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모방해 경제특구·개발구를 중앙급, 지방급으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종합 경제특구가 아닌 각 지방 정부들이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기초로 특화된 경제개발구들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과는 달리 경제개발구 지대 밖의 북한 기업이 새로운 경제특구·경제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경제개발구법 제20조), 지대 내의 외국 자본이 지대 밖의 북한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경제개발구 기업 창설 규정 제21조)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나진 및 개

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대 밖 북한의 기업들과 위탁가공 내지는 생산 공정의 분업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선포된 이후 어느 한 곳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경제개발구 신설을 선포한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시장 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중단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등도 겹쳐 경제개발구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외교정책을 시행하며, 최고지도자가 개혁·개방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산업·시장의 연계를 위한 대내 시장 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고, 중앙·지방 정부가 외자 유치에 필수적인 법·제도 및 인프라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외자 유치의 관건은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인프라 등 자본 유치의 여건이 마련되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는 종합 계획을 제시하고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구상은 본격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VI

제6장
북한 사회

제1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제2절 **주민생활**

제3절 **인권**

제1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교한 사회의 특징은 비슷한 시대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세계에는 대비되는 두 종류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대다수 자본주의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사회이다.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같은 사회주의 사회인 중국·베트남·쿠바 사회와는 다른 모습도 갖고 있다.

1. 북한 사회의 특징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정당, 집단이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전체 주민의 의지와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사회주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한다.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도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집권 정당으로서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사회와 다르게 북한 사회는 수령이 당·국가 안에서 군림하는 사실상 1인 지배체제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 북한 사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안의 여러 정치세력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었으나 6.25전쟁, 1950~1960년대 치열한 권력투쟁 등을 거치면서 점차 김일성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됐다.

이러한 권력의 1인 독점은 북한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다. 알바니아의 호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불가리아의 지브코프처럼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1인 장기집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쿠바 사회에서도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가 수십 년간 권력을 이어서 장악했었다. 하지만 북한 사회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 권력이 승계된 경우는 없다.

북한 사회에서는 '수령'을 정치적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수령이 당·국가·군대에서 공식적으로 차지하는 직위는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마다 다르게 변화해 왔다. 현재 김정은의 공식 직위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운송수단, 산림, 지하자원, 원료와 같은 중요 생산수단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유구조를 기반으로 생산력 발전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중요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가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자원 대부분이 '시장기구'에 의해 배분되는 데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관할하는 '계획기구'를 통해 배분된다.

그리고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중앙계획당국의 지도, 명령 지표, 국정가격 등이 경제활동 주체의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이러한 특성은 경제의 비효율성과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시장기구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중국·베트남 당국은 1980년대 이후 사영 기업을 허용하며 사회주의 소유구조까지 개혁해나갔다.

이와 달리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구조가 정착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눈에 띄는 경제개혁 없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해왔다. 북한 사회 경제구조는 1990년대

초·중반 탈냉전에 따른 사회주의 시장 상실, 거듭된 자연재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누적, 노동자·농민의 생산의욕 저하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셋째,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이해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기구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집단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다.[1]

북한 당국은 1950년대에 농업·상공업 부문에서 개인 소유를 없애나감으로써 개인주의가 성장할 토대를 약화시켰고, 1959년에는 집단주의적 사상 개조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주의 교양에 주력했으며, 1970년대에는 조선노동당과 근로단체(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2]에서의 조직생활과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각종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 당국이 1960년대에 내놓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는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를 상징하는 구호이며,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 시 관람하여 화제가 됐던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2002년 초연되어 2013년까지 총 9회(2003·2004·2006년 제외) 진행된 「아리랑」 등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도 북한 당국이 북한 사회의 집단적 결속력을 과시하는 대표적 문화적 상징이다.

한편,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개혁·개방 이후 집단주의적 대중운동이 자취를 감춘 데 비해, 북한 당국은 천리마작업반운동 이래 오늘날까지 대중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주의자로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시작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1990년대 후반 '제2의 천리마대진군', 2016년 시작된 '만리마속도창조운동' 등이 이러한 대중운동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2. 북한 사회의 변화

1990년대 초·중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 사회의 정치적 특징인 수령체제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 중심의 경제구조, 집단주의 중심의 이데올로기 지형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시장기구가 계획기구의 보완재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과거 북한 사회에도 시장은 있었다. 1950년대 말에 계획적으로 생산·분배

1. "북한 헌법의 '집단주의' 관련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3조)
2. 북한 당국은 2016년에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개칭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도 1996년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꾼 뒤, 2016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했다.

하는 경제구조가 갖춰지기는 했지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분배할 수는 없었다.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더라도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이 허용했던 시장이 바로 '농민시장'이다. 농민시장에서는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 생산했거나 개인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일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팔았다. 단, 양곡과 공업제품 거래는 금지했다. 국가는 농민들이 농민시장에서 거둔 수입으로 부족한 소비품을 구매하고, 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은 농민시장을 통해 국가가 채 보장해주지 못한 부식물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순기능 때문에 농민시장을 허용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국가의 식량배급이 끊기고, 국영상점 진열대가 점차 비어가자 주민들은 농민시장뿐 아니라 당국 관리를 벗어난 암시장으로까지 몰려가 부족한 양곡과 생필품을 구매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시장기구를 계획기구의 보완재로 수용했다. 2003년 3월에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종합시장에서는 농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고, 농민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됐던 양곡, 공업제품 등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상인은 시장관리소에 시장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월 소득액 신고 뒤 소득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 '국가납부금'도 국가에 내야 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2018년 기준 460여 개의 시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

구분	구분	구분
생산수단 소유	국가·협동적 소유 중심	'사실상의 사유화' 진전
자원배분	계획기구 중심	시장기구 역할 확대
의사결정	타율적 의사결정 중심	의사결정 분권화

[표 6-1] 북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둘째, 이처럼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 사회의 소유구조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사실상의 사유화'다. '사실상의 사유화'란 '법률상의 사유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요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가 법·제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시장 활동에 적극 참여한 개인이 화폐를 무기로 국가·협동단체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북한 사회에서 사실상의 사유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주체는 '돈주'이다. 돈주는 북한 사회 시장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화폐를 축적한 신흥 부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북한 사회에서 돈주는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돈, 자재, 비료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나누거나, 기관 명의를 빌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예 비공식적으로 사영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4]

다른 사회주의 사회 당국과 달리 북한 당국은 아직 '법률상의 사유

3.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 공식시장 증가, 최소 482개", 「연합뉴스」 2018년 2월 4일.
4.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pp. 58~76.

화'나 사적 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은 2014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개정해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할 수 있다."(제38조)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돈주의 국영기업 투자를 합법화하였다.

이처럼 돈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북한 사회에서 양대 계급인 노동자, 농민에 더해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곧, 과거 중국·베트남 사회의 당국이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사영기업을 합법화했던 선례를 볼 때 북한 사회에서도 개혁·개방 진전에 따라 돈주의 국영기업 투자 합법화에 이은 사영기업 합법화, 사적 고용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개인주의가 성장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은 조직생활에 열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 부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은 개인 부업을 통해 만든 생산물을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와 다른 개인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김정일이 1990년에 "일부 사람들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개인리기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로,[5] 1990년대 들어 개인이기주의 성장, 개인이기주의에 뿌리를 둔 '비非사회주의적 현상'(국가재산 유용, 탐오낭비, 부정부패행위 등)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주민 이동이 늘고 출근율은 낮아지면서 집단주의의 제도적 기반인 조직생활과 정치사상교양이 약화되고, 반면에 개인주의의 토대인 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면서 개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청년기를 보낸 북한 사회의 '기성세대'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심리,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염세적 감정, '개인의 삶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삶의 가치로의 변화에 대한 혼돈감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바로 아래 세대, 곧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북한 사회의 '청년세대'는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아직 시장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교류하고, 외래문화에 민감하며, 개인적 소비 욕망을 드러내는 등 윗세대와는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6]

실제 중국 사회에서도 경제이행기economic transition에 시장개혁에 따른 사영기업 증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접촉 증

5.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1990. 6. 2.)", 「김정일 선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47.

6. 김성경, "북한 '사이(in-between)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pp. 169~193.

대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청년들의 개인주의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7]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개인주의와 소비 욕구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다.

7. Eric Fish, "Chinese Youth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 Changing Behaviors and Values", 「북한 장마당 새 세대 :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2015. 6. 23.) 자료집, pp. 87~90.

제2절
주민생활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생각과 행위는 그 사회의 정치·경제 구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생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특징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며 필수적이다.

제1절에서 알아보았듯이 북한 사회의 경제구조는 과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현재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뚜렷해지고, '사실상의 사유화'도 확산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집단주의가 지배적이었던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도 개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북한 사회의 주민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 주민생활을 크게 조직생활, 의식주, 여가와 명절, 보건·복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조직생활

다른 사회의 주민생활과 비교할 때 북한 주민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애 과정에 걸쳐 조직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난과 시장화 진전,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조직생활 참여도가 과거와 같지는 않다. 그래도 북한 당국은 통치 안정, 집단주의 유지, 경제적 동원 등을 위해 여전히 조직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는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탁아소에서 생애 첫 집단생활을 하게 되고,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면 공식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공식 조직생활은 소학교 2학년(7세) 소년단 입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년단 입단식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4월 15일), 소년단 창건 기념일(6월 6일) 등 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년단원의 징표는 빨간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이다.

소년단 생활은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지고, 14세가 되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 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추가적으로 시(군·구역)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북한 당국은 성장하는 개인주의, 청년세대의 다양한 문화 수요 증대 같은 변화에 대응해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 조직생활,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양 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노동당은 제7차 당대회(2016. 5. 6.~9.)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청년운동 강화"를 "당과 국가의 최대의 중대사, 혁명의 전략적 요구"라고 새롭게 규정하기도 했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조선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연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이라면 조선노동당 입당은 선택적이다. 입당을 위해서는 1년 동안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화선입당火線入黨, 곧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당하기도 한다.

조선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당세포는 노동당의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다. 한 직장에 당원이 5명도 안되면 별도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들기

도 한다.

31세 이상 직업을 가진 노동자와 사무원은 조선직업총동맹 구성원으로서, 협동농장 농민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구성원으로서, 전업주부 여성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구성원으로서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주민은 주별·월별·분기별 및 연말에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는 주로 10~15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며, 조선노동당에서는 당세포, 근로단체에서는 초급단체 혹은 분조로 나누어져 실시한다.

2. 의식주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모습은 비록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은 국영상점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하고, 식량은 국가로부터 배급받으며, 국가가 지어서 배정한 주택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을 거친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의식주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도 주민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첫째, 지금도 국영상점에서 의류와 생필품을 공급받거나 구매할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장(또는 장마당)	113(89.0)	126(95.5)	135(90.6)	130(89.0)	126(91.3)	114(86.4)	79(90.8)
국영상점	1(0.8)	1(0.8)	0(0.0)	0(0.0)	0(0.0)	1(0.8)	0(0.0)
직매점	0(0.0)	0(0.0)	1(0.7)	0(0.0)	0(0.0)	0(0.0)	1(1.1)
백화점(외화상점)	1(0.8)	0(0.0)	0(0.0)	5(3.4)	2(1.4)	4(3.0)	0(0.0)
외국에서 직접 구입	8(6.3)	5(3.8)	6(4.0)	9(6.2)	9(6.5)	10(7.6)	3(3.4)
국가선물/무상배급	0(0.0)	0(0.0)	1(0.7)	0(0.0)	0(0.0)	0(0.0)	0(0.0)
무응답/응답오류	4(3.1)	0(0.0)	6(4.0)	2(1.4)	1(0.7)	3(2.3)	4(4.6)
합계	**127(100.0)**	**132(100.0)**	**149(100.0)**	**146(100.0)**	**138(100.0)**	**132(100.0)**	**87(100.0)**

* 조사년도, 조사대상은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

※ 출처: 천경효 외, 「북한 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46.

[표 6-2] 북한 주민의 의류 구입경로

수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 주민은 시장을 이용한다. 2011년 이후 북한 사회를 벗어난 북한이탈주민 중 90% 이상은 북한에 살 때 주로 입는 옷을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증언한다([표 6-2]).[8]

둘째, 북한 주민 중에서 식량 배급에 많이 의존했던 이들은 도시에 사는 노동자이다. 오늘날 도시 노동자들은 식량 배급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경작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8. 천경효·김일한·조성은·최경희·임경훈·조용신, 「북한 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p. 43~47.

식량 배급제가 무너지자 도시 노동자들은 도시 인근에 '소燒토지'를 일궈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고, 자가소비 이후 남는 식량은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9] 소토지 경작은 아직 북한 사회에서 불법이지만, 이제는 협동농장 농민들이 시장에서 파는 식량과 함께 주민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요소가 된 상황이다. 이러한 식량 자급 노력 결과 주민의 식량 사정도 급격한 악화 징후 없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다.

셋째, 국가가 지어서 배정해 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사는 게 과거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주거생활이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 밑천이 필요하거나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 식량 확보가 절실한 사람들은 국가 소유의 주택을 비합법적으로 매매한다. 반대로 시장에서 돈을 번 주민은 좀 더 생활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비합법적인 주택 거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합법적 주택 매매는 '살림집이용허가증'(약칭 '입사증') 발급 권한을 가진 부서의 간부들, 전문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0] 또한 국

9. 정은이,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pp. 265~280.
10.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pp. 304~308.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에서 배정받음	36(28.6)	19(14.4)	34(23.6)	29(20.0)	28(20.3)	24(18.3)	19(21.8)
내가 돈 주고 샀음	58(46.0)	88(66.7)	77(53.5)	80(55.2)	68(49.3)	77(58.8)	33(37.9)
내가 직접 지었음	13(10.3)	9(6.8)	10(6.9)	7(4.8)	21(15.2)	8(6.1)	14(16.1)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13.5)	13(9.8)	20(13.9)	25(17.2)	19(13.8)	19(14.5)	15(17.2)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1.6)	3(2.3)	3(2.1)	4(2.8)	2(1.4)	3(2.3)	3(3.4)
무응답/응답오류	1(0.8)	0(0.0)	5(3.3)	1(0.7)	0(0.0)	1(0.8)	3(3.4)
합계	**127(100.0)**	**132(100.0)**	**149(100.0)**	**146(100.0)**	**138(100.0)**	**132(100.0)**	**87(100.0)**

* 조사년도, 조사대상은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
※ 출처: 천경효 외, 「북한 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 51.

[표 6-3] 북한 주민의 살림집 장만 경로

가기관이 '돈주', 개인건설업자 등과 연합해 주택을 신축한 뒤, 결혼으로 자식을 분가시켜야 하는 경우처럼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11]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주택 매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됐다고 증언한다.[12] 이 시기는 종합시장이 설치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와 일치한다. 북한에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약 50%에 이를 정도로([표 6-3]) 이제 북한 주민에게 주택 마련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이 해결

11.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7, pp. 40~45, pp. 112~116.
12. 장용석 외, 「북한 사회변동 2016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 55~56.

세대식구 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합계
1명	32,283	47,675	18,350	858	**99,166**
2명	252,325	325,257	166,246	7,457	**751,285**
3명	383,514	532,520	248,767	10,466	**1,175,267**
4명	672,731	944,701	471,396	18,161	**2,106,989**
5명	416,459	493,876	234,994	10,410	**1,155,739**
6명	177,791	187,153	87,328	4,164	**456,436**
7명	40,851	37,973	21,460	1,005	**101,289**
8명 이상	12,461	15,280	13,168	391	**41,300**
합계	**1,988,415**	**2,584,435**	**1,261,709**	**52,912**	**5,887,471**

※ 출처 : 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2009), 표 46.

[표 6-4] 북한의 살림집 형태와 세대 식구 수 (2008년)

해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면, 당시 북한 사회에서 한 세대의 세대원은 '4인'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1동 다세대 연립주택이었다([표 6-4]). 그런데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으로 2015년에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 조사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에 따르면, 단독주택 32.8%, 연립주택 41.7%, 아파트 25.0%로, 2008년에 비해 단독·연립주택 비중은 줄고, 아파트 비중은 늘어났다.[13] 북한 사회에서도 점차 아파트 주거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3. 여가와 명절

북한 주민은 생산활동은 물론 생산 외적 조직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경제난 이후에는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여가에 비교적 자주 하는 활동은 영화 감상, 공연 감상, TV 시청 등이다. 영화 감상, 공연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 활동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 단체관람을 주로 한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 축전지 등을 통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특히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유입되면서 공식 채널보다 휴대용 매체를 통한 드라마 시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체육 활동이 주요 여가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추구해왔는데, 1990년대 들어 북한 사회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에 맞춰 국방체육을 중심으로 한 대중체육활동을 꾸준히 독려했지만, 생활고에 맞서야 했던 주민들에게는 체육활동에 참가할

13. 장용석 외, 「북한 사회변동 2016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51.

여력이 없었고, 당국 역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14]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11월 평양에 '인민야외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트장을 새로 개장했고, 이후 남포시,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가 유행하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갖춘 능라인민체육공원, 10월에는 대형 워터파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클럽) 등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처럼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였고, 우리 태릉선수촌처럼 국제대회 메달의 산실이었던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 대표적 동계 스포츠 시설인 백두산지구 체육촌도 리모델링을 마쳤다. 2017년에는 평양 보통강 근처에 종합체육관(4,300여㎡),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숙소 등을 갖춘 '평양시 체육촌'을 완공했다.

최근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움직임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종목은 '스키'이다. 아직 대다수 주민의 생활수준이 스키를 대중적으로

14.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5, pp. 153~156.

즐길 정도는 되지 않지만 스키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인프라는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대규모 스키 리조트인 '마식령스키장'이 개장했고, 2018년 1월에는 자강도에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이 주로 활용할 강계 스키장이 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전국 대회 종목에 스키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 주민의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여행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교통사정도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로는 출장증명서와 여행증명서가 있다. 출장증명서는 공적 용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관혼상제 등의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요 도시에 숙박하며 최신 정보를 취득해 부를 축적하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지정 공식 명절도 북한 주민이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 모처럼 여가를 즐길 좋은 기회다. 북한 사회의 명절은 사회주의적·국제적 성격의 명절, 전통 민속명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기념하는 대표적 명절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2월 8일, 광복절인 8월 15일,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헌법 제정일인 12월 27일 등이다. 북한 당국은 4월 15일과 2월 16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기념한다. 그리고 세계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국제 여성의 날인 3월 8일 등도 기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설과 한가위 같은 민속명절들도 기념한다. 과거 북한 당국은 민속명절이 봉건의 잔재라고 하여 양력설만 인정하였다. 그러다 1972년 추석을 맞이해 성묘를 허용하는 등 민속명절을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1988년 추석 명절을 허용한데 이어, 1989년에는 음력설과 한식을 부활하여 하루를 쉬도록 했다. 2003년에는 김

명칭	2020년
양력설	1.1.
설명절(음력설, 민속명절)	1.25.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절	2.8.
김정일 출생일(광명성절)	2.16.
정월대보름(민속명절)	2.8.
국제부녀절	3.8.
청명절(민속명절)	4.4.
김일성 출생일(태양절)	4.15.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1.
조선소년단 창립절	6.6.
정전협정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7.27.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15.
선군절(김정일 선군혁명영도 개시일)	8.25.
정권수립일(공화국 창건일)	9.9.
추석(민속명절)	10.1.
노동당 설립일(노동당 창건일)	10.10.
어머니날 공휴일	11.16.
헌법절	12.27.

[표 6-5] 북한의 공휴일



평양의 설 명절 풍경

정일 국방위원장이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쉬고, 정월대보름도 하루 휴식하며, 단오와 추석을 예전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를 것을 지시하였다. 단, 민속명절은 제도화된 휴일이라기보다는 당국 지정에 따른다. 곧, 민속명절에 쉬기 위해서는 북한 내각에서 그해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공식 발표 절차가 필요하다.

민속명절의 대표적 활동은 전통 민속놀이를 기반으로 한 '민족체육'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대표적 민족체육종목은 씨름, 그네, 널뛰기, 태권도, 밧줄당기기 등이며 '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에서 각 종목별 개인전·단체전, 도별 대항전 등도 이루어진다.

4. 보건·복지

북한 사회 보건생활의 제도적 특징은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이다. 북한 헌법은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제

72조)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북한 「인민보건법」은 모든 약의 무료 제공, 진단·실험검사·치료·수술·왕진·입원·식사 등 환자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 무료, 근로자의 무료 요양 등을 약속하고 있다(제10조). 또한 같은 법에서 국가의 질병 예방 활동을 강조하고(제18조), 예방치료 사업을 위한 의사담당구역제를 도입하는(제28조) 등 예방의학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며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거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진료, 입원, 수술, 약품 구매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무상 제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 부담이 여전히 크고,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경우 수고비 명목으로 의료진에게 약간의 현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15]

현재 북한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는 예방의학 관련 제도는 예방접종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예방접종률은 경제난이 한창이던 1997년 35% 수준에 불과했다가, 이후 국제사회·남한의 지속적 지원에 힘입어 2016년 기준 결핵예방백신BCG 98%, B형 간염 99%, 소아마비 99%,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P 93~94%까지 올라갔다.[16]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2016년에 북한 아동 예방접종률이 96~98% 수준에 있다고 보고했다.[17]

15. 김수경·이규창·도경옥·홍제환, 「북한인권백서 2019」, 통일연구원, 2019, pp. 227~229.
16. '세계 예방접종 주간' 북한 예방접종 실태", 「VOA Korea」 2016년 4월 29일.
17. 김수경·이규창·도경옥·홍제환, 「북한인권백서 2019」, 통일연구원, 2019, p. 236.

복지의 기본인 사회보장 역시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법」은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 어린이 등을 사회보장 대상으로 정하고(제2조)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했다(제19조). 또한 국가는 「사회주의로동법」에 따라 노동자가 일정한 근속연한을 채우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후 퇴직 시 연로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제74조).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규정상 사회보장연금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만 지급되고 있다. 연로연금도 1990년대 경제난 이전까지는 많지는 않으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는 지급되었지만, 경제난 이후에는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18]

특히 북한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할 때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북한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북한 사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로 '고령화사회' 기준인 7.0%를 넘어섰고, 2014년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 공동 표본조사 결과, 고령인구 비중이 10.2%로 2008년에 비

18. 김수경·이규창·도경옥·홍제환, 「북한인권백서 2019」, 통일연구원, 2019, pp. 264~277.

	1993년	2008년	2014년
합계출산율	2.13	2.00	1.89
기대여명*	73.2	69.3	72.1

* DPRK CB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2015, p. 100.
※ 출처 : 최지영,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현대북한연구」 20권 1호, 2017, pp. 25-26.

[표 6-6] 북한 사회의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

해 1.2% 증가했다.[19] 합계출산율 하락, 기대여명 증가 등에 따라([표 6-6]) 북한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추세이며, 중위 출산율을 가정했을 때 북한 사회는 2034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0]

더불어, 경제난 이후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책임, 지역공동체의 상호부조 등도 약화되고, 새롭게 형성된 시장경제에도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노인들은 노후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 따라서 만약 현재와 같은 인구추세, 경제사정 등이 지속된다면 북한 노인의 삶은 갈수록 곤궁해질 가능성이 크다.

19. 최지영,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현대북한연구」 20권 1호, 2017, pp. 25~26.
20. 최지영,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p. 13.
21. 민기채, "북한 노인의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2016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3」, 2016, pp. 134~136.

제3절

인권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반인류적 전쟁범죄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인권 문제를 일국의 국내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곧 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후 유엔 회원국들은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1966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북한 당국은 1981년 위 두 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고, 1991년부터는 유엔UN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은 아직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시민·정치적 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명권 침해 사례로는 공개처형을 들 수 있고, 불법심문과 불법체포,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들이다.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시위의 자유 등도 북한 헌법에서는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하게 통제받는다. 북한 주민의 참정권과 선거권 역시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식량난, 생필품과 주택 부족 등을 겪고 있는데다가,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기존의 보건·사회보장제도까지 흔들리면서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이러한 북한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06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UNHRC도 2008년부터 매년 3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회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08년 제63차 총회부터 2018년 제73차 총회까지 11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

여했다. 특히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동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년 6월에 유엔인권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북한 당국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중심으로 호응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에는 「아동권리협약」, 2001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가입했다. 또한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는 조항을 추가하며 인권 관련 법제를 정비했고,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4), 「장애인권리협약」(2016)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추가로 비준했다. 2017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및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고, 2019년 1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북한 당국은 4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를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09년, 2014년, 2019년 총 3차례 수검을 받았다.

VII

제7장
북한 교육·문화

제1절 **교육정책과 제도**

제2절 **교육과정과 내용**

제3절 **문화예술정책과 실제**

제4절 **언론출판의 실제**

제1절
교육정책과 제도

1. 교육정책의 목표

교육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측면의 기능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체제 유지·발전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교육이 지니는 체제 유지 기능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회화 교육을 실시해 왔다. 북한 역시 이 같은 교육의 역할에 주목하여 광복 이후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부터 교육제도의 수립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북한 교육의 이념적 지향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다. 북한은 초기에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처럼 소련식 공산주의를 북한에 이식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활용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문

맹 타파를 비롯해 사회주의를 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김일성 시기 북한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1]에 따라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육성을 목표로 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200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기존의 교육 목표였던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경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법(1999), 보통교육법(2011), 고등교육법(2011) 등 교육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김정은 시기 첫 해에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2](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를 발표했다. 이듬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2013)을 제시한 후 단계별 시행을 거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시행'(2017)을 공표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서 교육 예산이 증가하는 등 교육 부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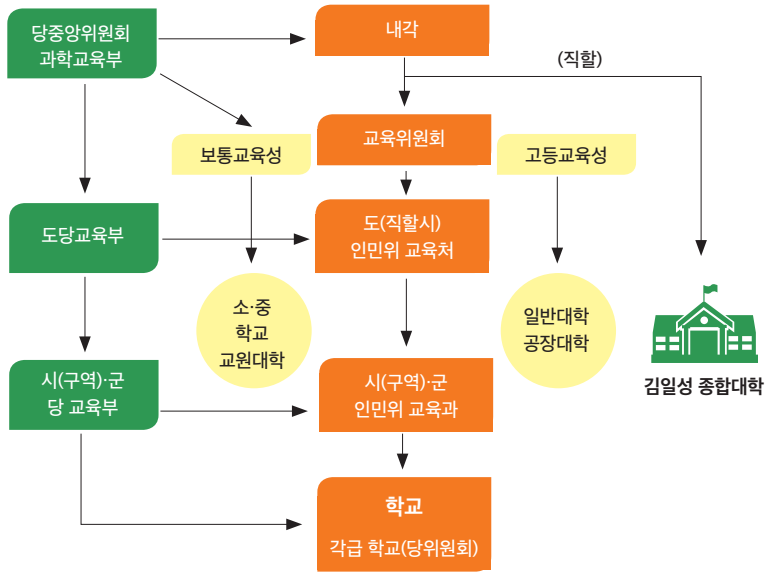
김정은 시기에는 2015년에 어린이보육교양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수정보충하고, 교원법(2015), 교육강령집행법(2016) 등을 새로 제정했다. 이후 201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기존의 '견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참다운 애국자',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교육 목표를 변경했다.[3]

사회주의교육법에 제시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2조)'를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4] 또한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5] 김정은 시기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영어와 과학·기술교육, 교육정보화 추진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북한 교육 체계의 기본 골격과 교육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김일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하여 공포한 것으로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지침이 집대성되어 있다.
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2012.9.25.)'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2. 지식경제시대 교육 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필요한 조건과 환경 마련
3. 2019년 개정 「사회주의헌법」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4. 교육법 제1조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3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5. 교육법 제29조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2.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문화기관은 조선노동당 및 국가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북한 교육의 중요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교육 관련 부서인 과학교육부는 실제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세부 집행계획 지침을 작성해 교육행정기구에 내려 보낸다. 중앙교육행정기구인 내각 산하의 교육위원회 교육성과 시·도 지방교육행정기구는 중앙당 과학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집행 기구이다. 북한의 각급 학교 역시 조선노동당에 소속된 학교 당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림 7-1]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

[그림 7-1]과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한다. 당은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은 당의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구체화하며, 학교는 당과 내각의 교육정책을 실시한다.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내각의 교육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육성과 고등교육성이 있다. '보통교육성'은 유치원과 소학교·중학교 및 교원대학을, '고등교육성'은 일반대학과 사범대학, 공장대학을 각각 관장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지침을 각 도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과로 송부하여 각급 학교에 전달한다.

북한의 학교 행정조직 체계는 행정조직과 정치조직으로 구분된다. 행정조직은 교장과 부교장을 책임자로 하고 교무부와 경리부가 실제 행정을 담당한다. 반면 정치조직은 당 세포비서 겸하고 있는 부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당위원회, 소년단위원회, 청년동맹위원회 등이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당 중심의 위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교원과 학생들의 조직생활과 사상교양 사업을 담당하는 부교장에 비해 행정과 재정 업무 중심의 학교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3. 학제

1) 북한 교육제도의 변천

광복 이후 북한은 소련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위한 일련의 제도를 도입했다. 교육제도 역시 소련식 교육제도를 도입해 실시했고, 초기에는 문맹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6.25전쟁 후 북한의 교육은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전념하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 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4년제 초등 의무교육(1956), 인민학교 4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7년제 중등 의무교육(1958)을 실시했다. 이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3년제 중학교에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한 5년제 중학교를 신설해 9년제 의무교육(1967)을 실시했다.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주체'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노동당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1975년 9월 유치원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괄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해 각 시·도에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를 신설하고 컴퓨터 분야의 중등 영재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대학에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이후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개칭(2002)되었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는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소학교를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늘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화했다.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는 [표 7-1]과 같다.

연 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2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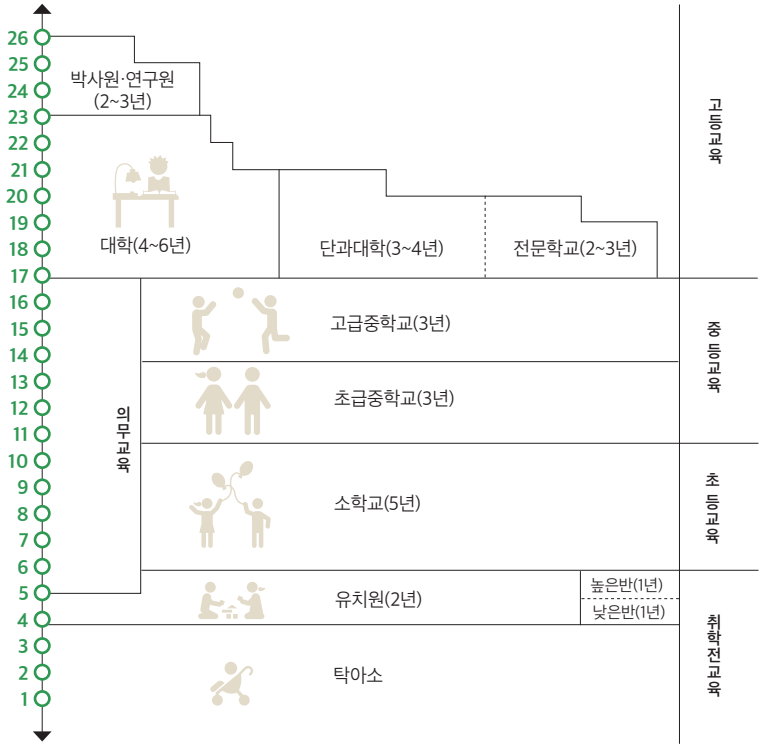
[표 7-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2) 북한의 학제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학제는 소학교를 기존 4년에서 5년제로 변경하고, 기존의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학제는 [그림 7-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3) 북한의 보통교육

북한에서 보통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학 전 교육, 무상 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



[그림 7-2] 북한의 학제

월성을 드러내는 대표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은 한계를 드러냈다. 즉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뿐 아니라, 학교 건물 관리, 교육 기자재, 난방을 위한 연료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이 발표되고 2017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북한 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

다. 북한 당국은 학제 개편의 배경으로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을 들고 있다.

새로운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새로운 교과목과 내용을 담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발표됐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의 기준문서다. 새 교육강령에 따라 집필된 새로운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종이의 질과 삽화 등이 개선되고, 교과서의 '과'별로 이해와 토론 및 탐구와 실천을 강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교육 예산이 늘어나면서 새로 바뀐 교복이 지급되고 학교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개건 보수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시기의 특징은 '보통교육'의 강화와 동시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과 정보화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시기에는 김일성 시대부터 추진되던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 정책을 계승하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추진해 왔다. 특히 김정은은 과학기술 발전이 국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13년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내세우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란 "전체인민을 높은 과학기술 지식과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만든다."는 의미로서, 모든 주민들을 대학 졸업 수준의 인재로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이후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

의 목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목표로 제시되었다. 2018년에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4.20.)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며 '과학기술 교육'을 장기적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2019년에도 신년사 및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4.13.)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9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제40조)" 및 "과학기술과 생산 일체화(제27조)"를 명시했다. 그리고 국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제46조), 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증대(제50조) 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9년 9월에는 5년 만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개최하여,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함께 교원의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교원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은 시기 교육 개편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보통일반교육' 체계에 더해,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기술고급중학교'라는 새로운 교종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중학교'에서는 중등일반지식을 위주로 가르치는 데 비해, '기술고급중학교'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따른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한다.[6] 북한 당국은 각 도에 11개의 '정보기술고급중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모든 시·군들에 '기술고급중학교'를 1개씩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기술 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의 학생들

4) 북한의 특수교육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북한은 '중등일반교육'과 별도로 '수재교육체계'를 일찍이 수립해 운영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수재교육에 대해 '우리식'의 '주체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가급적 조기에 발굴해 수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수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재양성기지'나 '학원' 등 특수교육 기관을 운영해 왔다. 1958년에는 중등학교 단계의 외국어 학원을 설치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음악·무용·체육학교 등 예체능 특수학교를 개설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분야별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 수재 교육이 더욱 늘어났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교육 기관으로는 만경대혁명학원 등 '혁명학원', 과학 중심의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등 외국어학원을 비롯해,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

6.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내오는 데 맞게 일반고급중학교들에서는 중등일반지식을 위주로 교육하고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는 기초기술교육을 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겠습니다." 북한 『교육신문』(북한 내각 교육위원회 발행 기관지), 2014. 10. 2., 2면.

연도	연도	연도
수재양성	혁명학원	-'47년 민족보위성(現 인민무력성)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 9년제 -혁명유가족, 전사자 가족, 당정 고위간부 자녀 입학
	평양외국어학원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중·일·러 등 8개 외국어 중점 교육 -소학교 졸업자 중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 선발
	제1중학교	-'84년 평양 최초 설립, '85년 道소재지·특별시 설립 -과학·수학·물리 등 이과 위주(과학자 양성 목적) -졸업 후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진학
예체능 인재양성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무용, 음악, 조형예술, 교예 등 소질이 있는 특기자 대상 특수교육

[표 7-2] 북한의 특수교육 기관

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 학교가 있다.

먼저 혁명학원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교육 기관으로,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12일 설립된 인민무력성 산하 교육기관으로, 9년제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이며 입학 자격은 혁명 유가족, 전사자 가족 및 당·정 고위 간부 자녀들이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군사조직 형태로 편성되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졸업 후에는 군 또는 특수 요직에 진출한다.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교육 기관으로는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수재교육기관으로 1954년 '평양 남산고급중학교'로 설립된 후 1984년 개명한 과학기술 중심의 평양 제1고등중학교(이하 '제1중학교')가 있다. 제1중학교는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재양성기지'를 마련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새로 개교한 후 이듬해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에 세워졌다.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제1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되었다.[7] 제1중학교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자격은 출신성분만이 아니라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김정은 시기 이후에도 이러한 수재교육에 대한 강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으로의 학제 개편 배경을 밝힐 때에도 '수재교육 및 교육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수재양성사업'이나 기초과학 전문가 양성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학이나 물리 등 국제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술이나 문학 분야의 조기 영재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7. 기존 200여 개에 달했던 전국의 제1중학교가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일부 통폐합되면서 과거에 비해 제1중학교의 수는 다소 감소했다.

제2절

교육과정과 내용

1. 교육과정

1) 소학교

초등교육과정은 [표 7-3]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학교 재학 5년 동안 지도자의 어린 시절, 국어, 수학, 자연, 영어, 정보기술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주당 수업 시간은 국어·수학·체육·음악무용·도화공작·자연의 순으로 많으며, 학제 개편 이전보다 영어, 수학, 음악무용, 도화공작 등의 시수가 증가하였다. 소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과목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는 정치사상 교과 시간이 소폭 늘어났다.



소학교 학생들



소학교 교과서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어린 시절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6	수학	4	5	5	5	5
7	국어	7	7	7	7	7
8	자연	1주	1주	2	2	2
9	음악무용	2	2	2	2	2
10	체육	2	2	2	2	2
11	도화공작	2	2	2	2	2
12	영어				2	2
13	정보기술(컴퓨터)				1주	1주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소학교)' 내용 재구성
* 북한의 교육과정은 주당 교수시간과 집중교수(주 단위로 표시)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위의 표에서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함

[표 7-3]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국어, 영어, 수학, 체육은 우리나라와 교과명이 동일하지만, 우리의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은 북한에서는 각각 자연, 정보기술, 음악무용,

도화공작으로 부른다.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사회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고, 도덕은 '사회주의 도덕'으로 부르고 있다. 교과 비중은 우리에 비해 국어, 수학 등의 기초과목과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보기술(컴퓨터) 교과는 1주 집중교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초급중학교



초급중학교 교과서

중등교육과정은 기존 6년제였으나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하여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식 경제 강국'을 이끌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기초과학, 컴퓨터 기술, 외국어 교육'과 자립적인 학습능력과 창조적 능력의 배양, 실험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8]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23개 과목을 교육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교과목이 각각 16개와 22개로 분리 증대되었다. 초급중학교 과정은 주당 수업시간이 32시간이며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 학습, 소년단 생활, 과외 체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초급중학교 단계에서 정치사상교

8. 「교육신문」(북한 내각 교육위원회 발행 기관지), 2014년 5월 8일.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활동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6	국어	5	5	5
7	영어	4	4	4
8	조선력사	1	1	2
9	조선지리	1	1	1
10	수학	6	6	6
11	자연과학	5	5	5
12	정보기술	2주	2주	2주
13	기초기술	1	1	1
14	체육	2(1주)	2(1주)	2(1주)
15	음악무용	1	1	1
16	미술	1	1	1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내용 재구성.
* 위의 표에서 체육 교과의 주당 교습 시간은 2시간이며 괄호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

[표 7-4]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과와 수학, 과학, 영어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의 기초과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 혁명활동' 과목이 신설됐고, '자연과학'과 '음악무용' 등의 통합 교과목이 도입되었다. 개정 이전의 '제도, 실습' 등의 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이 통계, 그림 파

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보기술' 과목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도입되었다. 소학교에서의 '자연'이 초급중학교에서는 '자연과학'으로 바뀌고, '도화공작'은 '미술'로 바뀐다. 사회/도덕 계열 과목으로는 '사회주의 도덕'과 국내 중심의 내용을 다룬 '조선력사', '조선지리'를 배운다.

3)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교과서

고급중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34시간으로,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 학습과 청년동맹 생활과 과외 체육 등으로 편성되었다. 고급중학교에서는 지도자의 '혁명력사', 국어문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등 총 22개 과목 교육이 편성돼 있다. 교과목별로는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교과와 영어 교과의 비중이 높다.

고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 혁명력사' 과목이 신설됐고, 세분화된 분과형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초급중학교의 '자연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로 세분화되었다. 반면 초급중학교에서의 '국어'는 '국어문학'으로, 초급중학교의 '조선력사'와 '조선지리'는 고급중학교에서 '력사'와 '지리'로 바뀐다. 그리고 초급중학교의 음악무용과 미술을 합쳐 고급중학교에서는 '예술' 교과를 배운다. 또한 초급중학교에서는 없던 '현행당정책', '심리와 론리', '한문', '공업(농업)의 기초', '군사 활동 초보'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북한에서는 영어만 배우며, 제2외국어 과목은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주의도덕과 법', '력사', '지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3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력사		2	4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력사		1/2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1	1	1
5	당 정책	1주	1주	1주
6	사회주의 도덕과 법	1	1	1
7	심리와 론리			1주
8	국어문학	3	2	3
9	한문	1	1	1
10	영어	3	3	3
11	력사	1	1	2
12	지리	1	1	1
13	수학	5	5/4	4
14	물리	5	4	2
15	화학	3	4	2
16	생물	3	3	3
17	정보기술	2	1	1
18	기초기술	2주	3주	3주
19	공업(농업)기초			4
20	군사 활동 초보		1주	1주
21	체육	1	1	1
22	예술	1	1	1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내용 재구성.
* 2학년의 '김정숙 혁명력사' 과목과 '수학' 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

[표 7-5]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리', '심리와 론리'는 필수 교과로서 별도의 선택교과군은 없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공업기초/농업기초' 교과가 있다.

북한의 고급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보다는 졸업 후 직업을 갖기 위한 교과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교과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의 '군사활동초보' 과목은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이 장기적인 군 생활을 하는 데 대한 준비 과목의 역할을 한다. 북한의 교육강령에는 교과 수업 이외에도 견학 1주,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1주, 나무심기 3주, 생산노동 9주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4) 고등교육

북한의 고등교육은 194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6.25전쟁 후 3개년 복구 건설기(1954~1956)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이후 중등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1970년대에는 경제 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으로서 공장대학·야간대학을 설립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 등을 증설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 및 일반 단과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 등 산업체 부설 현장대학이 있다. 최근 북한은 신의주농업대학은 평북종합대학으로, 함흥컴퓨터·경공업·건설대학은 통합하여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으로 개편, 지역별 종합대학을 신설하고,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대학 등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등 고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대학 산하에 첨단·핵심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할 연구원을 설립하고 학부과정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일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교육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책공업종합대학 산하에는 '미래과학기술원'을, 김일성종합대학 산하에는 '첨단기술개발원' 등을 신설했다.

또한 북한은 전문학교를 종합대학 또는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하고, 직업기술대학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천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삼지연농업대학을 삼지연기술대학으로, 평양의료기술대학을 평양시의학대학으로 전환하고 있다.[9]

북한의 고등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원대학과 전문대학은 3년제, 사범 대학은 4년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 등 다양하다.

북한의 대학 진학은 대학 입학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내각 교육위원회가

9. 「노동신문」 2019. 8. 9.

도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하면, 시·군 인민위원회는 도에서 할당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이며, 이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다.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북한에서는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성적뿐 아니라 출신성분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직통생' 또는 '직발생' 등으로 불린다. 경제난 이후에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에도 경제력이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양한데,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 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일반기초 과정은 전공과목과 전 대학에 규정된 공통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공기초 과정은 전공에 필요한 준비 과목으로 구성되며, 전공 과정은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

최근 북한은 정보통신 및 컴퓨터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 강좌, 정보공학과를 설치하여 IT 중심 학부로 대학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여러 학과 및 학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와 학과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안을 개편하고 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공학부를 '지능정보공학부'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교육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정은 시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에 따라 고등교육부문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체계와 내용,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전 사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기술전습체계'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도서관, 자연박물관, 과학전시관의 현대화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10]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경우, 김정숙평양제사공장·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1,700여 개 공장·기업소의 8,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또한 공장 근로자들이 사이버대학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장대학'에 '과학기술보급실'을 확대하고, 2015년 10월에는 '과학기술전당'을 설립하는 등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10. 「노동신문」 2014. 10. 20.
11. 2015. 10. 28., 중통

이로써 오늘날 북한의 공장·기업소·농장에 설치된 '과학기술보급실'은 14,000여 개에 달하며, 이곳에서 과학기술 관련자료 이용 및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제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과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과학기술, 경영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북한 국제화와 경제 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남북 합작으로 2010년 10월에 설립된 이공계 특수대학이다.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전기공학(컴퓨터·통신·산업자동화), 농·생명공학, 국제금융·경영학 등의 전공이 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재학·졸업생 1,100여 명 중 40명 정도의 우수 학생을 유럽·남미·중국 등에 유학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11년부터 격년(2017년 취소)으로 미국, 호주, 독일 등 유명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2. 교육내용

1) 교과 교육

북한의 교과 교육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등이 중시돼 왔다. 김정은 시기 교육제도 개편 이후에는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이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수령)와 당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간형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12] 북한 학생들은 교과목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당과 수령을 향한 충실성 등 정치사상교양을 실시한다.

북한은 교과 교육을 통해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과 김정은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과 '혁명력사'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김일성주의 노작', '주체철학', '혁명력사', '주체 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에는 반제국주의교양과 계급교양도 중시되는데, 이는 군 입대 장려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실리주의 교육을 표방해 왔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도 이어져 기존에는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것에서 2008년 이후에는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영어는 소학교 4학년부터 고급중학교 때까지 모든 학생이 배우며, 교육 방법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

12. 북한의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명시된 교육 목표는 "백두산절세위인 등(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이론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 풍모의 위대성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인간적인 매혹에 기초하여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며…"이다.

교육에서도 평양외국어대학의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도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과목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자연과학 부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외국어 교수 경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금성 제1중학교 컴퓨터 수업

컴퓨터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교과로 편성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13]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고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가운데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 교육은 과학기술 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속선상에서 "지식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14]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정보화 시대', '지식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다매체교육, 정보화교육, 원격교육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교수강습소 및 원격교육을 통해 교원의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전자화된 교수안 제작·활용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교수 경연, 교수방법 토론회, 교육자료(교수안·교안자료·교편물 등) 전시회, 자격증 취득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예술 교육은 그 주제와 내용이 지도자와 당 정책 등 정치사상교양과 긴밀한 관련을 두고 이루어진다. 예술 교육은 다양한 사회정치활동과 연합되어 지역 사회 주민들의 당 정책 수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전국 학생 청소년 예술 개인경연'이나 '취주악 경연' 등 다양한 예술 경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체육은 신체를 발달시키고 단련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시돼 왔다. 체육 교육 역시 1960년대부터 체육의 대중화와 학교체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도자 교시에 따라 강조돼 왔다.[15] 이는 김정은 시기 이후에도 이어져, '체육전문화방침' 등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체육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체육은 국제 체육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사례들

13.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과외 교육 기관이다. 소학교·중학교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위해 건설된 일종의 학생회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을 '학생소년궁전'으로 부르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2,000석 규모의 극장과 도서관을 비롯해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의 소조실과 활동실 200여 개가 갖춰져 있다. 여기에 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 전시장 등이 있다.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함께 평양의 대표 청소년 시설로 특기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14. 「교육신문」, 2014. 4. 3.
15. 김정일 <체육은 사람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사업이며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교육신문」, 2013. 12. 12., 3면.

을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의 애국심과 결속력을 증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 교과 외 교육

북한의 교과 외 교육은 '과외활동'으로 불리며, 정규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실시된다. 소학교에서는 5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900시간의 과외학습, 432시간의 소년단생활, 513시간의 과외체육이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3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540시간의 과외학습, 432시간의 소년단생활, 306시간의 과외체육이 있다. 고급중학교에서는 3년간 교과 시수 이외에 465시간의 과외학습, 372시간의 청년동맹생활, 243시간의 과외체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외학습

북한의 학생과 교원들은 학교에 온 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신문」 사설이나 논설 등을 읽는 독보활동을 한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담임 교원들을 통해 '아침학습'이나 '수업 전 학습', '365일 교양' 등의 형태로 사상교양을 실시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총화'를 실시하고, 이후 과외학습시간이 이어진다.[16]

16. 김정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게 하자면 과외학습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육신문」2013. 11. 14., 2면

과외학습시간에는 보통 자습을 하거나 담임교원을 통한 과외복습 또는 과외예습이 1~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 일부 학교에서는 과외학습 시간에 담임교원이 아니라 전공 교원을 통한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담임 교원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교양이나 '좋은일하기 운동' 등을 지도하기도 한다.[17] 과외학습시간에는 학과 공부 이외에도 '위대성 교양'이나 '회고록 학습' 등 정치사상교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교실 안에서 뿐 아니라 학교 안팎의 '야외 학습터' 등에서도 실시된다.

소조활동

북한에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후대에 대한 교육 사업은 학교뿐 아니라 전 사회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학교 이외에도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도서관, 소년단야영 소등 '과외교양기지'들을 거점으로 해서 '소조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과외활동을 할 것을 강조한다.[18]

소조활동은 일반적으로 매일 방과 후 2~3시간 동안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조를 만들어 분야별로 교원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소조

17. "이 학교의 학생교양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급마다 <아름다운 소행일지>를 만들어놓고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신문」, 2013. 5. 9., 2면.
18. 김정일 <청소년학생들을 문화적이고 정서적소양이 풍부하게 키우려면 그들의 준비정도와 심리에 맞게 과외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합니다.>, 「교육신문」, 2013. 7. 11., 4면.

의 종류는 교과, 음악, 미술, 체육 등 매우 다양하다. 주로 학급의 교과 우등생이나 조직생활 모범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과목 소조' 또는 '교과목 학습 소조', 문학 소조,[19] 노래나 합창 등 성악 소조,[20] 취주악 소조, 미술 소조뿐 아니라,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정구 등의 구기종목과 태권도, 씨름, 수영, 체조 등 다양한 체육소조가 있다.[21]

사회의무 노동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하도록 하고 있으며,[22] 「사회주의교육법」에서도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을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23] 이에 따라 북한에서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과외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보내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의무 노동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나무심기, 모내기, 김매기 등 생산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이 길어지고 동원되는 부문도 다양해진다. 북한은 특히 '나무심기'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나무심기 활동을 교육강령 내에 명시하고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1주 가운데 봄에 4일간은 나무심기를 하고 가을에 3일간은 나무열매따기를 진행하며, 고급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나무심기 1주와 생산노동 3주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과외 활동은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개인의 흥미나 관심, 자율성보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 활동, 사상·교양학습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19. "다과목소조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 「교육신문」2013. 7. 11., 1면.
20. "문학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로 문학소조를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철령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자기 고장의 령도업적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 있게 조직하군 한다.", 「교육신문」, 2013. 8. 15., 4면.
21. 김정일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 체육소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신문」, 2013. 5. 9., 1면.
22. 2012년 개정 「사회주의헌법」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23. 교육법 제4조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

제3절

문화예술정책과 실제

1. 문학예술정책

북한 문예정책(문학예술정책)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의 문예관은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형 양성'이며, 문학예술은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당성, 인민성, 계급성'과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1) 주체·선군 문예이론

해방 직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KAPF][24]를 계승하여

1950년대 이후까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예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예정책은 1960년대 중반 '모든 문예창작을 항일혁명문학을 중심으로 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항일혁명문예관의 핵심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전통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북한의 유일사상이 문예정책에 반영되어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추진된 것이다.

수령형상화는 1967년 카프 계열 문인들의 숙청을 정점으로 본격화되어 간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여전히 강조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수령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북한 특유의 '주체의 문학예술'이 성립되어 갔다.

1980년대 북한 문예정책은 다소의 변화를 보였는데 변화의 중심에는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이 있었다. 김정일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전과 차이점은 주요 인물이 항일혁명 영웅에서 기술자, 하급 당원, 간호사, 주부, 농부 등 '보통 사람들'로 선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이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을 강조하자 문예정책에서 다시 수령형상화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려는 일환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김정일이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한 특별한 시기이다. 김정일은 <무용예술론>(1990), <음악예술론>(1991), <주체문학론>(1992)

24. 카프는 1925년 결성된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cio)의 약자이다.

등을 출판했는데, 이로써 주체문예이론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 문예관이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에 기초한 일종의 실천 강령은 '종자론'과 '군중예술론'이다. 북한은 "작품의 핵을 이루는 것이 종자이며,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으로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없애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체문예이론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조류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자화되는 북한 사회를 통합하고자 한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북한은 김정일의 주체문예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을 추가하였다. 북한은 2000년 말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을 "주체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며,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선군혁명문학의 특징을 "반제혁명정신의 구현, 조국애의 구현,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였다.[25]

2002년 12월 조선중앙방송이 '선군혁명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선군'은 김정일 시대 문학예술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선군미술, 선군영화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핵심내용은 군인의 혁명정신 실천과 수령 결사 옹위로 북한 주민의 단합을 통해 체제 안전을 이루려는 의도라 하겠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문예정책에 '실리추구'와 '민족문화 강조'가 더해졌다. '실리추구'는 실리추구를 위한 개혁·개방에 문학예술이 복무하자는 것으로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에 나타난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족문화 정책'의 강조는 개혁·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선군문학예술'은 주제나 내용에서는 수령찬양, 체제 유지, 혁명과 건설 등 기존 주제를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겠다.

2) 사회주의 문명강국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은 '사회주의 문명국',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이전 '선군문학예술'과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2012년에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을 주장한 이후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2017)에서'문명강국'이란 '문화의 모든 분야 즉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또한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본질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주장한다.[26]

25. "주체사실주의 문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되는 선군문학의 본성과 특징", 「조선문학」, 2005년 1월호.

26. 명광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19.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란 첫째,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 둘째,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셋째,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나라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동시에 '모란봉 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모범'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형식,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함으로써[27] 새로움과 과학화 역시 북한 문예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문학예술이 김일성과 김정일 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형상할 것을 재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김정일뿐 아니라 '김정은의 위대성', '우리식 사회주의', '만리마 정신' 등을 주장하면서 '청년들의 헌신', '자력자강', '경제선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은 문학예술뿐 아니라 문화시설, 관광시설, 세계화로 확대되고 있다.

2. 문화예술의 실제

1) 김일성·김정일 시기

문학

1967년 이전 북한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비판적 계승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 창작에 초점을 두었지만 1967년 이후부터 주체 문학이 전면화되면서 창작 방향을 바꾸었다. 그 방향은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당의 행군로> 등의 시와 <무성한 해바라기> 등의 장편소설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다룬 장편소설 총서 「불멸의 역사」가 발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김일성이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이 장편소설로 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생활 속 영웅, '숨은 영웅'의 발견이 중요 주제가 되었다. <숨은 영웅들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새로운 영웅관을 보여준 작품이다. 또한 <청춘송가> 등 충성 주제에 남녀의 애정을 엮은 작품도 창작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는 북한 문학계에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했던 시기였다.

1990년대 북한 문학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당성을 강조하고 김정일의 업적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0년 2월 김정일의 업적을 형상화한 총서 「불멸의 향도」의 창작 선언이 있었고, 이에 <아침해>(1989)를 시작으로 선군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총대>(2003),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2000), <황진이>(2002) 등이 출간되었다.

27. 「노동신문」 2014. 5. 17.

영화·텔레비전 드라마

1967년 이전 북한 영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인간형과 천리마 시대 영웅들의 재현에 초점을 두었지만 1967년을 기점으로 항일혁명문예로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에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운동 시기에 만들었다는 3대 혁명영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는 '수령형상영화'가 활발히 제작되었지만, <적후의 진달래>(1970) 등 정탐물 영화와 체제통합을 요구하는 가족 멜로드라마 <우리집 문제> 시리즈도 인기를 얻었다.

1980년대에 북한은 한편으로는 수령형상영화 시리즈를 이어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어갔다. 수령형상영화로는 <조선의 별>(1980~1987)과 <민족의 태양>(1987~1991) 등이, 숨은 영웅 형상화 영화들의 대표작에는 <도라지꽃>(1987) 등이 있다. 1980년대 북한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민족고전물의 창작이다. 민족고전물 영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림꺽정>(1987) 등과 같은 전통액션활극이고, 다른 하나는 <춘향전>과 같이 전통 민담이나 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해체되자 영화계는 체제 유지를 위해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부각시킨 작품을 창작하였다. 1992년부터 제작된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시리즈가 대표작인데 이 작품은 원래 10부작으로 계획됐으나, 2002년 100부작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선군영화가 보편화되면서 <그는 대좌였다> 등

과 같이 모범군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 창작되었다.

2000년대에도 군 관련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는 다소 결이 다른 영화도 제작되었다. 과학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을 중시하면서 불필요한 회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부지배인>(2001), 경제난 이후 북한 차세대의 고민을 다룬 <한 여학생의 일기>(2006)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는 주로 지도자 가계의 업적과 지도자와 함께 투쟁에 참가한 인물들이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가정과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통해 수령관과 집단주의적 의식을 고취하는 <2학년생들>(2002)이 대표작이다. 또한 경제선동 역시 중요 주제이다. 대표작으로 8부작의 <수업은 계속된다>(2006)를 들 수 있다. 이외 부부간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 등을 다룬 드라마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갈등을 다룬 <엄마를 깨우지 말아>(3부작)와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다룬 <가정>(9부작)은 이전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연극·가극

1960년대 이전 북한 연극계는 일본적 잔재에서의 해방, 민족문화 계승, 소련예술의 수용을 강령으로 삼다가 1960년대에는 천리마 운동과 관련된 것을 창작의 주제로 삼아, <붉은 선동원> 등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양상을 달리한다. 김정일의 지도하에 연극에 음악·무용 등을 가미한 '성황당식'(<성황당>(1978)) 혁명연극이 개발되

어[28] 이후 전형이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도 성황당식을 수용한 <혈분만국회>(1984), <딸에게서 온 편지>(1987) 등이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1990년대까지 맥을 이어갔으며 북한에서 5대 혁명연극으로 불린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문예담론에서 선군이 등장하자 선군은 곧 창작의 원리가 되었다. 선군담론에 부응하는 대표작에는 <동지>(1999) 등이 있다. 2000년대 말에는 경제선동 주제가 주를 이루었는데 대표작에는 경희극 <산울림>(2010)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1950~1960년대 레퍼토리를 리메이크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는데, 대표작에는 국립연극단의 <네온등 밑의 초병>이 있다.

김일성 시기 가극은 초기에는 <춘향전>, <심청전> 등 창극 공연이 주를 이루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민요를 바탕으로 하는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새로운 현대적 양식의 민족가극"이 발전하게 된다. 대표작에는 사회주의 현실을 주제로 한 <강건너 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온다>(1960), 민족고전작품을 주제로 한 <금강산 팔선녀>(1969)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김정일의 지도로 '피바다식 가극'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모방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1972) 등이 제작되었다. 이후 '피바다식 가극'의 형식에 민족고전의 내용을 담은 '민족가극'이 창작되었으며 대표작에는 <춘향전>(1989)이 있다. 한편 1992년 김정일이 노력 영웅을 원형으로 하는 '우수한 혁명가극'을 창작하라고 지시하자, 북한 가극계는 혁명가극의 창작에 힘을 기울였다. 대표작에는 노력영웅 진응원을 원형으로 하는 <사랑의 바다>(1995) 등이 있다. 1995년 이후로는 민족가극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고난의 행군으로 실험과 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대 말에는 러시아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이 북한에서 공연되었으며, 피바다 가극단이 중국의 가극 <홍루몽>(2009)과 <양산백과 축영대>(2010)를 공연하였다.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이라 하겠다.

28. 성황당식 연극의 특징은 '흐름식 입체 무대미술'과 '방창'이다. 흐름식 입체 무대미술은 무대 전환 시 암전 없이 무대가 움직임으로써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창이란 무대 밖에서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음악

1960년대 이전 음악에서는 전투적 기능과 교양적 역할, 민족적 형식과 민주주의적 내용이 중시되었지만 1960년대부터는 천리마 시대에 맞는 민족음악의 현대화와 혁명적 음악예술의 창작이 강조되었다. 또한 영화음악 분야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대표작에는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의 최고 사령관>, <천리마대행진의 노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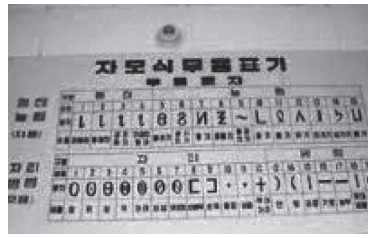
1970년대는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예술로 개조하기 위한 전환의 시기였다. 특징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송가의 창작이 많아진 점이며, 만수대예술단의 주도로 해외공연이 활성화된 점이다. 특히 혁명가극 <피바다>가 발표된 1971년은 북

한음악사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새로 개량한 민족악기를 주체로 하여 양악기들을 배합한 선율에서도 민족선율이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는 주체사상이 전 분야에 적용된 시기로 민족음악은 전통음악문화와 동일한 지평에서 복원되었다. 또한 김정일의 '전자음악을 북한식으로 발전'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현대 악기에 민속 악기를 혼합하여 공연하는 '보천보전자악단'(1985), 북한 최초의 경음악단인 왕재산경음악단(1983) 등이 결성되었다.

1990년대 북한 음악의 중요 주제는 우상화, 사상교양, 군대 중시, 경제건설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또 하나의 특징은 생활가요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빠른 템포와 서구의 팝음악적 요소가 특징이며 대표곡으로는 <휘파람>, <반갑습니다> 등이 있다.

2000년대는 김정일이 선군음악정치, 노래정치, 음악정치를 표방하자 송가의 비중을 줄이고, 선군사상을 주제로 하는 곡들과 천리마 운동에 관한 노래를 제작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2003) 등이 있다. <강성부흥 아리랑>(2001)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작곡되었는데 북한은 기존 <아리랑>이 주로 비탄조였던 반면, 이 작품은 부흥과 낙관의 정서로 민족감정을 고취시킨다고 자평한다. 이외 악단의 창단도 꾸준히 이어져 2000년대 말에는 경쾌한 클래식 연주가 특기인 삼지연 악단(2009), 세미클래식 악단인 은하수관현악단(2009)이 창립되었다.



북한의 무용 표기법

무용·교예·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북한의 무용계에서는 전쟁 이후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무용의 본산으로 기능하였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김정일의 지도 아래 혁명가극 <피바다>에 나오는 <키춤> 등의 가극무용이 창작되었다. 또한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을 중요시했다. 또한 1970년대 초부터 주체문예의 일환으로 무용 동작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1987년에 '무용 표기 기법'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에는 <총동원가> 등 '혁명무용'이 창작되었고, '무용소품'과 무용대작인 '무용조곡', '무용극'도 제작되었다. 대표적 무용소품인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이래의 현실적 과제를 음악과 더불어 종합 공연 형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무용조곡은 '여러 개의 독자적인 무용종목을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묶은 형식'이다. 대표작에는 <장군님 받들어 군민은 한마음>(1995)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일의 "군중무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군중무용'이 적극적으로 창작되었다. <옹헤야>, <청춘의 자랑> 등 군중무용은 동작이 통속적이고 단순하여 노동현장이나 축제 때 자주 활용된다. 이외 '체조무용', '수중무용', '빙상무용' 등 무용의 대중화와 체육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북한의 교예는 1952년 6월 창립된 평양교예단의 창립공연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평양교예단은 주무대인 평양교예극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이동식 천막극장 무대를 통해 지방순회 공연을 자주하고 있으며 외국 방문공연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빙상>, <동물교예>가 있으며, 배경음악은 민족 고유의 명곡과 민요들을 편곡하여 사용하고, 복장은 한복을 기본으로 한다. 1980년대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중교예와 빙상교예를 창작하였으며 난이도가 높은 동작으로 세계교예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리랑 공연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의 기원을 김일성이 직접 창조하였다는 1930년의 <꽃 체조>로 설명하지만 본격적 시작은 1946년 5월 <소년들의 연합체조>라 할 수 있다. 이후 1950년 후반 '군중체육'의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체조가 본격적으로 발달하였으며 대표작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1958)이 있다. 1960년대에는 집단체조의 대중화가 진행되어 평양에서는 수만 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가 본격화되는데, 대표작에는 <천리마조선>(1963)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집단체조창작단」이 창립되면서 집단체조 부문이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된다. 이 시기 대표작은 연인원 7만 5,000명이 출연하는 <주체의 조선>(1978) 등이 있다. 1982년에는 집단체조를 공연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김일성경기장(1982, 모란봉경기장의 개명)이 건설되어 집단체조 공연이 더욱 대형화되었고, 같은 작품을 수십 회 공연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집단체조를 수만 명이 동원되는 화려한 공연예술 형식으로 연출하여 국가기념일이나 국빈환영식에서 보여주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한동안 소규모 집단체조를 창작하였지만 2000년에 들어선 후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공연하면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 부르는 초대형 공연이 시도되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체육의 일부이던 집단체조를 '예술공연'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김정일 시대 대표적 작품은 <아리랑>이다. 10만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음악과 무용뿐 아니라 매스게임·카드섹션·체조·서커스 요소까지 포함한다.

아리랑

"북한의 대표적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예술과 체육을 결합한 북한 특유의 공연 형태로, 2000년 처음 등장했다.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매스게임이라는 뜻의 대집단체조가, 단순히 체조 방식만으로 구성되던 것에서 변화되어 예술공연을 배합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생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체조'가 주로 학생들의 단기간 훈련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예술단의 주도로 기획·창작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도 투입되고 있다. 2002년도에 처음 공연된 <아리랑>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10만명이 출연하였다.

<아리랑>은 음악, 군무, 체조,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망라된 대규모 종합공연예술로 2007년 8월 세계에서 가장 큰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아리랑 공연은 2013년 9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신 중단 5년만인 2018년에 <빛나는 조국>이란 이름으로 재개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로 명칭을 바꾸어 공연하였다. 2013년 공연된 <아리랑> 내용을 분석해보면, 서장 : 아리랑, 제1장 : 아리랑민족, 제2장 : 선군아리랑, 제3장 : 행복의 아리랑, 제4장 : 통일아리랑, 제5장 : 친선아리랑, 종장 : 영원한 승리의 아리랑으로 구성되었으며, 80분 간 진행되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대내 외에 널리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다박솔 초소


장자강의 불야성

미술

해방 직후 월북 미술가들은 북한 사회주의 미술의 내용과 형식 규정에 대한 논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전통을 계급주의적 시선으로 규정하는 테제가 발표된 후 1967년을 기점으로 논쟁은 종식되었다. '문인화'는 봉건지배계급의 미술이므로 척결하고, '민화'를 민중들의 미술로 인식하여 계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채색화를 중심으로 조선화를 현대화하는 방향에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970년대는 '주체미술의 대전성기'로 수령형상과 사회주의 혁명투쟁 및 새 조국 건설 등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창작되었다. 대표작에는 <강선의 저녁노을>(1973), <수령님, 이 밤도 어데 가시옵니까?>(1978) 등이 있다.

1990년대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치 밑에서 그동안 척결의 대상이었던 사군자 등 문인화들이 복권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김정일 시대 본격화된 선군정치와 관련된 '선군미술'이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의 주제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군민일치, 혁명적 낙관주의, 총대사상 등이며 주목할 작품에는 조선인민군창작사에서 제작한 <선군 8경>(2004)이 있다.

한편 북한은 정치적 선전과 선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전화를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선전화 창작사업'은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당 정책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무수히 발표되고 있다.

체육

북한은 1945년 북조선체육동맹을 결성하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체육과 스포츠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민족체육을 강조하였으며, 1950년대 중반부터 민속놀이를 통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켜 주체사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엘리트체육에도 관심을 가져 195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국제스포츠 연맹에 가입하였다.[29]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이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구축한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 독재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방체육을 군중체육과 결합하였다. 군중체육은 곧 주체사상의 경제적 실현을 위

29. 1956년 국제아마추어레슬링연맹 가입, 국제사격연맹 가입, 국제농구올림픽연맹 가입, 1957년 국제탁구연맹 가입,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 가입, 국제빙상연맹 가입, 국제축구연맹 가입, 국제배구연맹 가입, 1958년 국제체조연맹 가입, 1960년 국제역도연맹 가입.


북한 체육대회 응원단



북한 새해 첫 체육의 날

해 천리마운동과 결합되었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제와 연결되었다. 또한 1967년을 기점으로 국방체육을 강화하여 사격, 산악 행군 등 군사훈련 성격의 체육 경기 종목을 신설하였다. 1970~80년대는 체제 우월성을 증명하는 선전의 도구로 체육이 적극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경제난으로 체육기반이 약화되어 실질적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부응하고자 민속놀이와 체력 단련의 결합이 중요시되었다. 민족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집단주의 사상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지만 고난의 행군으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북한 당국은 이 시기에도 국제대회에서의 우승을 중시하였다. 이에 1980년대 후반 여자축구를 집중 육성해서 1990년대 여자축구계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탁구에서는 남한과 함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우승하는(1991) 등의 성과를 내었다.

문화재

북한은 해방 이후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명분으로 안악 고구려고분 조사 사업 등의 발굴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50년대 들어서는 고구려가 세운 안학궁터 복구 및 대성산박물관 건설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기 위함이다.

1960년대 들어와서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위해 문화유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6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결의에 따라 김일성 일가의 혁명사적지와 전적지 조성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모든 문화예술을 김일성의 주체사상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고, 이 시기에 동명왕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발굴 작업도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문화유물보호법」(1994)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 문화유적 발굴사업과 복


안학궁 남궁 제1호 궁전터에서 출토된 기와


안악 제3호분 서측실 서벽 묘주와 신하 전경


동명왕릉


강서대묘 현실 북벽의 현무

원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민족사의 정통성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유물·유적 발굴과 복원에 노력을 기했다. 그 결과 고구려 사찰 광법사(1990, 평양), 동명왕릉(1993, 평양), 단군릉(1994, 평양) 등이 개축·복원되었다. 북한은 1998년 7월 세계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유네스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고구려 고분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04.7.)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북한 주민을 애국심으로 단결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건축

북한은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반한 러시아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 중심부인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강한 축을 형성하여 육중한 구조미와 대칭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층고層高를 높이고 열주형 기둥을 노출시킴으로써 수직성을 강조하였다. 대표작에는 평양역사(1954) 등이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건축물이 평양 곳곳에 만들어졌다. 1960년에 완공된 평양대극장이 대표적인데, 건축 방식은 전통적인 '조선식' 지붕을 씌우는 것이다. 이외 1960년대 대표적인 조형물에는 6.25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인민군 열사탑',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을 기념하는 '우의탑', 사회주의 건설을 독려하는 '천리마동상'이 있다.

1960년대가 사회주의 양식과 전통적 요소 간의 조화를 모색한 시기라면, 1970년대는 '우리식'을 강조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자, 북한은 체제 강화용 대기념비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전국에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대표적으로 '만수대 대기념비'는 1972년 김일성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기념 건축이다.[30] 1980년대는 김정일의 주도로 평양에 기념비적 건축물이 가장 활발하게 등장하는 시기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평양을 전세계에 예술적 도시로 선전하고자 평양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세계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주체사상탑[31], 개선문[32],

30. 만수대 대기념비 한 가운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자랑하는 김일성 동상이, 그 왼쪽에는 항일혁명 투쟁상, 오른쪽에는 사회주의혁명 건설상이 세워졌다.
31. 주체사상탑은 1982년 4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해 대동강 동쪽 기슭에 세워졌다. 높이 170m로 주체사상탑은 봉화, 탑신, 3인 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화는 높이 20m, 무게 46톤으로 알려진다. 150m의 탑신은 봉화의 웅장성을 건축적으로 보조하는데, 탑신의 앞뒷면에는 글자폭이 4.2m에 이르는 주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탑신 정면에는 높이 30m에 이르는 3인의 군상, 곧 노동자, 농민, 인테리가 각기 망치, 낫, 붓을 들고 당 마크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체사상탑


금수산 태양궁전

인민대학습당[33] 등이 모두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북한의 대표적 건축물 '3대혁명전시관', '당창건기념관(1990)' 등이 건축되었지만, 1989년 완공이 목표였던 유경호텔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중지된 공사는 2000년대 들어 재개되었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맞춰 평양 10만 호 주택건설 사업도 착수되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 작업과 문화시설의 개보수가 주로 이루어져 가시적인 진전은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물

32. 개선문도 같은 시기 모란봉 기슭에 건립되었다. 높이는 60m이며 너비는 50.1m, 폭은 36.2m이다. 북한의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보다 11m 더 높고 너비도 5m 더 넓어 세계에서 가장 크다. 개선문 남쪽의 양쪽 기둥에는 '1925'와 '1945'라는 숫자를 금빛으로 새겨놓았는데, 이는 각각 김일성이 14세 때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만경대 고향집을 떠난 해와 조국의 해방을 이루고 개선한 해를 각각 뜻한다고 한다. 개선문의 중심 부문인 무지개문은 김일성 생일 70돌을 상징하는 70여 개의 진달래꽃으로 장식되었다.

33. 인민대학습당은 1982년에 건설되었으며 북한 최대의 종합도서관으로 연건평 10만㎡이며 높이 63m에 달하는 10층의 소위 '조선식' 건물이다. 김일성은 "인민대학습당의 건축양식은 반드시 조선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민족건축양식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살렸다고 북한은 자평한다. 인민대학습당의 하루 수용능력은 1만 명에 달한다.

과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한 건축물도 이 시기에 많이 지어졌다. 동평양대극장, 양각도축구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전쟁이 끝날 무렵 북한은 6.25전쟁 동안 폐허가 된 평양의 복구사업을 본격화했다. 북한은 평양을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련 및 동구권 유학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고, 모스크바 건축 아카데미 출신의 김정희는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에 입각한 '평양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플랜은 다핵화를 통한 평등한 공간위계, 풍부한 녹지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농 간 격차 해소, 격자형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단위의 도시구조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이상도시 평양건설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70~1980년대 들어 북한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선회하자 북한의 도시계획 이념도 사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침체기를 맞이하며 모든 도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었다. 지방도시 발전을 지연하며 평양에 '선택과 집중'을 꾀하면서, 도시 자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이른바 '주체적 도시화' 전략을 내세웠다. 대표적 거리를 현대화하였고, 거리 주변에 중·고층 이상의 살림집을 조성하였다.


만수대거리

1980년대 평양은 혁명적 수령관을 반영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독 평양에만 인민들의 군중집회, 열병식과 경축야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심부 상징광장과 기념비적 공공건물,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넓게 뻗어나가는 주요 간선 거리와 고층 주택 등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외국인 대상 고급호텔의 건축도 활발해졌다. 특히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앞두고 평양거리를 새롭게 꾸리기 위해 지방의 건설인력과 건축자재 모두를 평양으로 집중하였다.

북한의 도시계획은 구역보다 가로(街路: 시가지의 넓은 도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평양도심부의 정치적 및 사상적 상징성이 핵심 가로를 통해 멀리, 그리고 넓게 퍼지도록 하는 공간배치인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특별배려는 지속되어 1998년 '수도평양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평양시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평양시 관리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2002년 김정일은 '21세기형 수도 건설'을 제안하였고, 평양의 특권적 지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평양의 가로가 개발되면서 함께 건설된 것은 바로 아파트이다. 북한의 아파트는 평양에 밀집되어 있으며, 거대 경관을 생산하여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인공물로 활용되기도 한다. 김정일 시기 북한의 적극적인 평양 건설과 정비의 의도는 무엇보다 대외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평양을 치장함으로써 자주자립 강국으로서의 국가적 존엄과 권위를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김정은 시기

문학

김정일 사망 직후에는 김정일을 추모하는 추모문학이 주를 이루다가, 2013년부터는 <불의 약속> 등 김정은 후계 승계를 합리화하는 작품이 발표되었다. 김일성 일화를 추려서 묶은 <태양 총서에 비낀 일화의 세계>, 김정일의 업적을 서술한 <영화보급의 새 역사> 등이 출판되었다.

한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김정은의 치적 홍보를 위한 시, '만리마 시대'에 바람직한 인간들을 형상한 작품, 투쟁과 헌신에 앞장서는 청년을 주제로 하는 작품 등이 창작되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지침을 따라 '과학기술중시사상' 주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정시 <내 심장의 노래> 등이 발표되었다.[34]

영화·텔레비전 드라마

김정은 시대 영화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 제작 편수가 줄어 2013년부터는 한 해에 1편씩 창작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작품이 발표되

34. 「노동신문」, 2018. 9. 17.



북한 TV 연속극 '기다리는 아버지'



북한 TV 연속극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지 않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경제선동을 주제로 하는 <벼꽃>(2015)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희생을 다루는 <우리집 이야기>(2016)가 있다. 만화영화로는 <고주몽>이 18부까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고주몽>에 대해 북한은 3D CG[Computer graphic]와 2D CG를 합성하는 영상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생동감과 현실감을 잘 표현해내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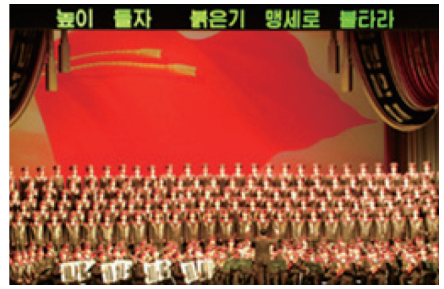
텔레비전 연속극으로는 유망한 축구선수가 김정은을 위해 명예를 포기하고 축구소조를 지도한다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2014) 등이 있다.

2018년에 주목할 텔레비전 드라마는 <임진년의 심마니들>이 있다. 일본의 탐욕에 맞서 개성인삼을 지키는 조선 심마니들의 이야기이다. 이전 드라마보다 이야기 전개가 빠르며, 배에서의 전투와 소와 싸우는 등의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극·가극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경희극


모란봉악단 공연모습



공훈국가합창단 공연모습

과 같은 희극 공연이며, 작품의 흐름은 크게 과거 작품의 재창작과 경제건설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작품의 재창작으로는 1950년대에 초연된 반미사상 주제인 <승냥이>(2015)와 1960년대 초연된 애국주의 주제인 <리순신 장군>(2016)이 있다. 김일성 시대 초연된 작품의 재창작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강조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혁명연극의 재공연을 통해 혁명연극을 지도한 김정일을 기억하는 기억의 문화정치도 전개되고 있다. 한편 경제건설 주제의 작품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지방 한 어촌에서 물고기 어획량을 5배 늘리기 위해 고분 분투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인 <향기>(2015)는,[35] 김정은의 수산사업소 방문과 북한 당국의 인민생활 향상 지침에 부응하여 창작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가극에서 대표적 신작으로는 <혁명의 승리가 보

35. 조선중앙TV에서 2015년 2월 17일에 방송한 경희극이다. 그러나 조선중앙연감은 이 작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다>(2016)를 들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신작을 발표하기보다 1970년대의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피바다> 등을 재공연하는 경향이 있다.

음악

김정은 시기의 대표 악단은 모란봉 악단이다. 모란봉 악단은 2012년 7월 시범공연에서 <아리랑>을 경쾌한 리듬으로 연주하고 미국 영화 <록키>의 주제곡을 소개하는 등 이전과 차별되는 무대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정은은 "모든 예술인들이 모란봉 악단의 수령결사옹위정신"(2013)을 본받고, "모란봉 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배워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라."(2014)고 지시하였고, 이로써 모란봉 악단은 최고의 위상으로 자리잡았다. 2018년에는 강릉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이 참여하여 공연을 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청봉악단, 모란봉악단, 만수대예술단에서 선발하여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클래식, 세계민요, 남한가요, 북한가요 등을 공연한 바 있다. 김정은 시기 북한 음악은 경쾌함과 화려함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 교류 음악회와 북한의 유명작곡가를 기념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평양장애자교류단이 영국에서 공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2017), 2018년에는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대회를 열었다.



<빛나는 조국> 공연

무용·교예·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김정은 시기 무용은 음악무용 종합공연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대표작은 <영원한 승리의 7.27>, 1만명 대공연의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 등인데 이 작품들은 북한의 고유한 장단과 춤가락을 기본으로 무용, 음악, 극을 결합한 것이다. 무용조곡 <황금의 내나라>, 음악무용시 <아리랑의 전하는 이야기> 등을 공연하였으며 내용은 사회주의 체제 선전이 주를 이룬다. 평양교예단은 국립교예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예 <춘향전>(2012)을 공연했는데, 작품의 특징은 공중에서 줄타기, 물 위에서 줄타기 등 현란한 배우들의 움직임이다. 2018년에는 만리마정신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공연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참가에도 적극적이어서 제1차 국제교예예술축전에서 <철봉과 그네날기>로 금상을, 세계교예예술축전에서 <쇠줄타기>로 최고상을 수여하였다.

한편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에는 2013년 <아리랑> 공연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이 공연되었다. 드론과 첨단 기술의 활용, 무대바닥에 백두산 천지 영상을 비추는 일종의 미디어 아트 기법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체제선전을 생략하여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축하공연에서도 공연되었다.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로 이름을 바꾸어 공연하였으며, 6월 20일 중

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는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특별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미술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두 종류의 김일성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정일과 함께 등장하는 김일성상은 노년상으로, 단독상일 경우는 젊은이의 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상들은 웃는 모습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수령형상창조이론'에서 강조하던 '숭엄함'을 대신하여 '생동하고 친밀한 상'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자의 상을 동시에 2종류로 제작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젊은 김일성의 상은 선대의 유업을 이어받음을 강조함으로써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김정은 자신을 표상하고 있는 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웃고 있는 수령상들은 색조각상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수령상들의 등장은, 김정은이 단순한 김일성 이미지의 차용에서 더 나아가 김정은식 김일성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자신과 결합시켜 인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선대 수령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에 부합하듯이, 백두혈통을 표상하고 있는 백두산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유화 장르에서의 변화도 주목된다. 2013년에 발표된 김소영의 글에는 '유화를 유화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조점은 평범해 보이지만 북한문화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북한미술계에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조선화를 토대로 한 '우리식 유화'이기 때문이다. 조선화의 미학을 토대로 한 '우리식 유화'에서 거부되었던, 유화 물감의 색층을 덧쌓는 방법 즉 마띠에르의 강조 등 또한 종이에 스며드는 조선화의 특징을 유화에 구현하고자 하였던 북한 미술가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테크닉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 작품 창작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요소가 '민족적 형식'에서 '인민의 감성'과 '세계화'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기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체육

김정은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2012) 체육을 통해 국방력과 노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육의 과학화와 엘리트 선수양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2년 런던 올림픽 11개 종목에 5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종합 20위를 차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타는 북한어린이


북한의 5월1일 경기장

지하는 성과를 올렸고, 동아시안컵(2013), 인천아시안게임(2014), 브라질 축구 월드컵(2014) 등 메이저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참여하여 대외적으로 체제를 선전하고 대내적으로 체육과업의 성과를 홍보하였다.

체육시설물 건설에도 힘을 기울여 평양 청춘거리에 '태권도 성지'를 준공하고 마식령스키장, 능라인민체육공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평양체육관, 양각도체육촌 등을 건설하였다. 최근 북한은 스키를 "우리 민족이 먼 옛날부터 좋아하는 체육종목의 하나였지만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그 발전이 좌절된 경기"라고 설명하며 스키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양 능라인민유원지에서 수영복을 입고 모래터 배구(비치발리볼)를 즐기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 통일거리 운동센터 등의 헬스장에서 코어근육운동을 즐기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체육정책 발전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체육은 대외관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활용되고 있다. 평양 주재 외교관 체육행사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평양 능라도 지구에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개교하여 외국인도 유학이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대성산 체육단에 속하는 염대옥·김주식 선수가 메라노컵 빙상피겨 금메달 획득하는 등[36]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남북단일팀을 이루어 여자 카누에서 금메달을, 여자농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박명원은 사격, 임은심이 역기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백두산국제피겨축전


2017 동계아시안게임 염대옥 김주식 선수

문화재

북한은 2012년 8월 종전에 채택했던 「문화유물보호법」을 폐지하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채택했다. 특징은 「문화유물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던 비물질문화유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통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민요 '아리랑', 민족체육 '씨름', 민속무용 '연백농악무', 민족음식 '평양랭면', '김치', '막걸리' 등을 국가비물질민족유산으로 등록하였다.[37] 2015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교체하면서 보호대상에 자연유산으로 천연기념물을 포함시켰으며, 비물질민족유산의 세부 구분을 유네스코무형유산협약의 구분과 동일하게 개편하였다.

36. 「노동신문」, 2017. 2. 12.

37. 「노동신문」, 2014. 1. 19.

문화유물보호법(1994)		문화유산보호법(2012)		민족유산보호법(2015)	
문화유물	역사유적	물질 문화유산	역사유적	물질 문화유산	역사유적
			역사유물		역사유물
		비물질 문화유산[38]	국가비물질 문화유산	비물질 문화유산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과 예식 및 명절 행사
	역사유물		지방비물질 문화유산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자연유산[39]	천연기념물

[표 7-6]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률

구분	등재유산	년도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군	2004
	개성 역사유적지구	2013
인류무형문화유산	조선민요 아리랑	2014
	김치 담그기 풍습	2015
	씨름	2018(남북공동등재)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	2017

[표 7-7] 문화유산 관련 북한 등재 유산'

38. 북한은 '비물질문화유산'에 "한 민족이 역사발전과정에 이룩하여 후세에 남긴 정신문화적재부를 의미하며, 일정한 사회적 집단이나 단체, 개인들이 자기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풍습과 생활세태, 지식과 재능, 그와 연관된 수단과 도구들을 포함하여 인간의 정신문화영역에서 창조되고 끊임없이 전달되어 오는 유산"으로 설명한다.(「노동신문」, 2018. 10. 21.)
39. 북한은 "자연유산"에 대해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고 설명한다. (「민주조선」, 2015. 5.9.)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유산의 범주가 바뀐 점, 역사유물과 역사유적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점,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를 포괄적으로 민족유산의 범위로 규정한 점, 법제 정비 이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는 점, 민족유산 발굴에 적극적인 점 등이다.

건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평양의 건축 및 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평양역과 평양순안공항, 원산갈마국제공항의 현대화 공사이다. 또한 김정은은 각종 상업 및 유희시설 건설을 중요시하여 평양만경대유희장, 능라 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등을 건설하였다. 또한 김정은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재건"(2014.6.)하라는 지시에 따라 체육시설에도 관심을 가져 체육 문화시설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정은 시기 건축의 특징은 일상의 건축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대규모 애육원(고아원)이 평양을 비롯해서 남포, 강계, 평성, 사리원, 신의주, 해주 등 전국 각지에 세워졌으며 대동강수산물식당(2018), 린산메기공장(2018), 강원도 양묘장(2018) 등이 지어졌다. 김정은의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지침에 부응하는 건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동강수산물식당


미래과학자거리

도시

김정은 시기에도 평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내각 소속 '수도건설부'를 국방위원회 산하 '수도건설사령부'로 승격시켰고, 김정은은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로 웅장화려하고 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2012.4.27.).

이에 따라 2012년에서 2013년 평양 현대화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만수대아파트 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를 들 수 있다. 평양의 맨해튼(평해튼)이라고 하는 여명거리는 2017년에 완공되었으며, 김일성대학 교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평양시 건설 부문에서는 주택공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과학자주택지를 완공하였다. 또한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한 광복지구에는 연건평 1만 2,700여㎡의 상업중심을 세웠으며, 중국 자본과 손잡고 동평양지구에 대규모 상업시설 건설도 추진 중이다.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도시건설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 지식경제시대를 지향하는 현대 도시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개방과 관광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절

언론출판의 실제

북한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여 언론의 기능을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북한에서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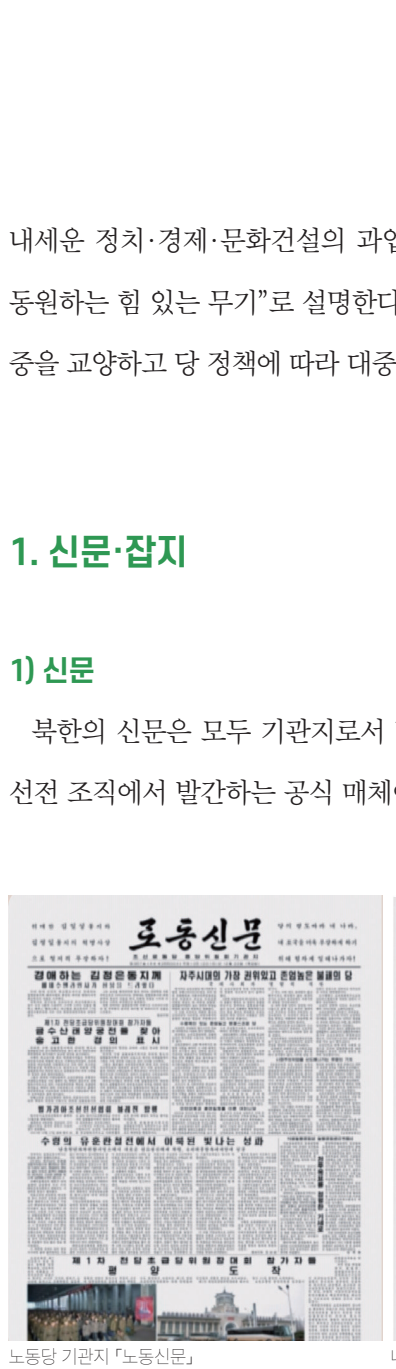
북한은 헌법 제67조에서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때만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40] 북한 언론인의 중요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의 선전과 옹호이다.

북한은 출판물을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 실천을 위해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로 설명한다.[41] 북한 출판물의 중요 기능은 대중을 교양하고 당 정책에 따라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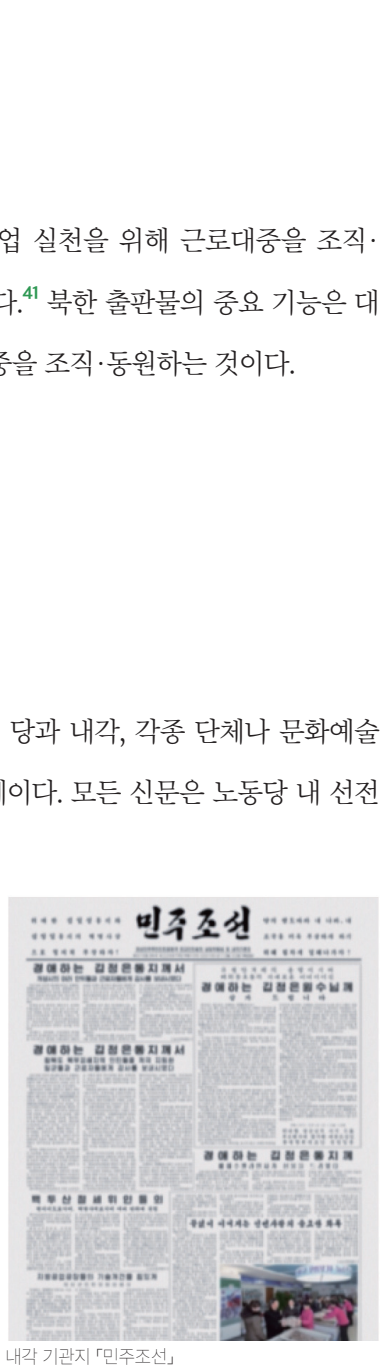
1. 신문·잡지

1) 신문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이다. 모든 신문은 노동당 내 선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40. "1만호 발간기념사설", 「노동신문」, 2001. 12. 1.
41. 「김일성저작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96.

선동부 신문과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된다. 북한 신문의 종류에는 전국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지, 수도시민을 독자로 하는 수도신문, 특정 지방의 근로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로 구분된다.

대표적 중앙지로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의 3대 신문이 있다. 수도신문으로는 평양시 당위원회 기관지인 「평양신문」이, 도별 노동당위원회가 발행하는 12개 정도의 지방지가 있다. 분야별로는 「체육신문」, 「교원신문」, 「철도신문」 등이 있으며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가 있다. 이 중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지방지 등은 일간지이다.

기관별로 발행하는 신문은 격일간이나 주간지로 발행되며 발행 부수도 많지 않다. 신문 기사의 종류에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다루는 사설, 사상적·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 논설, 김일성·김정일 교시나 공동사설을 쉽게 풀이한 해설, 정치문제의 의미를 다루는 정론,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주장하는 논평, 단평, 정세해설, 사론, 단론, 관평, 덕성기사, 영도기사 등 총 29가지가 있다.[42]

42. 「광명백과사전 7: 교육·언어·출판보도」, 백과사전출판사, 2011.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노동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노동신문사가 발행하는 북한의 대표 신문이다.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출발했으며, 1946년 9월 1일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통합하여 현재의 「노동신문」으로 개칭되었다.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 및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론이나 사설 등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기본의무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고,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노동당의 조직 강화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지면의 편집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행적, 정치·교양, 경제, 문화, 남한정세, 국제정세로 이루어진다. 총 6면 내외로 발행되는 조간신문인데 특별한 사건을 다룰 때에는 총 9~10면까지 발행하기도 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기사는 반드시 1면에 실리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이름이나 교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글자보다 눈에 띄도록 크고 진하게 표기한다. 「노동신문」은 철저한 검열을 거쳐 국가기관이나 당원에 한정하여 배포되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다.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이다. 「민주조선」은 1945년 10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 후 1947년 2월 다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기관지로 바뀌었다가 1948년 9월 현재의 위치로 고정되었다. 민주조선의 기능은 「노동신문」의 기본 임무와 비슷하지만 정부(내각) 기관지라는 특성상 편집에서 행정실무적인 문제를 많이 다룬다. 민주조선사에서 대형 판으로 주 6회 발행되며 정권에서 채택한 결정 사항이나 정령·법령 등을 상세하게 취급한다. 편집의 경우 「노동신문」과 같이 1면과 2면의 내용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정치지도 동향과 사진, 이들에게 보내온 외국의 축전이나 편지 내용, 우상화 선전 시·수필 등을 게재하고 있다.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 등은 6면으로 증면된다. 「노동신문」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신문이다.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민주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이름이 바뀌다 1996년 「청년전위」로 개정되었다. 청년전위는 세대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맞춰 청년층에 대한 사상적 단속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일간지이다. 청소년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며,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여 이의 완수를 위한 헌신을 권고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의 충성교육을 임무로 한다. 청년전위의 기사 내용은 「노동신문」에 실린 여러 문제를 청소년과 결부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2) 잡지

북한에서는 전문지와 학술지 모두가 잡지에 속하며, 주요 잡지로는 '근로자', '청년생활', '농업근로자', '조선녀성', '조선문학', '조선예술' 등이 있다.

근로자

근로자는 조선노동당출판사 산하의 '근로자사'에서 월 30만 부씩 발행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이론 기관지이다. 「근로자」라는 제호는 김일성이 지었다고 하며 1946년 10월 월간으로 창간되었다가 이후 월간과 반월간을 반복하다가 1966년 월간으로 정착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 근로단체 간부들과 사회과학 부문, 교육 부문, 양성기관 일꾼들을 기본 독자로 한다. 주요 임무는 당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당의 시책과 그 관철을 위한 방도 제시, 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 공산주의 교양 등이다.

천리마

북한이 발간하는 대표적인 '대중교양 종합잡지'이다. 북한에서 '종합잡지'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자료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편집하는 잡지를 칭한다. 각계 각층 군중들을 독자대상으로 하는 잡지로,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근로대중을 교양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자 제작되고 있다. 「천리마」에는 대중교양 종합잡지의 성격에 맞게, 당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위한 자료들과 국제 정세, 경제건설 소식, 역사, 지리, 과학, 산림, 보건위생, 가정상식과 관련한 지식과 자료들, 연재소설,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 문화 예술,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과 풍속 등 다방면의 글이 실린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청소년 등 광범한 범위의 대중들 전체를 독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1959년 1월 22일에(국립미술출판사 발간) 창간되어, 현재는 문학예술출판사의 천리마사에서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조선녀성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1946년 9월 6일에 창간되어(조선녀성사 발간), 현재는 근로단체출판사에서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조선녀성」은 "녀성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투쟁에 이바지하도록 교양·육성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들의 계몽과 발전을 위한 지침서로 창간되었다. 대중정치잡지의 성격에 맞게 여성 운동 발전과 여성 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방침들을 적극 해설·선전하는 글들과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사업 경험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원하는 여성들의 긍정적 모범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이 방향으로 여성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선문학

「조선문학」은 1946년 '문화전선'으로 창간되어 1947년 「조선문학」으로, 1948년 「문학예술」로 발행되다가 1953년 「조선문학」으로 다시 발행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이다. 주체적인 문예이론과 사상을 널리 선전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작품을 비롯해 고전문학작품, 우수한 시, 소설과 문학평론, 논설 등을 싣는다. 주된 독자는 문학예술전문가와 근로자들이며 월간 발행된다.

조선예술

「조선예술」은 1967년에 창간된 예술 부문 종합잡지로 월간 발행되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지이다. 배포대상은 예술 부문의 전문가, 예술인들, 예술 소조원 및 일반대중이다. 초기에는 연극과 무용 부문의 예술잡지로 출발했지만 1968년 제4호부터 「조선미술」, 「조선영화」, 「조선음악」을 통합하였다. 예술 부문의 작품창작과 창조활동에서 거둔 성과, 경험, 우수한 예술작품을

소개하여 예술인들의 정치실무적인 능력과 예술기량을 높여주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3]

2. 방송

북한에서 방송은 내각 소속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밑에 운영되며, 신문과 같이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한다. 북한의 방송사업 체계는 방송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 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기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앙조직으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이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1999년부터 태국 통신 위성 '타이콤 5'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일부 지역 등에, 2015년부터는 '인텔샛'을 통해 미주 지역에 송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9일부터는 조선중앙TV 위성 방송을 디지털 고화질[HD]로 전환하였다.

43. '조선영화'는 1957년 창간된 영화예술잡지로 영화예술인과 영화애호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1968년 제3호 이후 '조선예술'로 통합되었지만 1984년 다시 '조선영화'로 속간되었다. 최종적으로 1997년 다시 폐간되면서 '조선예술'로 통합되었다.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에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로 서비스하는 대외 방송이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조국개선 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 방송함으로써 출발했다. 이후 1967년 제1중앙방송(대내)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으로 분리됐다가 1972년 제1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으로 개칭되었다.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돼 제2중앙방송으로 출발했으며, 1972년 11월 '평양방송'으로 개칭되었다. 뉴스는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의 보도, 사설, 논평, 논설 기사 등을 인용·보도한다. 1989년부터 개설된 '평양FM 방송'은 대남 선전용 방송으로 북한의 혁명가곡과 베토벤, 브람스, 비발디 등 클래식 음악을 방송한다. 또한 북한에는 '제3방송'으로 불리는 독특한 유선방송이 있다. 북한의 전 가구를 유선방송망으로 연결하여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당국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텔레비전 방송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에는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비롯하여 '만수대텔레비죤', '용남산텔레비죤', '체육텔레비죤' 등이 있다. 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1963년 '평양방송국'으로 개국하여 1970년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74년 김일성 62

회 생일을 계기로 컬러 방송을 시작했으며, 1999년 노동당 창당 54주년을 맞아 위성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시작 시간은 평일(월~토)에는 오후 5시, 일요일과 명절에는 오전 9시부터였는데 2013년 8월부터 평일에는 오후 3시, 일요일과 명절에는 오전 9시로 변경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이며, 특징은 영화나 연극을 녹화하여 방송한다는 점이다. 최근 영화와 스포츠 방영이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를 집중 방송한 바 있다.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체육텔레비죤'이 개국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방송은 체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텔레비전 방송은 전체적으로 선전·선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작품의 소재와 내용에서 남녀 문제, 주민생활, 사회 갈등을 다루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화질에도 주의를 기울여 2015년부터 기존의 표준화질SD 방송을 중단하고 고화질(HD) 방송으로 전환송출을 시작하였으며(4:3 화면 비율), 2017년 12월부터 '중앙TV'를 고화질 풀화면(16:9 화면 비율)으로 송출하였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20여 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보기 및 참고문헌

찾아보기

ㄱ

감량배급 175
강반석혁명학원 240
강성국가 29, 39, 91, 99, 126, 167
강성대국론 37
개성공업지구 192, 195
개성공업지구법 192
경제개발구 160, 195, 196, 197
경제개발구법 195, 196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50, 53, 64, 125, 158
경제발전 5개년 전략 159, 160, 168, 171, 175
경제특구 191, 192, 193, 194, 196, 197
계획경제 12, 16, 17, 18, 19, 21, 85, 182, 185, 186, 187, 192, 201, 202, 209
계획경제체제 12, 85, 187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16, 156
계획지표 156
고급중학교 138, 235, 238, 241, 244, 246, 248, 253, 256, 259
고난의 행군 29, 38, 72, 119, 163, 166, 168, 265, 269, 273, 276, 282
고등교육법 230
고등교육성 233
공산주의 언론관 296
과학교육부 232
교도대 133, 138
교육법 230
교육위원회 232, 233, 249
구상무역 172
9.19 공동성명 88, 107, 145
국방위원회 28, 32, 40, 45, 60, 62, 63, 64, 119, 126, 129, 294
금강산관광지구 192
금강산관광지구법 192
김일성-김정일주의 32, 35, 40, 41, 42, 47, 61, 72, 73, 231, 298, 300
김정일 애국주의 41, 42

ㄴ

나진·선봉 경제특구 191
남포중앙체육학원 239
내각전원회의 42
노농적위군 133, 138
노동당 14, 15, 28, 29, 30, 31, 32, 33, 35, 37, 39, 40, 41, 44, 45, 46, 47, 48, 49, 51, 55, 58, 59, 60, 61, 63, 68, 71, 74, 77, 78, 80, 83, 84, 87, 92, 100, 101, 110, 117, 118, 121, 126, 128, 130, 132, 146, 160, 200, 202, 211, 219, 232, 234, 237, 277, 297, 298, 299, 300, 301, 306
노동당 규약 32, 35, 37, 40, 41, 44, 45, 46, 59, 77, 117, 118, 128
노동당중앙위원회 27, 299
노동당 총비서 73
노동 미사일 148
농민시장 182, 183, 204, 206
농업근로자동맹 61, 202, 212
농업개발구 195

ㄷ

달리기 장사 184
당대표자회 29, 32, 41, 42, 44, 49, 51, 53, 54, 55, 56, 70, 71, 72, 73, 99, 121
당 세포비서 233
당 정치국 44, 52, 54, 55, 68
당중앙군사위원회 29, 44, 51, 53, 55, 56, 58, 59, 70, 71, 74, 126, 128, 130, 132
당중앙위원회 27, 44, 49, 51, 52, 53, 54, 55, 58, 59, 60, 64, 73, 74, 158, 160, 232, 299, 301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6, 44, 53, 54, 64, 73, 74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95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 95
대안의 사업체계 18, 27
대외문화연락위원회 80
돈주 167, 172, 183, 186, 187, 188, 189, 205, 206, 215

ㅁ

마르크스-레닌주의 14, 27, 29, 31, 33, 43, 48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54
만경대혁명학원 240
매대 장사 184
모기장식 개방론 191
물량지표 156, 184
민족화해협의회 61

ㅂ

반둥 10원칙 82
반제국주의 253
반제·반미 공동전선 112
방사포 126, 148, 150
백두산 3대 장군 253
베를린 합의 87
벼랑끝 전술 88
보통교육 235, 237
보통교육법 230
보통교육성 233
북극성-2형 126, 148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107
북·러 공동선언 106
북·러 모스크바 선언 10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5
북·중 정상회담 93, 99, 101
북한이탈주민 156, 172, 188, 213, 215, 222, 223
북한인권결의안 226
북한체제 11, 12, 13, 14, 16, 19, 20, 21, 23, 25, 45, 100, 235
분조관리제 176, 190
분초급 당위원회 58
붉은기사상 36
붉은청년근위대 138
비동맹국 외교 82, 83, 84, 85, 112
비물질문화유산 291

ㅅ

4.6담화 41
4대 경제특구 192
4대 군사노선 55, 56, 120, 121, 124, 149
4대 특구 191
사상생활 지도 49
사회적 소유 154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4, 15, 34, 48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156
사회주의 계획경제 85, 19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30
사회주의 대가정 19, 20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 186
사회주의 우호무역 177
사회주의 소유제도 16, 154, 155, 157
사회주의 체제 26, 38, 39, 59, 118, 229, 234, 287
사회주의헌법 63, 77, 258
산업 연관관계 164, 165, 166, 168
3대혁명소조운동 72
새날혁명학원 240
생활총화 20, 212
선군사상 14, 32, 37, 39, 40, 41, 119, 270
선군정치 29, 32, 35, 37, 38, 39, 60, 117, 118, 119, 217, 275
선군정치론 37
선군혁명 39
선군혁명문학 262
선전선동부 28
소년단 210, 211, 244
소련파 26
소조활동 257
속도전 133
송가 269, 270
수령론 28, 31, 34, 48
수령형상 261, 266, 288
수출가공구 195
스커드 미사일(SCUD) 123, 148
스탈린 격하운동 26, 33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106
시장화 현상 18, 156, 157, 182, 184, 186, 187, 188, 189
식량전매제 18
신의주 특별행정구 192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192
실리외교 78, 79, 85

ㅇ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13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09
연안파 26
5.24 조치 192
5대 혁명연극 268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 34
왕재산경음악단 270
우라늄 농축시설 94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189, 190
우리식 사회주의 21, 31, 35
원산갈마 해양 관광지구 119
유럽연합 88, 89, 109, 110, 111
유선방송 중계소 304
유엔 인권위원회 109, 226
유일사상체계 14, 30, 33, 73, 299, 301
유일영도체계 30, 42, 48
유일지도사상 47, 72, 73
유훈통치 29, 71, 86
6.25전쟁 26, 27, 81, 119, 120, 130, 200, 234, 248, 279
6자회담 94, 95, 99, 124, 145
2.29 합의 94
인민무력부 60
인민무력성 59, 60, 128, 130, 131, 132, 240

인민위원회 25, 28, 40, 66, 233, 299
인민학교 235
1인 독재체제 27, 73
1인 지배체제 33, 74, 200, 275
입사증 155, 214

ㅈ

자력갱생 53, 176
자립경제노선 2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85, 157
자아비판 296
자주외교 84
자주포 12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25, 126, 135, 148
장거리 미사일 발사 94, 105, 112, 144, 181
장마당 17, 173, 183
재판소 65, 67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230, 236, 241, 253
전방위 외교 86, 87
전위대 48, 61
전체주의 14
정무국 53, 55, 72
정무원 66
정전협정 82, 120
정치국 상무위원 44, 54
정치국 상무위원회 52, 53, 54, 55
정치사상교육 20, 231, 244, 252, 253
제1중학교 235, 239, 241
제네바 합의 14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1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106
조선문학예술총동맹 303
조선민족제일주의 274, 276
조선민주여성동맹 61, 202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61, 212
조선신보 18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61, 80
조선중앙방송 262, 304, 305
조선중앙방송위원회 304
조선중앙텔레비죤 305
조선중앙통신 305
조선직업총동맹 61, 80, 202, 212
조선천도교청우당 61
조직지도부 28, 49, 59, 72, 74, 131
종파사건 26
종합시장 16, 17, 18, 155, 185, 186, 187, 189, 204, 215
주체농법 173
주체문예이론 261, 262
주체사상 14, 27, 28, 29, 31, 32, 33, 34, 35, 36, 37, 39, 40, 41, 46, 48, 229, 234, 270, 275, 277, 281, 300, 302
주체 정치경제학 253
주체철학 253
주탄종유 168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157
중·소 국경 분쟁 83
중앙검찰소 63, 67
중앙군사위원회 29, 44, 51, 53, 55, 56, 58, 59, 70, 71, 74, 126, 128, 130, 132
중앙인민위원회 28, 40, 66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7, 18, 201, 209
중앙재판소 65, 67
지방인민재판소 67
직통생 250
집단주의 19, 202, 203, 206, 210, 253, 259, 276
집단주의 원칙 19
집단체조 272, 273

ㅊ

차판 장사 184
천리마운동 27, 72, 276
천안함 폭침 사건 192
철도신문 298
청년동맹 210, 211, 246, 298, 300
청년전위 296, 297, 299
청산리방법 27
청산리정신 27
체육의 날 276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217, 218, 255
초급 당위원회 58
초급중학교 235, 244, 245, 246, 256, 259
초모대상자 139
총정치국 59, 60, 128, 129, 130, 131, 132
총참모부 60, 122, 130, 131, 132, 133, 151
최고인민회의 22, 26, 28, 29, 44, 60, 61, 62, 63, 64, 65, 66, 67, 72, 73, 74, 79, 80, 98, 110, 126, 159, 168, 230, 238, 29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63, 65, 66, 80, 159, 299

추모문학 283
7.1 조치 186, 192, 263

ㅌ

특별재판소 67

ㅍ

평양방송 305
평양신문 298
평양외국어대학 254
평양외국어학원 239, 240
평양음악학원 239
평양학생소년궁전 254
평화협정 79, 86, 93
폐연료봉 재처리 94
포전담당책임제 190

ㅎ

학생소년궁전 254, 257
한반도 종단철도(TKR) 106
혁명연극 267, 268, 285
혁명적 낙관주의 275
혁명적 수령관 31, 34, 282, 294
혁명적 수령론 28
혁명화 260
협동적 소유 155, 201, 203
호위사령부 132
화선입당 211
화폐개혁 18, 187
화학무기 149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193
희천발전소 170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각 연도
, 「2000 북한개요」, 1999.
, 「2004 북한개요」, 2003.
,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비교」, 2006.
, 「남북한 교육 비교」, 2006.
,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교류 전망」, 2006.
, 「북한의 대남전략」, 2010.
,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1.
,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11.
,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2011.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2.
,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2012.
, 「북한 지식 사전」, 2016.
, 「북한의 양면성」, 2013.
,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2013.
,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2015.
,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5.
, 「북한권력기구도」, 201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 연도
, 「월간북한동향」, 각 연도
, 「통일정책연구」, 각 연도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각 연도
,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007.

, 「북핵문제의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2009.
, 「2009 북한개요」, 2009.
,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2011.
,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2.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 「201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201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각 연도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계간), 각 연도
, 「2014 국제정세전망」, 2014.
국방부, 「국방백서」, 격 연도
, 「한반도 군비통제」, 2008.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계간), 각 연도
,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군」, 2008.
,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2008.
,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2009.
,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1.
국방대학교, 「정보시대 전쟁의 이해」, 2004.
, 「2014년도 안보정세 전망」, 2014.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각 연도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 연도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년~2002년」, 2003.
, 「북한총람, 2003년~2010년」, 2011.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 연도
유엔인구기금(UNFPA),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 조사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6.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2016.
윤대규 외, 「동북아의 변화 동향 평가 및 전망」, KDI정책대학원, 2015.
북한법연구회, 「최신 북한법령집」, 2017.12.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 2014.
홍민·차문석,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통일연구원, 2016.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김성경, "북한 '사이(in-between)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 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Eric Fish, "Chinese Youth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Changing Behaviors and Values", 「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2015. 6. 23.) 자료집, 2015.
곽인옥·임을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2016년 코리아글로벌포럼(KGF) 자료집」, 2016.
정은이, "북한 도시노동자의 식량조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소(燒)토지 경작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2017.
장용석 외, 「북한 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0

권 제3호, 2015.
장용훈, “북한 김정은의 각별한 ‘스포츠 사랑’”, 「MIDAS」 2016년 3월호.
김현진, “세계 예방접종 주간’ 북한 예방접종 실태”, 「VOA Korea」, 2016. 4. 29.
최지영,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현대북한연구」 20권 제1호, 2017.
,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민기채, “북한 노인의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2016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3」, 2016.
정근식 외, 「북한 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청경호 외, 「북한 사회변동 2018: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7: 교육·언어·출판보도」, 2011.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10권」, 1980.
, 「김일성저작집 5」, 1980.
, 「김정일 선집 10권」, 199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예술년감」, 199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2004.
, 「경제사전 2」, 1985.
,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 201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사전 제2권」, 1970.
, 「백과전서 제3권」, 1983.

MEMO

2020
북한이해

발행처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EL 02)901-7164 FAX 02)901-7029
발행일 2019년 12월
디자인 (주)메디치미디어 02)735-3308
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쇄사업단 031)906-7735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